ISSN 1229-3598

제 66권 제 4호 | 2023. 12

국방연구

-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또는 협상의 선택: 게임이론적 분석 _ 변정욱, 이준배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제약요인 _ 고상두
-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 지전략으로서 해양자원과 안보의 고려 _ 박창건, 채 첩
- 북한 핵 위협 평가와 핵무장 정책선호 _ 윤광일
- 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_ 부형욱
- 한국군의 지상작전 발전방안 연구: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_ 이강경
- 한국군 장병의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_ 김현우

RINSA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제 66권 제 4호 | 2023. 12

국방연구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RINSA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는 한국 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본지는 연4회 발간되는 심사제 학술논문지입니다.

국 방 연 구

제66권 제4호

인쇄 2023년 12월 30일
발행 2023년 12월 30일
발행인 : 임 기 훈 (국방대학교 총장)
편집인 : 박 영 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편집위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재호 (해군사관학교)
박성용 (전북대학교) 송태은 (국립외교원)
신범식 (서울대학교) 신성호 (서울대학교)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안경모 (국방대학교)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윤태성 (한국과학기술원)
임은정 (공주대학교)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구연 (강원대학교)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집간사
장광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행처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전화 : (041)831-6461
E-mail : rinsakj@kndu.ac.kr
인쇄 : 화신문화주식회사 (02)2277-0624

ISSN 1229-3598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제 66권 제4호 | 2023 12

국방연구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또는 협상의 선택: 게임이론적 분석
_ **변정욱, 이준배** 1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제약요인 _ **고상두** 23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 지전략으로서 해양자원과 안보의 고려
_ **박창건, 채 첩** 41

북한 핵 위협 평가와 핵무장 정책선호 _ **윤광일** 73

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_ **부형욱** 109

한국군의 지상작전 발전방안 연구: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_ **이강경** 141

한국군 장병의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_ **김현우** 171

저자약력 195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ume 66, Number 4 2023 12

Choice of War or Negotiation as a Means of Conflict Resolution: A Game Theoretic Analysis _ **Byun, Jeong Wook & Lee, Joonbae** 1

Constraints on Russia's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Ukraine War _ **Sangtu Ko** 23

China's Continental Shelf Policy in the Chin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Considering Maritime Resources and Security as Geostrategy _ **Chang-Gun Park & Cai Jie** 41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Policies _ **Yoon, Kwang-Il** 73

A Suggestion on Response Initiative against North Korea's Advancement of Nuclear Threat: Korean nuclear sharing option and its use in nuclear negotiations _ **Boo, Hyeong-Wook** 109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for Korean military ground operation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U.S. Army's revised doctrine of MDOs _ **Lee, Kangkyong** 141

The Determinants of Willingness to Take Remedy Action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_ **Hyun Woo Kim** 171

Contriutors 195

국방연구 2023년 12월
제66권 제4호, pp. 1-22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또는 협상의 선택: 게임이론적 분석

변정욱*, 이준배**

Ⅰ. 서론
Ⅱ. 전쟁 이론에 관한 선행 연구
Ⅲ. 전쟁 모형 분석
Ⅳ. 맺음말: 분석결과의 함의와 시사점

요 약

전쟁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상호 간의 갈등을 무력 충돌을 통해 승패를 가린 후, 승자가 패자에게 자신의 목적을 강압하여 해결하는 수단이다. 전쟁의 발생 여부와 결과는 당사국들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게임이론으로 분석이 가능한 현상이다. 본 연구는 국가들 간의 갈등 해소 방법으로서의 전쟁 또는 협상의 선택을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Chang, et al.(2015)의 모형을 현실 전쟁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전쟁 당사자들의 합리성에 기초한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협상 또는 전쟁의 발발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로는 Chang, et al.(2015)과 달리 전쟁 또는 협상은 전쟁 피해의 군비투자에 대한 내생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발생 가능하며, 전쟁의 피해가 클수록 전쟁보다는 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또한 전쟁 발생 시 승리 확률과 전쟁 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균형 군비투자는 협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쟁의 피해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반면,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는 전쟁의 피해와 반비례하게 정해짐을 보였다.

핵심어: 전쟁, 협상, 군비투자, 전략적 선택, 게임이론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과 교수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Ⅰ. 서론

전쟁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이 상호 간의 갈등을 무력 충돌을 통해 승패를 가린 후, 승자가 패자에게 자신의 목적을 강압하여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유사 이래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쟁 당사자 집단간의 종교, 문명과 문화 충돌과 반목, 경제적 불균형, 지도자의 상대방에 대한 증오, 시기 등 심리적 원인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브에노 데 메스키타, 2014/2015, pp.186-187) 이상의 주장들은 각각 특정 전쟁 또는 전쟁의 일반적 원인으로서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전쟁의 원인에 대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으로서는 부족하다. 특히 현대와 같이 정보의 공개와 확산이 빠름에 따라 문명과 문화의 세계적 교류가 활발하고, 지도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정치적 평가와 견제가 강화된 사회에서는 종교, 문명과 문화 충돌과 반목, 지도자의 심리적 원인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들이 전쟁의 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쟁의 결과, 보상, 비용 등에 대한 예측에 기초한 고도의 합리적이고 전략적 판단이 전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의 발발 여부와 결과는 자신과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과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참여자들의 보상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게임이론으로 분석이 가능한 현상이다. 본 연구는 잠재적 전쟁 당사국들간의 대치 상황을 게임이론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전쟁 당사자들의 합리성에 기초한 전략적 판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Chang, et al.(2015)의 모형을 현실 전쟁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후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 결과는 Chang, et al.(2015)과 달리 전쟁과 협상은 전쟁 피해의 외생성 또는 내생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발생 가능하며, 전쟁의 피해가 클수록 전쟁보다는 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또한 협상 발생 시 군비투자는 전쟁의 피해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반면, 전쟁 발발 시 군비투자는 전쟁의 피해와 반비례함을 보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전쟁 이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Chang, et al.(2015)의 모형을 개선한 전쟁 모형을 제시하고 균형을 도출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및 한계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며 글을 맺는다.

Ⅱ. 전쟁 이론에 관한 선행 연구

전쟁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정치학 또는 군사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브에노 데 메스키타(2014/2015, pp.186-193)는 전쟁 결과 예측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 또는 불확실성(양측 모두 전쟁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믿음), 약속의 문제(상대가 협상을 통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이슈의 불가분성(회피와 타협이 불가능한 승자독식 대치) 등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한다. 또한 전쟁의 원인에 관한 두 가지 주요 구조적 이론으로 신현실주의와 세력전이이론을 들고 두 이론이 역사적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는 점, 논리적 결함, 언제,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한계점을 지적하고(브에노 데 메스키타, 2014/2015, pp.194-224) 전쟁의 원인을 국내정치와 정치지도자의 이익(권력 유지)과 관련된 전략적 선택으로 설명한다.[1)]

전쟁(또는 군사분쟁)을 구체적인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한 연구로 박성훈(2017), 변정욱·조남석(2018), Chang, et al.(2015), Smith et al.(2014), Chang and Luo(2013), Shaffer(2006)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전쟁을 모형화할 때 갈등 당사자들이 비용이 수반되는 군비투자를 통해 군사력에 투자를 하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각 당사자의 승리 확률은 각자의 군사력의 상대적 비율에 비례하며,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전쟁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성을 가정한다.[2)] 또한 변정욱·조남석(2018), 박성훈(2017)과 Shaffer(2006)를 제외한 경우 갈등의 해소 방법으로 전쟁 이외에도 협상이 가능하며 협상을 선택할 경우 전쟁에 따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각 당사자의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에 비례하여 보상을 나누게 된다고 가정한다.

Smith, et al.(2014)은 위 가정들에 기초해 당사자들이 모두 협상을 선택할 경우에만 협상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발발한다고 가정한 후 갈등 당사자들의 주어진 군비투자에 대해 전쟁의 피해가 군비투자와 무관하게 결정될 경우와 군비투자에 비례할 경우로 나

---

1) 이러한 예로, 기존에 공표한 강경한 대외정책 철회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청중비용 이론, 권력 유지에 필요한 지배연합인 선출인단의 크기에 따라 전쟁 수행의 동기와 노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출인단이론, 실패한 국내정책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외적 모험으로 전쟁을 선택한다는 전환전쟁 가설, 군사적으로 패배해 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했을 때 행운을 바라며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시도하는 부활가설, 약자가 공격 없이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상대가 대항하지 않을 것에 기대를 걸고 공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강한 상대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는 평화비둘기 가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브에노 데 메스키타, 2014/2015, pp.225-263를 참조.

2) 전쟁에 투입된 무기와 병력에 비례하여 전쟁의 인적·물적 피해도 증가하며, 이러한 피해는 전쟁 발생 지역과 병력을 투입 국가 모두에게 발생한다. 이러한 직접적 피해 이외에도 전쟁의 피해는 수년간 지속되어 막대한 경제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전쟁의 피해를 경제적으로 추정한 연구로 Bozzoli, et al.(2010)을 참조할 수 있다.

눈 후 각 경우의 전쟁 시와 협상 시의 갈등 당사자들의 기대보상을 비교하였다. 이로부터 협상이 전쟁보다 기대보상이 클 경우 협상의 가능성이 크며 반대의 경우 전쟁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모형은 군비투자를 각자의 보상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선택으로 보지 않고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 점에서 한계가 있다. Chang, et al.(2015)은 Smith, et al.(2014)의 모형에서 전쟁 시와 협상 시의 갈등 당사자들의 군비투자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보상을 극대화하도록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해 균형을 구하여 전쟁 시와 협상 시의 갈등 당사자들의 균형 보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쟁의 피해가 군비투자와 무관하게 결정될 경우 항상 협상의 보상이 크므로 전쟁이 선택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전쟁의 피해가 군비투자에 비례할 경우 전쟁과 협상의 보상이 동일하므로 후자의 경우 협상의 가능성이 크다는 Smith, et al.(2014)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Chang and Luo(2013)는 Smith, et al.(2014), Chang, et al.(2015)과 달리 단기 모형을 통해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모형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와 협상을 선택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각각의 경우의 군비투자 균형을 구하고 균형 보상들을 단순 비교하여 균형보상이 높은 경우가 선택될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 또는 협상의 결정은 상대와의 협상과 전쟁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군비투자에 대한 결정도 전쟁 또는 협상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정은 한계가 있다.

Shaffer(2006)는 전쟁과 같이 경합에 따르는 노력이 갈등 당사자들의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력이 영향을 미치는 형태에 따라 균형 노력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이 모형은 전쟁의 경우만을 가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전쟁 또는 협상 간의 선택에 대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박성훈(2017)은 Shaffer(2006)의 모형을 갈등 당사자들의 군사력 수준의 선택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하나 또는 두 당사자들의 기대보상이 음일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두 당사국 모두 기대보상이 음이 아닐 경우에만 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발생은 일방의 의사결정만으로도 발생 가능하므로 한 당사자의 기대보상이 양이면 상대방의 기대보상이 음이라도 충분히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정은 한계가 있다.

변정욱·조남석(2018)은 Shaffer(2006)의 모형을 변형하여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두 당사국이 전쟁 발발 가능성 속에서 동태적으로 군축을 하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모형은 전쟁의 대안으로 협상을 통한 갈등의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쟁과 협상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전쟁 또는 협상을 전제로 하고 군비투자를 결정한다고 가정한 Chang, et

al.(2015), Chang and Luo(2013)와 달리 Chang, et al.(2015)의 모형을 수정하여 갈등 당사자가 군비투자를 한 상황에서 갈등해소의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할 것인지 협상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Smith, et. al(2014)에서와 같이 갈등 당사자들 중 하나라도 전쟁을 선택하면 전쟁이 발발한다고 가정하여 군비투자와 이에 기반한 두 국가간의 전쟁 또는 협상의 선택을 분석한다.

Ⅲ. 전쟁 모형 분석

Chang, et al.(2015)의 모형을 다음과 같은 2단계 모형으로 수정한다. 두 갈등 당사국들인 국가 1과 국가 2는 크기가 Y인 총보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경합중이다. 1단계에 국가 i(=1,2)가 전쟁 발발 시 전쟁기간 동안 투입되는 자신의 무력 투입량을 의미하는 군비투자 비용 $a_i > 0$를 변경 불가능하게 확정하며(commit), 이러한 결정은 두 당사국 모두가 알 수 있는 common knowledge라 가정한다. 2단계에 각국은 '침략' 또는 '협상' 중 하나를 선택하며, 두 국가 모두 '협상'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발발한다고 가정한다.[3] 둘이 모두 '협상'을 선택하면 매기 총보상 Y는 각국의 상대적 군사력 비율 $\frac{a_i}{a_i + a_j}$대로 나누어 갖으며, 이러한 결정은 n기 동안 유효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하며 각국의 상대적 군사력 비율 $\frac{a_i}{a_i + a_j}$에 따라 각국의 승리 확률이 결정되며, 승자는 전쟁의 피해로 감소한 총보상을 n기 동안 독식한다고 가정한다. 각국은 위험 중립적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은 전쟁에 따른 피해가 각국의 군비투자와 무관하게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와 군비투자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균형 군비투자와 전쟁의 발발 여부를 분석한다.

1. 전쟁의 피해가 군비투자와 무관하게 외생적인 경우

2단계에 협상이 발생할 경우와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 i의 기대보상 EV_i^N, EV_i^W를

3) 전쟁은 전쟁 당사국들 모두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당사국의 일방적 선전포고에 의해 발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방의 전쟁 선택만으로도 전쟁이 발발하며, 협상은 당사국들 모두가 선택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Chang, et al.(2015, p.63)의 모형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V_i^N = n\left[Y\left(\frac{a_i}{a_i + a_j}\right) - a_i \right] \quad \text{for} \quad n \in (1, \infty), \tag{1}$$

$$EV_i^W = n\left[Y[1-\phi]\left(\frac{a_i}{a_i + a_j}\right) \right] - a_i \quad \text{for} \quad n \in (1, \infty), \tag{2}$$

식 (1)은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n기 동안의 기대보상의 합으로 i국은 협상에 따라 매기 a_i만큼 군비투자 비용을 지출하고 총보상 Y를 $\frac{a_i}{a_i + a_j}$ 비율만큼 가져가고 이러한 분배가 n기 동안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식 (2)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n기 동안의 기대보상의 합으로 전쟁은 각국이 한기 동안 a_i, a_j만큼 군비투자 비용을 지출하여 이루어지며 i국은 $\frac{a_i}{a_i + a_j}$의 확률로 전쟁에 승리하여 전쟁의 피해로 인해 감소된 총보상 $Y[1-\phi]$, $\phi \in (0,1)$를 n기 동안 독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침략 또는 협상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정규형 게임으로 표현하고 Nash 균형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단계 침략 또는 협상의 결정(전쟁의 피해가 외생적인 경우)

		국가 j	
		협상	침략
국가 i	협상	$EV_i^N,\ EV_j^N$	$EV_i^W,\ EV_j^W$
	침략	$EV_i^W,\ EV_j^W$	$EV_i^W,\ EV_j^W$

식 (1), (2)로부터 $EV_i^N(a_i, a_j) - EV_i^W(a_i, a_j) = n\phi Y\left(\frac{a_i}{a_i + a_j}\right) - (n-1)a_i$이므로 $a_i \leq \frac{n\phi Y}{n-1} - a_j \Leftrightarrow EV_i^N(a_i, a_j) \geq EV_i^W(a_i, a_j)$이며 $a_i > \frac{n\phi Y}{n-1} - a_j \Leftrightarrow EV_i^N(a_i, a_j) < EV_i^W(a_i, a_j)$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Nash 균형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 1. 2단계 정규형 게임에서 (i) $a_i \leq \frac{n\phi Y}{n-1} - a_j,\ a_j \leq \frac{n\phi Y}{n-1} - a_i,\ (i \neq j)$인 경우

(i) Nash 균형은 두 국가 모두 협상을 선택하는 균형과 두 국가 모두 침략을 선택하는 균형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전자만 허용가능한(admissible) 균형이며 후자는 허용가능한 균형이 아니다. (ii) 그 밖의 경우 한 국가는 협상, 다른 국가는 침략을 선택하는 것 또는 두 국가 모두 침략을 선택하는 것이 Nash 균형이 된다.

증명: (i) 두 국가 모두 협상을 선택하는 (협상,협상)이 Nash 균형이 되려면 두 국가 모두 협상의 기대보상이 전쟁의 기대보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런데 식 (1), (2)로부터 $EV_i^N(a_i,a_j) - EV_i^W(a_i,a_j) = n\phi Y\left(\frac{a_i}{a_i+a_j}\right) - (n-1)a_i$이므로

$EV_i^N(a_i,a_j) \geq EV_i^W(a_i,a_j) \Leftrightarrow a_i \leq \frac{n\phi Y}{n-1} - a_j$이다. 한편, 상대국이 침략을 선택할 경우 협상과 침략 무엇을 선택하든 전쟁발발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두 국가 모두 침략을 선택하는 것은 상대의 선택(침략)에 대한 최선 반응이 되므로 두 국가 모두 침략을 선택하는 것 역시 Nash 균형이 된다. 하지만 침략은 상대방이 협상 선택 시 협상의 선택보다 열등한 약열등전략이므로 두 국가 모두 침략을 선택하는 Nash 균형은 약열등 전략으로 구성된 균형으로서 허용 가능한(admissible) 균형이 되지 못한다.[4)]

(ii) $a_i > \frac{n\phi Y}{n-1} - a_j,\ a_j \leq \frac{n\phi Y}{n-1} - a_i$인 경우 순수전략 Nash 균형은 i국은 침략, j국은 협상을 선택하는 (침략,협상)과 두 국가 모두 침략을 선택하는 (침략,침략)이 된다. 뒤의 부등식이 등호로 성립될 경우에는 i국이 협상, j국은 침략을 선택하는 (협상,침략)도 Nash 균형이 된다. $a_i > \frac{n\phi Y}{n-1} - a_j,\ a_j > \frac{n\phi Y}{n-1} - a_i$인 경우도 순수전략 Nash 균형이 (침략, 협상), (협상, 침략), (침략, 침략)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단계 정규형(normal form) 게임에서 $a_i \leq \frac{n\phi Y}{n-1} - a_j,\ a_j \leq \frac{n\phi Y}{n-1} - a_i$ 인 경우 두 국가 모두 협상을 선택하는 균형만 허용 가능한(admissible) 균형으로 고려한다.

지금부터는 2단계의 Nash 균형 결과로부터 역진귀납(backward induction)을 통해 1단계의 국가 i의 최적 군비투자 비용의 결정을 살펴보자. 위의 결과로부터 $a_i \leq \frac{n\phi Y}{n-1} - a_j$,

4) Nash 균형의 허용 가능성(admissibility)에 관한 내용은 Nachbar(2022), pp.1-2.를 참조.

$a_j \leq \frac{n\phi Y}{n-1} - a_i$인 경우, 즉 $a_i + a_j \leq \frac{n\phi Y}{n-1}$인 경우에만 협상이 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하므로 a_i, a_j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의 직선

$$a_i = \frac{n\phi Y}{n-1} - a_j \tag{3}$$

의 아래 부분에서는 협상이, 위 부분에서는 전쟁이 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협상이 발생하는 경우와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의 1단계의 최적 군비투자는 각각 식 (1)과 (2)를 극대화하는 1계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_i^N(a_j) \equiv \arg max_{a_i} EV_i^N = \sqrt{a_j Y} - a_j \tag{4}$$

$$a_i^W(a_j) \equiv \arg max_{a_i} EV_i^W = \sqrt{n(1-\phi)a_j Y} - a_j \tag{5}$$

따라서 2단계의 Nash 균형 결과로부터 역진귀납법을 통해 도출한 i국의 1단계 군비투자 최선반응함수는 다음과 같다.

정리 2. 1단계 i국의 최선반응함수는 다음과 같다.

(i) $(n-1)/n > \phi$인 경우 $a_j < \frac{\phi^2 n^2 Y}{(n-1)^2}$이면 $a_i(a_j) = \sqrt{a_j Y} - a_j$, $a_j \geq \frac{\phi^2 n^2 Y}{(n-1)^2}$이면 $a_i(a_j) = \sqrt{n(1-\phi)a_j Y} - a_j$이다.

(ii) $(n-1)/n \leq \phi$인 경우 $a_j \leq \frac{\phi^2 n^2 Y}{(n-1)^2}$이면 $a_i(a_j) = \sqrt{a_j Y} - a_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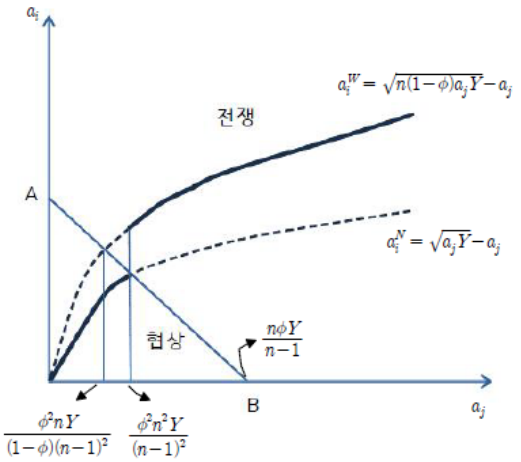
$\frac{\phi^2 n^2 Y}{(n-1)^2} < a_i \leq \frac{\phi^2 n Y}{(1-\phi)(n-1)^2}$이면 $a_i(a_j) = -a_j + \frac{\phi n Y}{n-1}$,

$a_j > \frac{\phi^2 n Y}{(1-\phi)(n-1)^2}$이면 $a_i(a_j) = \sqrt{n(1-\phi)a_j Y} - a_j$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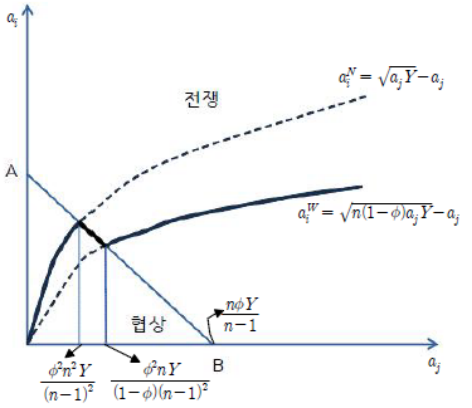
증명: 〈부록 1〉 참조.

i국의 최선반응곡선을 a_i, a_j를 축으로 하는 2차원 평면에 표시하면 ϕ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그림 1〉 또는 〈그림 2〉와 같다.[5)]

〈그림 1〉 i국의 최적 군비투자 반응곡선: $(n-1)/n > \phi$인 경우



〈그림 2〉 i국의 최적 군비투자 반응곡선: $(n-1)/n \leq \phi$인 경우



5) 〈그림 1〉과 〈그림 2〉에서 직선 AB는 $a_i + a_j = n\phi Y/(n-1)$인 선으로 이를 경계로 2단계에 좌측 영역은 협상, 우측 영역은 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반응곡선의 실선은 2단계의 협상 또는 전쟁 결과를 고려한 최선반응곡선이며, 점선은 2단계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협상 발생 시 전쟁 또는 전쟁 발생 시 협상)의 최선반응곡선으로 무의미한 부분이다. $(n-1)/n = \phi$인 경우는 〈그림 2〉에서 $a_i^W = a_i^N$인 경우로 두 반응곡선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국가 i, j의 1단계의 Nash 균형 군비투자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 두 국가의 최선반응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결정되며, 교차점이 속한 영역에 따라 2단계에 침략 또는 협상이 결정된다. 정리 2로부터 하부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이하 SPNE)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 3. 전쟁의 피해가 군비투자와 무관하게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i) $\frac{(n-1)\left(\sqrt{n^2+14n+1}-n+1\right)}{8n} \le \phi < \frac{n-1}{n}$이면 국가 i, j가 1단계에 $a_i = a_j = \frac{Y}{4}$를 선택하고 2단계에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 SPNE 이다.

(ii) $\frac{n-1}{2n} \le \phi < \frac{(n-1)\left(\sqrt{n^2+14n+1}-n+1\right)}{8n}$이면 국가 i, j가 1단계에 $a_i = a_j = \frac{n(1-\phi)Y}{4}$를 선택하고 2단계에 '침략'을 선택하는 SPNE과 1단계에 $a_{i,j} = a_{j,i} = \frac{Y}{4}$를 선택하고 2단계에 '협상'을 선택하는 SPNE이 존재한다.

(iii) $\phi < \frac{n-1}{2n}$이면 국가 i, j가 1단계에 $a_{i,j} = a_{j,i} = \frac{n(1-\phi)Y}{4}$를 선택하고 2단계에 '침략'을 선택하는 것이 SPNE 이다.

(iv) $\phi \ge \frac{n-1}{n}$이면 국가 i, j가 1단계에 $a_{i,j} = a_{j,i} = \frac{Y}{4}$를 선택하고 2단계에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 SPNE 이다.

증명: 〈부록 2〉 참조.

2. 전쟁의 피해가 군비투자와 비례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전쟁의 피해가 양국의 군비투자에 비례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전쟁의 기대 보수를 Chang, et al.(2015, p.64)의 모형과 동일하게 식 (3)과 같이 설정한다.

$$EV_i^W = n\left[Y[1-\phi \cdot (a_i+a_j)]\left(\frac{a_i}{a_i+a_j}\right)\right] - a_i \qquad (6)$$

전쟁의 피해 정도가 군비투자와 무관하게 ϕ인 식 (2)와 달리 식 (6)에서의 전쟁의 피해는 $\phi(a_i+a_j)$로 양국의 군비투자의 합 a_i+a_j에 비례하여 전쟁의 피해가 증가한다. 2단계에서

침략 또는 협상의 결정은 〈표 1〉의 정규형 게임과 동일하다.

정리 4. 2단계 Nash 균형은 $\phi \geq \frac{n-1}{nY}$인 경우 두 국가 모두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가능한(admissible) Nash 균형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한 국가는 '침략'을, 나머지 국가는 '침략' 또는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 Nash 균형이다. 전자의 경우에만 Nash 균형의 결과로서 협상, 나머지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한다.

증명: (1), (6)으로부터 $EV_i^N - EV_i^W = (n\phi Y - n + 1)a_i$이므로 $\phi \geq \frac{n-1}{nY}$이면 $EV_i^N \geq EV_i^W$이다. 이는 상대국의 '협상' 선택에 대해 자국도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반응이 됨을 의미하므로 Nash 균형이 된다. 한편 각 국 모두 '침략'의 선택은 약열등 전략이므로 두 국가 모두 '침략'을 선택하는 Nash 균형은 허용 가능한(admissible) 균형이 아니다.

반면 $\phi < \frac{n-1}{nY}$이 성립하면 $EV_i^N(a_i, a_j) < EV_i^W(a_i, a_j)$가 성립하므로 상대국이 '협상'을 선택할 경우 '침략'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반응이 되므로 두 국가 모두 '협상'을 선택하는 것은 Nash 균형이 될 수 없다. 또한 한 국가의 '침략' 선택에 대해 다른 국간는 '침략'을 선택하는 것과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 무차별하므로 한 국가는 '침략'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다른 국가는 '침략'을 선택하는 것은 Nash 균형 조건을 충족하며, '협상'의 선택 역시 앞의 논거에 의해 Nash 균형 조건을 충족한다.

지금부터는 2단계의 허용 가능한 Nash 균형 결과로부터 역진귀납(backward induction)을 통해 1단계의 국가 i의 최적 군비투자 비용의 결정을 살펴보자. 정리 4로부터 $\phi \geq \frac{n-1}{nY}$인 경우에는 2단계에 협상이 발생하므로 1단계에서의 최선반응곡선은 협상의 기대보상 식 (1)의 1계조건으로부터 도출되며, 1단계의 Nash 균형 군비투자는 두 국가의 최선반응곡선이 교차하는 곳이 된다. 그런데 두 국가의 최선반응곡선은 서로 대칭적이므로 이러한 곳은 원점을 지나는 45° 직선과 한 국가의 최선반응곡선의 교차점인 $a_i = a_j = \frac{Y}{4}$가 된다. 반면, $\phi < \frac{n-1}{nY}$인 경우에는 2단계에 전쟁이 발발하므로 1단계에서의 최선반응식은 전쟁의 기대보상 식 (6)의 1계조건 $\frac{nYa_j}{(a_i + a_j)^2} - \phi nY - 1 = 0$으로부터[6]

6) 극대화 2계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다.

$a_i(a_j) = \sqrt{\frac{nYa_j}{\phi nY+1}} - a_j$로 도출되며, 1단계의 Nash 균형 군비투자는 두 국가의 최선반응곡선이 교차하는 곳이 되며, 이러한 곳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점을 지나는 45° 직선과 한 국가의 최선반응곡선의 교차점인 $a_i = a_j = \frac{nY}{4(1+nY\phi)}$가 된다.

정리 5. 전쟁의 피해가 양국의 군비투자의 합에 비례하는 경우

(i) $\phi \geq \frac{n-1}{nY}$이면 국가 1과 국가 2가 1단계에 $a_i = a_j = \frac{Y}{4}$를 선택하고 2단계에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 SPNE 이다.

(ii) $\phi < \frac{n-1}{nY}$이면 국가 1과 국가 2가 1단계에 $a_i = a_j = \frac{nY}{4(1+nY\phi)}$를 선택하고 2단계에 침략을 선택하는 것이 SPNE 이다.

Ⅳ. 맺음말: 분석결과의 함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Chang, et al.(2015)의 모형을 바탕으로 하되 전쟁 또는 협상이 전제(결정)된 상태에서 군비투자를 하는 Chang, et al.(2015)의 모형과 달리 갈등 당사국들이 군비투자를 수행한 후 그러한 군비투자 하에서 침략 또는 협상을 선택하되 두 국가 모두 협상을 선택한 경우에만 협상이 발생하며 두 국가 중 한 국가만 침략을 선택하더라도 전쟁이 발발하는 것으로 전쟁의 모형을 현실적으로 변형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Chang, et al.(2015)의 결론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첫째, 전쟁의 피해가 외생적인 경우 Chang, et al.(2015, p.64)의 Proposition 1에 의하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나 본 모형의 경우에는 정리 2의 (ii), (iii)의 경우처럼 전쟁 피해의 정도가 충분히 낮으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둘째, 전쟁의 피해가 내생적인 경우 Chang, et al.(2015, p.64)은 Proposition 3에 의하면 갈등 당사국들에게 전쟁과 협상이 무차별하였으나 본 모형의 경우에는 정리 3의 (i)의 경우처럼 전쟁의 피해가 충분히 크면 협상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발발함을 보였다. 본 모형에 의하면 전쟁과 협상은 전쟁 피해의 외생성 또는 내생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발생 가능하며, 전쟁의 피해가 클수록 전쟁보다는 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쟁의 피해가 클수록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보상이 감소하므로 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갈등의 해결이 선호됨을 시사한다.

이는 상호 확증파괴 능력이 있는 경우 전쟁 발생 시 피해가 두려워 전쟁이 억제된다는 Schelling(1960)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이론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협상 발생 시 군비투자는 전쟁의 피해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반면, 전쟁 발발 시 군비투자는 전쟁의 피해와 반비례하게 정해짐을 볼 수 있다. 전자는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전쟁의 피해와 무관하므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쟁의 피해와 무관하게 균형 군비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며, 후자는 전쟁의 피해가 클수록 군비투자 증가에 따른 전쟁 피해의 증가가 승리 확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의 증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는 사회현상을 모형화하여 분석하는 대다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정과 전쟁에 대비한 투자, 승리의 확률과 보상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인들을 정량적 개념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현실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로부터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ohnson(2014)이 지적했듯이 정치 현상에 대한 모형의 적용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핵심 요인들을 중심으로 갈등 상황을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적 탐구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7]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정량적인 제안과 전쟁 또는 협상의 예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군비투자 결정과 전쟁 또는 협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미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국의 군비투자는 상대국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방의 군비투자는 상대방의 군비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상대방의 군사력을 압도하겠다는 목적으로 군비투자를 증가시키면, 상대방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비투자를 증가시켜 의도와 달리 소모적인 군비경쟁만 결과하거나 더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전쟁을 초래할 우려가 현실화되는 등 Jervis(1978)가 제시한 소위 안보딜레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8] 또한, 전쟁이 양국에 초래할 피해의 규모가 클수록 협상의 가능성이 크므로 협상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군비투자가 필요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전쟁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군비투자가 필요하다. 승리의 보상이 클수록 전쟁의 가능성이 크므로 전쟁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군비투자가 필요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협상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군비투자가 필요하다. 전쟁 승리의 보상은 당사국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동맹국들의 군비지원, 경제제재 등의 개입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군비투자는 군사적 요인 이외에도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

7) 이밖에도 Fiorina(1975, pp.136-139)는 정치학에서 모형 활용의 장점과 유용성으로 모형의 활용이 사유의 정확성, 논쟁의 명확성을 돕는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8)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변정욱·권오성(2016)을 참조하라.

적인 군사 우위만을 추구하여 군비투자를 할 경우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전쟁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과 북한 및 주요 동맹국들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군사력을 분석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 시 주요국의 보상, 전쟁과 협상 시 승리 확률, 피해 등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시사점에 맞게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지를 유추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1〉 정리 2의 증명

(i) $(n-1)/n > \phi$인 경우 다음을 추론할 수 있다.

우선 $a_j < \frac{\phi^2 n Y}{(1-\phi)(n-1)^2}$인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1〉로부터 i국은 $a_i = \sqrt{a_j Y} - a_j$를 선택하면 협상이 이루어지며 협상 최고의 기대보상을 얻는다. 한편 〈그림 1〉로부터 i국이 전쟁의 기대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a_i \geq -a_j + \frac{\phi n Y}{n-1}$를 선택해야하며 이는 EV_i^W를 극대화하는 1계조건 충족 값인 식 (4)보다 크다. 그런데 전쟁의 기대보상 함수의 1계 미분함수 $\frac{dEV_i^W}{da_i} = nY(1-\phi)\frac{a_j}{(a_i+a_j)^2} - 1$로부터 $\frac{d^2EV_i^W}{da_i^2} < 0$임을 알 수 있다. 이는 a_i가 1계조건을 충족하는 극대값에서 멀어질수록 EV_i^W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의 기대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a_i = -a_j + \frac{\phi n Y}{n-1}$를 선택해야 하며 이때 전쟁의 기대보상은 협상의 기대보상과 동일하다. 그런데 협상의 기대보상의 극대값은 $a_i = \sqrt{a_j Y} - a_j$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쟁을 통해 i국이 얻을 수 있는 기대보상보다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보상이 더 크다. 따라서 $a_j < \frac{\phi^2 n Y}{(1-\phi)(n-1)^2}$인 경우 i국의 최선반응은 $a_i = \sqrt{a_j Y} - a_j$이다.

다음으로 $\frac{\phi^2 n^2 Y}{(n-1)^2} \leq a_j$인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1〉로부터 i국은 $a_i = \sqrt{n(1-\phi)a_j Y} - a_j$를 선택하면 전쟁이 발발하며 전쟁 최고의 기대보상을 얻는다. 한편 〈그림 1〉로부터 i국이 협상의 기대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a_i \leq -a_j + \frac{\phi n Y}{n-1}$를 선택해야하며 이는 EV_i^N를 극대화하는 1계조건 충족 값보다 작다. 그런데 협상의 기대보상 함수의 1계 미분함수

$\frac{dEV_i^N}{da_i} = n[\frac{a_j Y}{(a_i + a_j)^2} - 1]$로부터 $\frac{d^2 EV_i^N}{da_i^2} < 0$임을 알 수 있다. 이는 a_i가 1계조건을 충족하는 극대값에서 멀어질수록 EV_i^N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상의 기대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a_i = -a_j + \frac{\phi n Y}{n-1}$를 선택해야 하며 이때 협상의 기대보상은 전쟁의 기대보상과 동일하다. 그런데 전쟁의 기대보상의 극대값은 $a_i = \sqrt{n(1-\phi)a_j Y} - a_j$에서 이루어지므로 협상을 통해 i국이 얻을 수 있는 기대보상보다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보상이 더 크다. 따라서 $\frac{\phi^2 n^2 Y}{(n-1)^2} < a_j$인 경우 i국의 최선반응은 $a_i = \sqrt{n(1-\phi)a_j Y} - a_j$이다.

마지막으로 $\frac{\phi^2 n Y}{(1-\phi)(n-1)^2} \le a_j < \frac{\phi^2 n^2 Y}{(n-1)^2}$인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1〉로부터 $a_i = \sqrt{a_j Y} - a_j$를 선택하면 협상이 이루어지며 협상 최고의 기대보상

$$EV_i^N = n\left(\frac{(\sqrt{a_j Y} - a_j)Y}{\sqrt{a_j Y}} - \sqrt{a_j Y} + a_j\right) \quad \text{(A1)}$$

을 얻으며, $a_i = \sqrt{n(1-\phi)a_j Y} - a_j$를 선택하면 전쟁이 발발하며 전쟁 최고의 기대보상

$$EV_i^W = n\left(\frac{(1-\phi)(\sqrt{a_j Y} - a_j)Y}{\sqrt{a_j Y}}\right) - \sqrt{a_j Y} + a_j \quad \text{(A2)}$$

를 얻는다. 따라서 i국은 두 기대보상을 비교하여 더 큰 기대보상 기대보상을 주는 선택을 한다. 협상과 전쟁의 기대보상의 차이는 (A2)에서 (A1)을 뺀 것으로 다음과 같다.

$$EV_i^N - EV_i^W = \left(\frac{n\phi Y}{\sqrt{a_j Y}} - n + 1\right)(\sqrt{a_j Y} - a_j) \quad \text{(A3)}$$

그런데 $a_j < \frac{\phi^2 n^2 Y}{(n-1)^2}$이므로 (A3)의 $\left(\frac{n\phi Y}{\sqrt{a_j Y}} - n + 1\right)$는 양의 값이 되므로 (A3)의 부호는 $(\sqrt{a_j Y} - a_j)$와 동일하며, $\sqrt{a_j} \in (0, \sqrt{Y})$이면 $\sqrt{a_j Y} - a_j > 0$가 만족된다. 가정에 의해 $\frac{n-1}{n} > \phi \Leftrightarrow 1 > \frac{n\phi}{n-1}$이므로 $\frac{\phi^2 n^2 Y}{(n-1)^2} < Y$가 만족된다. 따라서 $a_j < \frac{\phi^2 n^2 Y}{(n-1)^2}$이면 $a_j < Y$이 만족되고 이는 $\sqrt{a_j} < \sqrt{Y}$을 만족시킨다. 또한 $0 < a_j$이라는 가정으로부터

$0 < \sqrt{a_j}$이다. 따라서 $\sqrt{a_j} \in (0, \sqrt{Y})$가 만족되어 $\sqrt{a_j Y} - a_j > 0$가 만족되며 결과적으로 $EV_i^N - EV_i^W > 0$이 만족된다. 따라서 $\frac{\phi^2 n Y}{(1-\phi)(n-1)^2} < a_j < \frac{\phi^2 n^2 Y}{(n-1)^2}$인 경우 i국의 최선반응곡선은 EV_i^N를 극대화하는 균비투자는 $a_i = \sqrt{a_j Y} - a_j$가 된다.

(ii) $(n-1)/n < \phi$인 경우 다음을 추론할 수 있다. 우선 $a_j < \frac{\phi^2 n^2 Y}{(n-1)^2}$인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2〉로부터 i국은 $a_i = \sqrt{a_j Y} - a_j$를 선택하면 협상이 이루어지며 협상 최고의 기대보상을 얻는다. 한편 〈그림 2〉로부터 i국이 전쟁의 기대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a_i \geq -a_j + \frac{\phi n Y}{n-1}$를 선택해야하며 i)의 증명과 동일한 이유로 i국의 최선반응은 $a_i = \sqrt{a_j Y} - a_j$이다.

다음으로 $\frac{\phi^2 n Y}{(1-\phi)(n-1)^2} < a_j$인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2〉로부터 i국은 $a_i = \sqrt{n(1-\phi) a_j Y} - a_j$를 선택하면 전쟁이 발발하며 전쟁 최고의 기대보상을 얻는다. 한편 〈그림 2〉로부터 i국이 협상의 기대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a_i \leq -a_j + \frac{\phi n Y}{n-1}$를 선택해야하며 i)의 증명과 동일한 이유로 i국의 최선반응은 $a_i = \sqrt{n(1-\phi) a_j Y} - a_j$이다.

마지막으로 $\frac{\phi^2 n^2 Y}{(n-1)^2} < a_j < \frac{\phi^2 n Y}{(1-\phi)(n-1)^2}$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2〉와 위 i)의 증명에서 확인한 a_i가 EV_i^N와 EV_i^W 각각의 1계조건을 충족하는 값에서 멀어질수록 EV_i^N와 EV_i^W의 값이 감소한다는 사실로부터 i국의 최선반응곡선은 $a_i = -a_j + \frac{\phi n Y}{n-1}$가 되며 이 때 전쟁과 협상의 기대보상이 동일하게 된다.

〈부록 2〉 정리 3의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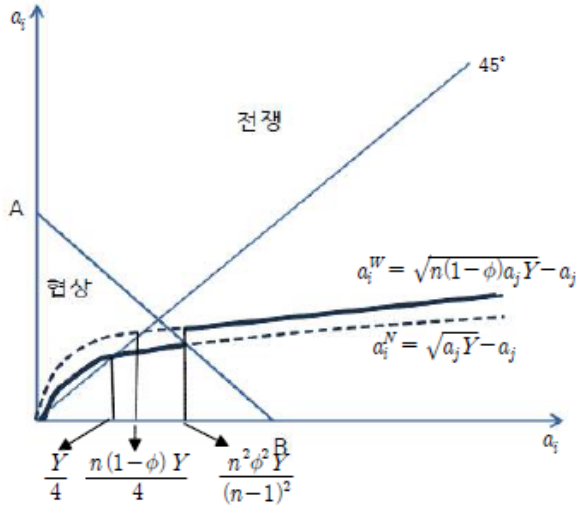
국가 1과 국가 2가 대칭적이므로 둘의 최선반응곡선도 대칭적이다. 따라서 1 단계 Nash 균형, 즉 i국의 최선반응곡선과 j국의 최선반응곡선에 교차하는 곳은 원점을 통과하는 45° 직선과 i국의 최선반응곡선이 교차하는 곳($a_i = a_j$)이 된다. a_i^N와 a_i^W가 원점을 통과하는 45° 직선과 교차하는 곳은 각각 $a_j^N = \frac{Y}{4}$과 $a_j^W = \frac{n(1-\phi)Y}{4}$이다. 이 값들이 1단계의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와 후자는 각각 협상과 전쟁의 최선반응곡선에 해당되어야 한다.

먼저 〈그림 1〉과 같이 $(n-1)/n > \phi$, 즉 $a_i^W > a_i^N$이며 $\frac{n(1-\phi)Y}{4} > \frac{Y}{4}$인 경우를 살펴보자.

(i) $\frac{(n-1)\left(\sqrt{n^2+14n+1}-n+1\right)}{8n} \le \phi \Leftrightarrow \frac{n(1-\phi)Y}{4} \le \frac{n^2\phi^2 Y}{(n-1)^2}$임을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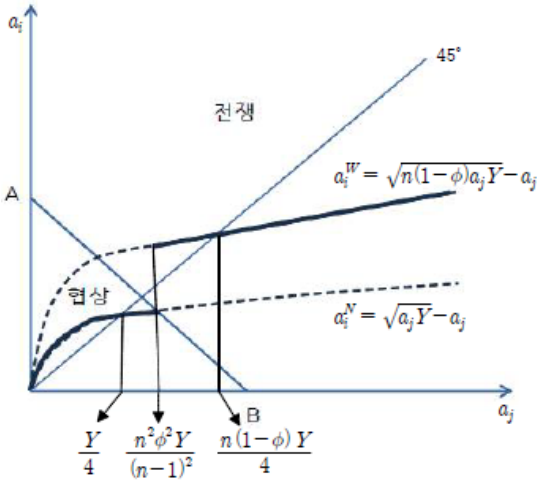
이는 〈그림 3〉과 같이 $\frac{n(1-\phi)Y}{4}$가 $\frac{n^2\phi^2 Y}{(n-1)^2}$의 좌측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으로부터 a_i^W와 원점을 통과하는 45° 직선이 교차하는 점은 i국의 최선반응곡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선반응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45° 직선과 $a_i = a_j = \frac{Y}{4}$ 한 곳에서만 교차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rac{(n-1)\left(\sqrt{n^2+14n+1}-n+1\right)}{8n} \le \phi < \frac{n-1}{n}$인 경우 Nash 균형은 1단계에 각국이 $a_i = a_j = \frac{Y}{4}$만큼 군비투자를 하고 2단계에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림 3〉 $\frac{(n-1)\left(\sqrt{n^2+14n+1}-n+1\right)}{8n} \le \phi < \frac{n-1}{n}$인 경우 1단계 Nash 균형 군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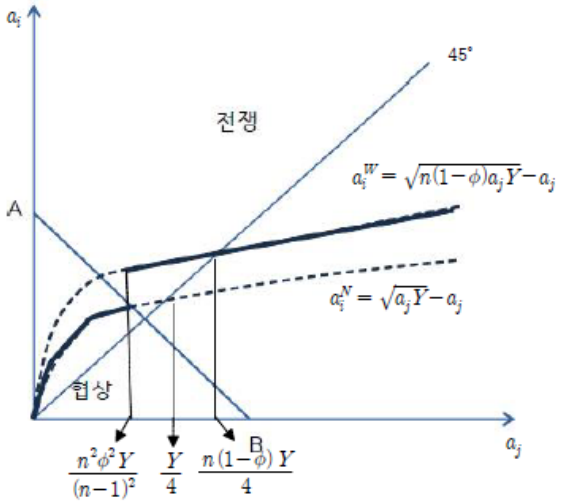
(i i) $\frac{n-1}{2n} \le \phi \Leftrightarrow \frac{Y}{4} \le \frac{n^2\phi^2 Y}{(n-1)^2}$이 며 $\phi < \frac{(n-1)\left(\sqrt{n^2+14n+1}-n+1\right)}{8n} \Leftrightarrow \frac{n^2\phi^2 Y}{(n-1)^2} < \frac{n(1-\phi)Y}{4}$임을 보일 수 있다. 이는 〈그림 4〉와 같이 $\frac{Y}{4}$가 $\frac{n^2\phi^2 Y}{(n-1)^2}$의 좌측에 있고 $\frac{n(1-\phi)Y}{4}$가 $\frac{n^2\phi^2 Y}{(n-1)^2}$의 우측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로부터 a_i^N, a_i^W와 원점을 통과하는 45° 직선이 교차하는 점은 i국의 최선반응곡선에 해당하며, 최선반응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45° 직선과 $a_i = a_j = \frac{Y}{4}$와 $a_i = a_j = \frac{n(1-\phi)Y}{4}$ 두 곳에서 교차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rac{n-1}{2n} \le \phi < \frac{(n-1)\left(\sqrt{n^2+14n+1}-n+1\right)}{8n}$인 경우 Nash 균형은 1단계에 각국이 $a_i = a_j = \frac{Y}{4}$만큼 군비투자를 하고 2단계에 협상을 선택하는 균형과 1단계에 각국이 $a_i = a_j = \frac{n(1-\phi)Y}{4}$만큼 군비투자를 하고 2단계에 침략을 하는 균형이 존재한다.

〈그림 4〉 $\frac{n-1}{2n} \le \phi < \frac{(n-1)\left(\sqrt{n^2+14n+1}-n+1\right)}{8n}$인 경우 1단계 Nash 균형 군비투자



(iii) $\phi < \frac{n-1}{2n} \Leftrightarrow \frac{n^2\phi^2 Y}{(n-1)^2} < \frac{Y}{4}$임을 보일 수 있다. 이는 〈그림 5〉와 같이 $\frac{Y}{4}$가 $\frac{n^2\phi^2 Y}{(n-1)^2}$의 우측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로부터 a_i^B와 원점을 통과하는 45° 직선이 교차하는 점은 i국의 최선반응곡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선반응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45° 직선과 $a_i = a_j = \frac{n(1-\phi)Y}{4}$ 한 곳에서만 교차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phi < \frac{n-1}{2n}$인 경우 Nash 균형은 1단계에 각국이 $a_i = a_j = \frac{n(1-\phi)Y}{4}$만큼 군비투자를 하고 2단계에 침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림 5〉 $\phi < \frac{n-1}{2n}$인 경우 1단계 Nash 균형 군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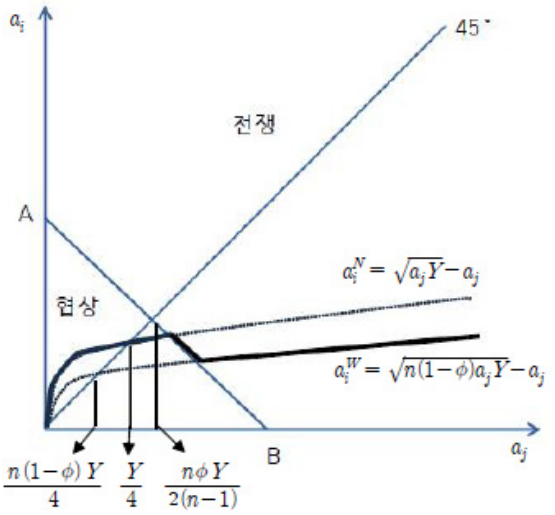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림 2〉와 같이 $(n-1)/n \leq \phi$, 즉 $a_i^W \leq a_i^N$이며 $\frac{n(1-\phi)Y}{4} \leq \frac{Y}{4}$인 경우를 살펴보자.

(iv) $\phi \geq \frac{n-1}{n} \Rightarrow \phi > \frac{n-1}{2n}$이므로 $\frac{n\phi Y}{2(n-1)} > \frac{Y}{4}$임을 보일 수 있다. 이는 〈그림 6〉과 같이 $\frac{Y}{4}$가 $\frac{n\phi Y}{2(n-1)}$의 좌측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으로부터 a_i^W와 원점을 통과하는 45° 직선이 교차하는 점은 i국의 최선반응곡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선반응곡선은 원점

을 통과하는 45° 직선과 $a_i = a_j = \frac{Y}{4}$ 한 곳에서만 교차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n-1)/n \leq \phi$인 경우 Nash 균형은 1단계에 각국이 $a_i = a_j = \frac{Y}{4}$만큼 군비투자를 하고 2단계에 협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림 6〉 $(n-1)/n \leq \phi$인 경우 1단계 Nash 균형 군비투자



참고문헌

박성훈. “부정적 외부성을 고려한 군사분쟁: 슈타켈버그 모형”, 『국방연구』 제60권 제3호 (2017).

변정욱·권오성. “경제제재 및 신뢰구축이 군비경쟁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제59권 제3호(2016).

변정욱·조남석. “동태적 군축: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국방연구』제61권 제4호(2018)

Bueno de Mesquita, B. 김우상, 김재한, 황태희 외(역)(2015). 『세계정치론: 전쟁과 평화 그리고 세계질서』 (서울: 카오스북, 2015)

Bozzoli, C., T. Brück, and S. Sottsas. “A survey of the global economic costs of conflict”, *Defence and Peace Economics*, Vol. 21(2)(2010).

Chang Y-M. and Z. Luo. “War or setlement: An Economic Analysis of Conflict with Endogenous and Increasing Destruction”, *Defence and Peace Economics*, Vol. 24(1)(2013).

Chang Y-M.,S. Sanders, and B. Walia. “The cost of conflict: A choice-theoretic, equilibrium analysis”, *Economics Letters* (131)(2015).

Fiorina, M. P. “Formal Models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19, No.1(1975).

Jervis, R.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2)(1978).

Johnson, J. “Models among the Political Theoris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8, No.3(2014).

Nachbar, J. “Refinements of Nash Equilibrium”, https://bpb-us-w2.wpmucdn.com/sites.wustl.edu/dist/3/2139/files/2022/03/Refinements.pdf (검색일: 2023. 9.22.)

Schelling, T. C. (1960). *The Strategy of Conflict*. (London: Oxford Univ. Press, 1960)

Shaffer, S. “War, labor tournaments, and contest payoffs”, *Economics Letters* (92)(2006).

Smith, A., D. Houser, P. Leeson, R. Ostad. “The cost of conflic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97(1)(2014).

Choice of War or Negotiation as a Means of Conflict Resolution: A Game Theoretic Analysis

Byun, Jeong Wook & Lee, Joonbae

Keywords

war, negotiation, arms investment, strategic choice, game theory

War is a means by which two or more countries resolve mutual conflicts through force and the winner coerces its purpose to the loser. Since the outbreak and outcome of the war are determined by the strategic choices and interaction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ar is a phenomenon that can be analyzed with game theory. By modifying a game theoretic model of Chang, et al.(2015) which analyzed the choice between war and negotiation as a means of resolving conflicts between countries, we examines how strategic judgments based on the rationality of the conflicting countries affect the arms investment, the choice between war and negotiation and the results of the conflict resolu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Unlike Chang, et al.(2015), war or negotiation can occur in all cas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war damage is endogenous to military investment. The greater the damage of the war, the more likely negotiation is to occur than war. When negotiation occurs, the equilibrium arms investment is determined regardless of the damage of the war, while it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damage of the war when war outbreaks.

[논문투고일 : 2023. 10. 6.]
[심사의뢰일 : 2023. 11. 18.]
[게재확정일 : 2023. 12. 6.]

국방연구 2023년 12월
제66권 제4호, pp. 23-40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제약요인

고상두*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핵무기 사용의 제약요인에 관한 설명모델
Ⅳ.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제약 효과
1. 보복 위협에 의한 핵 억지 효과
2. 국제규범에 의한 핵 봉쇄 효과
3. 군축 협력을 통한 핵 통제 효과
Ⅴ. 결론 및 북핵에 대한 시사점

요 약

이 글의 연구 질문은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가?”이다. 그리하여 어떠한 요인이 푸틴의 핵무기 사용을 막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주요 설명모델들을 토대로 그 제약요인을 찾고자 한다.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모델로는 보복 공격의 가능성 때문에 공멸을 피하려는 판단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설명모델, 국제적 여론과 도덕적 비난 때문에 핵 사용을 자제한다는 규범적 설명모델, 핵 군축 협력이 제도화하면서 핵무기 사용이 통제되고 있다는 협력적 설명모델이 있다. 이러한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막는 요인별 효과를 살펴본 후 어느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핵심어 :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 핵무기, 억지력

* 소속 직책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명예교수

Ⅰ. 서론

2022년 2월 23일 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키이우를 향해 진격하고, 몇 시간 후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을 선포하면서 러시아의 길을 방해하는 나라는 전대미문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2월 27일에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북해함대, 장거리비행단 등 핵전력 부대에게 특별 전투준비 태세를 지시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최초의 명령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2월 중순에는 러시아 핵전력 부대의 훈련이 있었다. 이 훈련은 연례적으로 가을에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침공을 앞두고 초봄에 시행하였으며, 당시 러시아 언론은 이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1)]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은 핵전쟁에 관한 언급을 빈번하게 하였는데,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강온발언을 혼합하여 구사하는 양상을 보인다. 푸틴의 강경 발언 이후 한 달만인 3월 페스코프(Dmitry Pescov) 크렘린 대변인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온건 발언을 하였다.[2)] 그리고 5월에는 안토노프(Anatoly Antonov) 주미 러시아대사가 핵전쟁은 패자만 있을 뿐이어서 피해야 하고, 나토가 러시아의 핵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도적 발언을 하였다.[3)]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합병한 뒤인 9월 말 푸틴은 러시아 영토가 위협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사용한 선례가 있다며 강경 발언을 재개하였다.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러시아 영토방어를 위해 전략핵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장관도 핵전쟁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4)]

하지만 2022년 10월을 고비로 러시아의 발언이 온건해지면서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 영토가 공격받는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공식 핵 독트린을 준수하겠다고 말하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2022년 초에 각국 정상들과 함께 선언한 핵전쟁 반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1) Horovitz, Liviu and Lydia Wachs, “Russia’s Nuclear Threats in the War against Ukraine.” German Insititu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WP Comment*, No. 29, (April 2022), p. 1.

2) Kremlin Spokesman “Russia Would Use Nuclear Weapons only in Case of Threat to Existence of State.” *Reuters*, March 28, 2022.

3) O’Connor, Tom, “Russia Ambassador to US Says NATO Not Taking Nuclear War Threat Seriously.” *Newsweek*, May 5, 2022.

4) 박계호, “러시아의 핵위협이 김정은 정권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군사』 제12호(2022), p. 6.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기대와 달리 장기전이 되고 있다. 그는 번개 작전으로 키이우를 공격하였지만, 러시아군 15만 명과 우크라이나군 25만 명을 비교하면, 전쟁 승리를 위한 공격과 방어 비율인 3:1에 크게 못 미친다.[5]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글로벌 강대국을 추구하는 러시아로서는 크나큰 위신 상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군사적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2년 말에 개최된 러시아 인권이사회 연례 회의에서 푸틴은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핵을 사용하여 전쟁을 단숨에 종결시킬 의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6]

이 글의 연구 질문은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가?"이다. 그리하여 어떠한 요인이 푸틴의 핵무기 사용을 막는지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주요 설명모델들을 토대로 그 제약요인들을 찾고, 그중에서 어느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모델로는 보복 공격의 가능성 때문에 공멸을 피하려는 합리적 판단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설명모델, 국제적 여론과 도덕적 비난 때문에 핵 사용을 자제한다는 규범적 설명모델, 핵 군축을 위한 협력이 제도화하면서 핵무기 사용이 통제되고 있다는 협력적 설명모델이 있다. 이러한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이 글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도출한 후, 이들 요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여부를 둘러싼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요인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설명모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적 설명모델에서 도출한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어떻게 제약하였는지, 억지 효과, 봉쇄 효과, 통제 효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제5장의 결론 부분에서 러시아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을 제시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5) 이지수.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함의." 『통일전략』 제22권, 제3호(2022), p. 46.

6) Trevelyan, Mark, "Putin Says Russia May Be Fighting in Ukraine for a Long Time." *Reuters*, December 8, 2022.

Ⅱ. 선행연구의 검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쟁의 원인, 서방의 대응, 전쟁의 전망 등 관련 주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을 하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고, 학계에서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레비테 (Ariel Levite)와 페르코비치 (George Perkovich)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신속한 휴전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7] 이에 반해 앨버크 (William Alberque)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8]

이들의 논쟁은 주로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론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호로비츠(Horovitz)는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서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999년 나토의 코소보 개입에 충격을 받은 러시아는 나토의 재래식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핵 독트린을 2000년에 발표하였는데,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적의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러시아의 핵 독트린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핵무기를 모든 전쟁 양상에서 사용가능한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영토 공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9]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더라도 분쟁 발발 시 핵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확전을 원치 않는 서방의 양보를 얻어내는 공세적 핵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이러한 전략을 “긴장 완화를 위한 긴장 고조(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이라고 부른다.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상대에게 핵무기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 수위를 낮추거나 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다.[10]

러시아는 강경 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의 직접 개입을 막는 데 성공하였다. 푸틴의 핵 위협 때문에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력 파병을 포기하였고, 우크라이나

---

7) Levite, Ariel and George Perkovich, “To Avert Armageddon, Push for a Cease-Fire in Ukraine.” *Foreign Policy*, October 12, 2022.

8) Alberque, William, “Russia is Unlikely to Use Nuclear Weapons in Ukraine.” *IISS Online Analysis,* December 10, 2022.

9) Horovitz, Liviu and Lydia Wachs, “Russia’s Nuclear Threats in the War against Ukraine.” German Insititu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WP Comment,* No. 29, (April 2022), p. 2.

10) 김태형, “핵무기의 국제정치 지형도.”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1호(2022), p. 239.

정부의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 설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숄츠 총리는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지 않는 이상 나토가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11]

러시아는 나토의 직접 개입뿐만 아니라 무기 공급까지 막아서 우크라이나를 서방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하였지만, 서방의 무기 공급까지 막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푸틴이 나토의 무기 공급을 전쟁 개입으로 간주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바이든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12] 나토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접촉그룹(contact group)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3]

러시아 핵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핵무기를 심리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서방이 핵 위협을 정치적 수사로 사용하지 않는 데에 반해, 러시아는 정치적 언술 효과를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푸틴은 자신의 정치적 요구에 힘을 싣는 수단으로 핵 위협을 활용한다. 러시아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공포감을 주는 협박 문화를 갖고 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역사적 경험 의식 때문이다. 러시아는 옳고 선이며, 악으로부터 위협받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정치문화에서는 적을 협박하는 역량을 귀중하게 생각한다. 핵 위협은 훌륭한 방어 수단이며, 러시아의 전략적 사고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14]

러시아는 핵전쟁의 공포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에게 핵무기는 전쟁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적의 심리를 교란하고 관리하는 무기이다. 핵무기는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위협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러시아는 핵 위협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레토릭을 사용한다.[15] 러시아의 핵 위협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자국민과 서방의 청중을 겨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국민에게는 서방의 적대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서방 국민에게는 그들의 정부가 대러 강경정책을

---

11) Scholtz, Olaf, "Beiden bei Waffenlieferungen in Ukraine besonnen," *Süddeutsche Zeitung*, Aug. 25, 2022.

12) Holland, Steve, "US Will Not Send Ukraine Rocket Systems That Can Reach Russia, Says Biden" *Reuter*, May 30, 2022.

13) Seligman, Lara and Paul McLeary, "The Little-known Group That's Saving Ukraine." *Politico*, May 01, 2023.

14) Blank, Stephen. "Nuclear Weapons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5, No. 4(Autumn 2022), p. 59.

15) Bruusgaard, Kristin, "The Myth of Russia's Lowered Nuclear Threshold."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September 22, 2017.

취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개입과 지원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생겨나고 있다.

Ⅲ. 핵무기 사용의 제약요인에 관한 설명모델

냉전 시대에 핵의 안정성을 지켜준 것은 상호확증파괴(MAD) 개념이다. 미소 간에 형성된 공포의 균형이 핵전쟁을 막았는데, 핵 억지력의 조건은 신뢰성, 생존성, 합리성이다. 신뢰성이란 선제공격을 하면 보복 공격이 확실히 따른다는 것이며, 생존성은 선제공격을 당하고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반격이 가능한 충분한 핵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합리성은 핵 공격은 궁극적으로 자기파괴를 가져오는 자살행위이므로 지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합리적 설명모델은 상호취약성에 기반한 공멸의 우려가 핵전쟁을 억지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본다.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보복능력이 핵 억지력을 발휘한다는 전략적 안정성은 냉전 시대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왈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냉전 시대에 핵 평화(nuclear peace)가 가능했던 이유는 핵무기의 사용이 전 지구적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누구든 핵전쟁을 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6]

핵보유국은 비핵국가와의 전쟁에서 불리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전,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 개입하여 고전했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휴전이나 철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적의 공격을 예방하는 억지력(deterrence)을 발휘하지만, 적의 공격을 중단시키거나 휴전협상을 이끌어내는 강제력(compellence)은 약하기 때문이다.[17] 섹서(Todd Sechser)는 핵 위협의 이득을 알아보기 위하여 19개 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핵무기는 방어적 차원의 억지력은 있지만, 공격적 차원의 강제력은 약하며, 따라서 핵 위협의 이득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18]

전략적 안정성은 역설적으로 재래식 수준에서의 치열한 갈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저강도 분쟁이 강화된 것이다.[19] 전략적 균형으로

16) Waltz, Kenneth,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No. 171(1981).

17) Geller, Daniel, "Nuclear Weapons, Deterrence, and Crisis Escal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2(1990).

18) Sechser, Todd and Matthew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7)

인하여 강대국 간에는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 반면에, 여타 국가 간의 제한전은 빈번하게 벌어지는 안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 생겨난 것이다. 즉 핵전쟁의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국지적 차원의 불안정성은 커진 것이다.[20]

규범적 설명모델은 도덕적 비난이 핵무기 사용을 제약한다고 본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핵 개발 경쟁을 했고, 새로운 핵보유국이 생겨나고, 수많은 군사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탄넨발트(Nina Tannenwald)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핵무기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핵 억지력 때문이 아니라 핵 사용 자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고, 이것을 핵 타부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미국이 핵 보복의 우려가 별로 없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에서 핵무기를 최종병기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전쟁 윤리 때문이라고 본다.[21]

쉘링(Thomas Schelling)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 15년 만에 핵 불사용의 전통이 생겼다고 주장한다.[22] 이러한 전통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규범적 관습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사용 불가능한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핵무기 사용은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 규범적 장벽을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NPT 협정의 최종목표가 핵 경쟁의 중단과 글로벌 비핵화라는 사실을 조항에 담아 명시하였다. 유엔총회는 수차례에 걸쳐 핵 사용의 불법성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996년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핵 사용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권고 의견을 내었다.[23] 2022년 1월에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이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사용하며, 궁극적으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24]

핵무기 불사용 전통은 이제 국제적 금기(taboo)로 규범화되고, 국제 관습법으로 정착되었

---

19) Jervis, Robert, "Why Nuclear Superiority Doesn't Matt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94, No. 4(1979).

20) Rauchhaus, Robert, "Evaluating the Nuclear Peace Hypothesis. A Quantitative Approac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2009), p. 258.

21) Tannenwald, Nina,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mative Basis of Nuclear Non-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1999), p. 433.

22) Schelling, Thomas,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0), p. 260.

23) Peter Hilpold, "The Ukraine Crisis, the Nuclear Threat and the ICJ Opinion of 1996." *Global Policy*, Vol. 14, No. 2(2023)

24)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of the Leaders of the Five Nuclear-Weapon States on Prevening Nuclear War and Avoiding Arms Races." January 03, 2022.

고, 핵무기 사용을 꺼리는 현상이 세계 각국에 뿌리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사용이라는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하고, 특히 핵 사용을 금기시하는 인식은 권력 엘리트보다 일반대중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화가 된 사회일수록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제약이 크게 작용한다.[25]

협력적 설명모델은 각종 군축 노력이 제도화되면서 핵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핵무기 불사용 전통이 비공식적 규범이라면, 군축 협정은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규범으로서 레짐에 해당한다. 1960년대까지는 세계적으로 수평적 핵확산과 수직적 핵확산이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 미소 양국은 핵무기 보유량을 주도적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는 군축을 통해 핵탄두를 줄였고, 전술 핵무기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26]

군비통제란 전략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대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분쟁이 격화될수록 소통과 합의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생존이라는 공동이익은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다. 의도치 않은 돌발적 긴장 고조, 오해, 레이더 오작동과 같은 기술적 사고, 모호한 소통 등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자도 비합리적인 핵사용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사찰, 협의체 구성, 핫라인 등이 필요하다.[27]

전략적 안정성은 보복능력이 대등할수록 높아지므로, 핵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사라지고, 핵 능력을 증강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군비 통제론자는 본다.[28] 그러므로 핵 군축을 통해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와 동시에 군사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29]

---

25) Paul, Thazha Varkey, “Nuclear Taboo and War Initiation in Regional Confli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9, No. 4(1995), p. 701,

26) 조동준,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1호(2011 봄), p. 56.

27) Sagan, Scott, *The Limits of Safety: Organizations, Accidents, and Nuclear Weap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95).

28) Gray, Colin, “Arms Control Does Not Control Arms.” *Orbis*, Vol. 37, No. 3(Summer 1993), p. 335.

29) Krepon, Michael, *Winning and Losing the Nuclear Peace: The Rise, Demise, and Revival of Arms Control*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2021), p. 3.

Ⅳ.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제약 효과

1. 보복 위협에 의한 핵 억지 효과

미국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하여 강력한 보복 조치를 경고하였다. 바이든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3차대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2022년 9월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크렘린과 비공식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30]

푸틴은 모든 종류의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위협함으로써 전술핵 사용도 시사하였다.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 따르면 전략핵 무기는 억지용, 전술핵 무기는 전투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술핵 탄두의 경우 러시아는 약 1,900개 미국은 약 200개를 갖고 있는데, 전술핵 무기는 보통 0.5-50 kiloton 수준의 폭발력을 갖고 있으며, 유효 반경 최대 500km이다. 전술핵 무기에 대한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은 15-20 kiloton의 폭발력을 가진 전술핵 무기에 해당한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통해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자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31]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면 유럽연합과 미국이 확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상을 원할 것이며,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워싱턴, 베를린, 파리가 공격받는 것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오판을 불식하기 위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술핵 사용에 대해서도 미국은 강력 대응할 것이며 글로벌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32]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해도 아무런 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제3국의 핵 사용 전략에 잘못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폴란드, 일본, 한국 등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독자 핵무장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전략핵 무기를 사용하여 전면적인 대량보

30) Sanger, David and Jim Tankersley, "U.S. Warns Russia of Catastrophic Consequences if It Uses Nuclear Weapons." *New York Times*, September 25, 2022.

31) Barel, Helit, "Will Russia Use Nuclear Weapons in Ukraine?" *INSS Insight*, No. 1578, March 24, 2022, p. 1.

32) Collinson, Stephen, "Biden's Chilling 'Armageddon' Warning Sharpens the Stakes with Putin." *CNN*, Oct. 7, 2022.

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도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전선이 길게 형성되어 우크라이나군이 선형으로 분산되어 있고, 러시아군이 대치하고 있어서 전술핵에 의해 러시아 병력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33]

또한 푸틴의 목표는 단순한 전쟁 승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확보, 중립주의 요구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승리를 할 경우 가능하겠지만, 핵무기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34]

2. 국제규범에 의한 핵 봉쇄 효과

핵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여론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고 있다. 2022년 3월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핵전쟁 발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러시아 정부에게 핵무기 불사용을 요구하였다. 2022년 9월에는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중국과 인도가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핵무기 사용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35]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국제적인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945년 이후 최초로 핵을 사용한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며, 그동안 핵 국가로서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애쓴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핵보유국이 비 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면, 국제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고 비핵국가들의 핵무장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더 이상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가 아닌 불량국가 취급을 받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1994년 부다페스트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비핵화할 경우 주권과 영토를 보존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전쟁을 개시함으로써 이미 자신의 안보 공약을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한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까지 사용한다면, 러시아의 국제적 평판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36]

---

33) Alberque, William, “Russia is Unlikely to Use Nuclear Weapons in Ukraine.” *IISS Online Analysis*, December 10, 2022.

34) Horovitz, Liviu and Lydia Wachs, “Russia’s Nuclear Threats in the War against Ukraine.” *German Insititu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WP Comment*, No. 29, (April 2022), p. 4.

35) Ray, Siladitya, “India And China Finally Voicing Concerns Over Russia’s Actions In Ukraine.” *Forbes*, September 23, 2022.

사실 핵무기는 전쟁 억지를 위한 방어 목적으로 용인되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재래식 전쟁으로 확보한 돈바스 지역을 지키는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이미 약탈적 핵 국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러시아 내 자국민의 지지가 낮다. 러시아 국민은 우크라이나가 형제 국가라면서 핵으로 위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전쟁 직전 실시된 러시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다수가 나토와 전쟁하더라도 핵무기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37]

서방에서는 푸틴이 핵무기 사용의 득실을 계산하지 않는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정치지도자라는 인식이 있다. 그리고 푸틴의 암과 파킨스 투병 등에 관한 루머가 돌면서, 이러한 질병이 푸틴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38] 하지만 2022년 말 푸틴이 "우리는 미치지 않았고 핵이 어떤 무기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면도칼을 들고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여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푸틴이 핵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핵 규범을 쉽사리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39]

3. 군축 협력을 통한 핵 통제 효과

미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한 핵 대결을 관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1962년 쿠바 위기 당시 케네디는 소련 미사일의 배치를 막기 위해 쿠바 봉쇄를 하는 동시에 핵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협상을 물밑에서 전개하였다. 핵전쟁의 위험을 경험한 양국은 이후 군비통제를 위해 협력하였다. 1963년에 제한적 핵 실험 금지협정(LTBT)이 체결되고, 미소 간에 핫라인이 설치되었다. 구소련이 붕괴한 1991년에는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이 체결되었고, 양국은 핵탄두 보유량을 6,000개, 투발수단을 1,600개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냉전 시대에 구축한 군축 레짐은 탈냉전 안보 환경에서 퇴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2년에 요격미사일(ABM) 협정이 파기되고, 2019년에는 중거리핵전력(INF) 협정이 파기되면서, 2010년에 체결된 신 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ART)이 거의 유일한 핵 통제협정

---

36) Giovannini, Francesca,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rms Control Today*, Vol. 52(July-August 2022).

37) Smetana, Michal and Michal Onderco, "From Moscow with a Mushroom Cloud? Russian Public Attitudes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in a Conflict with NAT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7, No. 2-3(2022).

38) Davis, Paul,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Russia-Ukraine War for Northeast Asia."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Vol. 6, No. 1(2023), p. 113.

39) Davies, Alys. "Putin: Nuclear Risk is Rising, but We are not Mad." *BBC News*, December 7, 2022.

으로 남게 되었고, 2021년 1월에 극적으로 5년 연장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전략핵 탄두의 실전배치를 1,550개로 제한하고 700개의 투발 수단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전략핵 탄두 보유량 5,970개 중에서 1,458개를 배치하고, 미국은 보유량 5,800개 중에서 1,396개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전략핵무기 배치 실태에 관한 자료를 연 2회 교환하고, 투발 수단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40]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는 2022년 8월 New START에 의한 현지 사찰 중단을 선언하였고, 미러 간의 핵무기 통제 협력에 장애가 생겼지만, 자료교환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41] 그리고 미 국방부는 푸틴의 핵 위협 발언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2022년 3월에 예정되었던 신형 미닛맨(Minuteman III)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보류하였다.[42] 이에 상응한 조치로 러시아는 2022년 9월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맛(Sarmat)을 미국 사찰단에게 공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43]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핵 군비 통제 복원에 관심이 있으며, 다수의 협력 의제를 갖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개발사업과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약 100개의 전술핵 탄두를 기반으로 하는 나토 핵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한 2019년에 종료된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관심이 있다.[44]

미국의 관심은 러시아의 전술핵 무기이다. 또한 러시아의 신형 투발수단을 핵 통제협정에 포함하는 것이다. 푸틴은 ABM 협정이 폐기된 이후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6종류의 신형 미사일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사르맛, 아방가르드, 킨잘, 지르콘 등 초음속 미사일과 부레베스트닉, 포세이돈 등 핵 추진 미사일이다.[45]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쿠바 위기 이후 핵 통제를 위해 협력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탈냉전 기간에 양국 지도자는 거의 매년 전략적 안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중에

---

40) Barel, Helit, “Will Russia Use Nuclear Weapons in Ukraine?” *INSS Insight*, No. 1578, March 24, 2022, p. 2.

41) US Department of State, “Priorities Regarding the New and Emerging Challenges to International Security.” May 26, 2022.

42) Stewart, Phil and Idrees Ali, “US Cancels ICBM Test due to Russia Nuclear Tensions.” *Reuters*, April 2, 2022.

43) TASS, “Roscosmos to Demonstrate Sarmat ICBM to US Inspectors by Late February 2024.” September 23, 2022.

44) Kristensen, Hans and Matt Korda. “United States Nuclear Weapons, 2021.”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7, No. 1(2021).

45) Bugos, Shannon, “Despite Challenges, US-Russian Nuclear Arms Control Has its Benefit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8, No. 6(2022), p. 336.

서 중요한 성명을 보면, 2000년에 푸틴과 클린턴은 전략적 안정 협력 구상을 발표하였고, 2002년 푸틴과 부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약속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바이든과 푸틴이 전략핵 무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전략대화에 합의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전에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의 군축 관련 협의는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46]

V. 결론 및 북핵에 대한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시하면서 러시아는 핵 위협을 하였으나, 결국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3가지 제약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핵 보복 위협에 의한 억지 효과, 국제적 규범에 의한 봉쇄 효과, 그리고 군축 협력을 통한 통제 효과이다. 이러한 3가지 효과를 비교하면, 국제적 규범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군축 협력의 효과가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 보복 가능성은 중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략핵 무기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핵 무기라는 제한적 핵을 사용하더라도 러시아는 이웃 나라를 침략하였다는 비난에 더해 핵 타부를 깬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서방의 전략적 핵 보복 보다 국제적 규범과 여론을 우려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축협력은 탈냉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화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러 양국 간의 협력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핵 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 사용 이슈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동안 핵무기 사용은 핵 보유국 간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간의 핵 경쟁이 있었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의 핵 증강이 미국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대두하였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국가와의 재래식 전쟁에서 전황이 불리해지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46) Bidgood, Sarah,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US-Russia Strategic Stability."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Vol. 6, No. 1(2023), p. 11

에서는 핵 무력 정책법을 채택하여 기존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폐기하였다.[47]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로 공격받지 않는 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핵전략을 공세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발표하였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48]

이처럼 변모한 북한의 핵전략에 대응하여 한국은 핵무기 사용을 제약하는 억지, 봉쇄, 통제의 3가지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하여 핵 확장억지력의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나토처럼 미일 간의 핵 공유를 제안하였으며, 한국과 대만에서도 핵무장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미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핵확장억지력의 제공이 약화 내지 철회될 경우, 다음 단계로 핵 공유와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49]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우산에 더해 킬체인과 같은 재래식 첨단무기체계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남한의 재래식 무기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해야, 추후 북한의 핵을 통제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 봉쇄를 위해 국제규범과 여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핵 통제와 감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북핵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핵 통제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확보한 확장억지력을 북한의 비핵화와 교환하는 카드로 활용하는 협상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확장억지력을 극대화하여, 북한에게 충분한 보복능력을 과시하고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여 북한이 핵 군축에 참여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핵의 비확산에 관심이 있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보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47) 이지수.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함의.” 『통일전략』 제22권, 제3호(2022), p. 54.

48) 이승현, “북한 핵무력 법제화 함의와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제2007호, 2022. 10. 25.

49) 양희용, “핵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0집 제4호(2022), p. 70.

참고문헌

김태형, “핵무기의 국제정치 지형도.”『국제정치논총』제62집, 제1호,(2022).

박계호, “러시아의 핵위협이 김정은 정권에게 주는 시사점.”『한국군사』제12호(2022).

양희용, “핵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세계지역연구논총』제40집 제4호 (2022).

이승현, “북한 핵무력 법제화 함의와 대응방향.”『이슈와 논점』제2007호, 2022. 10. 25.

이지수.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함의.”『통일전략』제22권, 제3호(2022).

조동준,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정책.”『한국과 국제정치』제27권 제1호(2011 봄).

Alberque, William, “Russia is Unlikely to Use Nuclear Weapons in Ukraine.” *IISS Online Analysis,* December 10, 2022.

Arndt, Anna Clara and Liviu Horovitz. “Nuclear Rhetoric and Escalation Management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A Chronology.”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Working Paper*, September 03, 2022.

Barel, Helit, “Will Russia Use Nuclear Weapons in Ukraine?” *INSS Insight*, No. 1578, March 24, 2022.

Bidgood, Sarah,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US-Russia Strategic Stability.”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Vol. 6, No. 1(2023).

Blank, Stephen. “Nuclear Weapons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5, No. 4(Autumn 2022).

Bruusgaard, Kristin, “The Myth of Russia’s Lowered Nuclear Threshold.”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September 22, 2017.

Bugos, Shannon, “Despite Challenges, US-Russian Nuclear Arms Control Has its Benefit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8, No. 6(2022).

Davies, Alys. “Putin: Nuclear Risk is Rising, but We are not Mad.” *BBC News*, December 7, 2022.

Davis, Paul,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Russia-Ukraine War for Northeast Asia.”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Vol. 6, No. 1(2023).

Geller, Daniel, “Nuclear Weapons, Deterrence, and Crisis Escal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2(1990).

Giovannini, Francesca,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rms Control Today*, Vol. 52(July-August 2022).

Gray, Colin, "Arms Control Does Not Control Arms." *Orbis*, Vol. 37, No. 3(Summer 1993).

Horovitz, Liviu and Lydia Wachs, "Russia's Nuclear Threats in the War against Ukraine." German Insititu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SWP Comment*, No. 29, (April 2022).

Jervis, Robert, "Why Nuclear Superiority Doesn't Matt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94, No. 4(1979).

Kremlin Spokesman "Russia Would Use Nuclear Weapons only in Case of Threat to Existence of State." *Reuters*, March 28, 2022.

Krepon, Michael, *Winning and Losing the Nuclear Peace: The Rise, Demise, and Revival of Arms Control*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2021).

Kristensen, Hans and Matt Korda. "United States Nuclear Weapons, 2021."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7, No. 1(2021).

Levite, Ariel and George Perkovich, "To Avert Armageddon, Push for a Cease-Fire in Ukraine." *Foreign Policy*, October 12, 2022.

Smetana, Michal and Michal Onderco, "From Moscow with a Mushroom Cloud? Russian Public Attitudes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in a Conflict with NAT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7, No. 2-3(2022).

O'Connor, Tom, "Russia Ambassador to US Says NATO Not Taking Nuclear War Threat Seriously." *Newsweek*, May 5, 2022.

Paul, Thazha Varkey, "Nuclear Taboo and War Initiation in Regional Confli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9, No. 4(1995),

Rauchhaus, Robert, "Evaluating the Nuclear Peace Hypothesis. A Quantitative Approac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2(2009).

Ray, Siladitya, "India And China Finally Voicing Concerns Over Russia's Actions In Ukraine." *Forbes*, September 23, 2022.

Sagan, Scott, *The Limits of Safety: Organizations, Accidents, and Nuclear Weap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95).

Sanger, David and Jim Tankersley, "U.S. Warns Russia of Catastrophic

Consequences if It Uses Nuclear Weapons." *New York Times*, September 25, 2022.

Schelling, Thomas,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0).

Seligman, Lara and Paul McLeary, "The Little-known Group That's Saving Ukraine." *Politico*, May 01, 2023.

Stewart, Phil and Idrees Ali, "US Cancels ICBM Test due to Russia Nuclear Tensions." *Reuters*, April 2, 2022.

Tannenwald, Nina,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mative Basis of Nuclear Non-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1999).

TASS, "Roscosmos to Demonstrate Sarmat ICBM to US Inspectors by Late February 2024." September 23, 2022.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of the Leaders of the Five Nuclear-Weapon States on Preventing Nuclear War and Avoiding Arms Races." January 03, 2022.

Sechser, Todd and Matthew Fuhr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7)

Trevelyan, Mark, "Putin Says Russia May Be Fighting in Ukraine for a Long Time." *Reuters*, December 8, 2022.

US Department of State, "Priorities Regarding the New and Emerging Challenges to International Security." May 26, 2022.

Waltz, Kenneth,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No. 171(1981).

Constraints on Russia's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Ukraine War

Sangtu Ko

Keywords

Ukraine, Russia, North Korea, Nuclear Weapon, Deterrence

The research question for this article is, "Why doesn't Russia use nuclear weapons in the war in Ukraine?" Therefore, the study aims to find out what factors are preventing Putin from using nuclear weapons. Many factors limit Russia's use of nuclear weapons, and these factors work in combination. This article seeks to find the constraints based on the main explanatory models in reviewing existing studies. Models that explain the factors that limit the use of nuclear weapons include a rational explanatory model in which nuclear weapons are not used in a rational judgment to avoid co-destruc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retaliatory strikes, a normative explanatory model in which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nd moral reasons hinder nuclear use. There is a cooperative explanatory model in which the use of nuclear weapons is controlled by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for disarmament.

[논문투고일 : 2023. 10. 31.]
[심사의뢰일 : 2023. 11. 18.]
[게재확정일 : 2023. 12. 6.]

국방연구 2023년 12월
제66권 제4호, pp. 41-71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 지전략으로서 해양자원과 안보의 고려*

박창건**, 채 첩***

Ⅰ. 서론
Ⅱ. 핵심이익으로서 지전략: 해양자원 확보와 안보의 고려
Ⅲ. 2008년 중일공동개발구역의 합의 과정
Ⅳ. 중국 대륙붕 정책의 특징과 도전
Ⅴ.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는 지전략이란 관점에서 중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경제적 접근과 '힘의 투사'라는 안보적 접근으로 중국의 대륙붕 정책의 특징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전략은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적 측면을 전부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핵심이익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해양자원 확보와 해양안보 고려라는 속성을 담고 있다. 특히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중일관계의 진전에 영향을 끼치면서 전민족의 해양문화 자긍심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향후 중일공동개발구역은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중일 양국은 성실한 협력과 자제의 의무를 기반으로 해양 협력을 향한 다양한 전략적 고민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구조적 변수로써 미국의 영향력에서 탈피하기 어렵고, 일본과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영토 주권과 직결된 민족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은 한국의 대륙붕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어: 중일공동개발구역, 중일관계, 중국의 대륙붕 정책, 지전략, 해양자원, 해양안보

* 본 연구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3S1A5A2A01074446)와 2023年宁波大学东海研究院自设课题 "东海溯源研究"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001-432314683).

**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 중국 닝보대학교 동해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의는 지전략이란 관점에서 중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경제적 접근과 '힘의 투사'라는 안보적 접근으로 중국의 대륙붕 정책의 특징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공문서와 신문기사 등을 조사·검토하여 국제법과 국내정치학의 연계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일공동개발구역이 당면하고 있는 쟁점-이슈의 이해를 통한 새로운 중일관계 연구의 지평을 열어 이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학술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접근은 중일공동개발구역의 외교사적 추적과 국제관계적 맥락에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시킬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된 UN해양법협약은 '해양의 헌법'이라 불려왔으며, 국제해양질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기존의 기대와 달리 개별 해양안보 이슈에 대한 국가 간의 미시적인 이해관계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거시적 단계에 이르러 그 규범적 모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1] 국제해양질서는 협력적 양상보다 대립적 양상에 더욱 영향을 받는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해양패권 유지를 위해 미국은 동맹 강화와 해군력 증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공세적인 대중 해양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해양강국의 목표로 자원과 안보를 포함한 해양전략을 수립했고, 정부는 태평양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더욱이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해 인도양으로 해양 공간을 넓혀 진출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이러한 국제해양질서 변화라는 외부 환경과 중국의 해양전략이라는 상위 전략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UN해양법협약을 1996년 5월 15일에 비준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해양정책의 기본 입장과 함께 많은 대륙붕 관련 국내법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주목할 것은 1998년 6월 26일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및 대륙붕법(中华人民共和国专属经济区和大陆架法)」의 제정을 통해 중국의 대륙붕 제도를 구체적으로 공표했다는 사실이다.[2] 동 법률은 '국제법

1) 구민교. "국제해양질서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2017. 3. 27), p. 34.

2) 동 법률은 1992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中华人民共和国领海及毗连区法)」을 토대로, 중국의 주권을 영해 바

의 기초 하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써 경계'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3] 반면, 중국의 이웃 국가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은 200해리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규정하면서, 다른 국가와 주장이 중첩되는 경우는 양국 영해기선으로부터 중간선까지의 해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각각 '형평의 원칙'과 '중간선 원칙'으로 동중국해의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동중국해는 자원과 관할권 혹은 도서의 영유권 이외에 항행 안전과 안보 이상으로 지전략(geo-strategy)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일 양국은 군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잠정적인 해결책을 도출했지만,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5] 오히려 중국과 일본은 해양안보를 강화하며 자국 중심의 해양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2008년 6월 체결된 중일공동개발구역은 탈냉전기 국제해양법 체제하에 맺어진 공동개발 방식으로,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을 유보하면서 체결된 합의로 UN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가 규정하는 '잠정약정'에 해당된다.[6] 동중국해에서의 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일 양국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차례의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은 동중국해에서 양국의 입장과 상호의견을 확인하는 정도였으나, 2006년 제6차 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동중국해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일 양국은 제도적으로 연락체계의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후 2007년 10차, 11차 회담을 거쳐 2008년 중일 양국은 전면적 호혜관

깥쪽 경계에서 해양으로 한층 더 신장시켰고, EEZ 및 대륙붕에 대한 중국의 주권 및 관할권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하여 채첩. "중국 국내법상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수용 고찰: 중국의 2개의 해양법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67집(2020), p. 291; 유복근. "중국 해양법의 이론과 실천 사례."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30호(2013), p. 101에서 참조.

3) 中国政府网. "1998年6月26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通过 1998年6月26日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6号发布." September 12, 2005. http://www.gov.cn/ziliao/flfg/2005-09/12/content_31086.htm (검색일: 2023. 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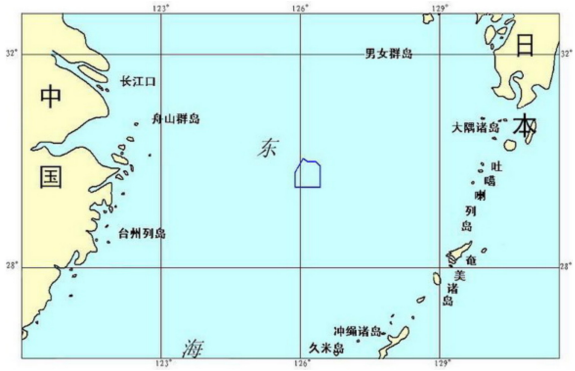
4) 井口武夫. "排他的経済水域と大陸棚のレジーム形成とその相関関係についての考察." 『世界法年報』 第17号(1997), pp. 92-96.

5) 중일 양국은 2008년 공동개발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金永明. "中日东海问题原则共识内涵与发展趋势." 『东方法学』 2期(2009), p. 108; Zhang, Xinjun. "Why the 2008 Sino-Japanese Consensus on the East China Sea Has Stalled: Good Faith and Reciprocity Considerations in Interim Measures Pending a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42, No.1(Winter 2011), p. 53; 董世杰. "争议海域既有石油合同的法律问题研究." 武汉大学博士学位论文(2016), p. 28에서 참조.

6) 이러한 잠정약정이 설정된 중일공동개발구역은 당사국 간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전후 연안국의 효율적 관할권 행사에 대한 검토가 병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희철.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1호(2012), p. 33에서 참조.

계 구축과 함께 6월 18일 동중국해 자원의 공동개발에 합의하게 되었다.[7] 아래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일 양국이 합의한 공동개발구역은 동중국해의 북부지역에서 7개의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다각형 형태의 블록으로 설명된다. 이 합의와 관련하여 우다웨이(武大伟)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측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의 손해, 그리고 법적 입장과 주장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춘샤오(春晓)에 대한 중국의 주권적 권리 인정"을 전제로 도출했다고 강조했다.[8]

〈그림 1〉 동중국해 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중일공동개발구역



좌표점	북위	동경
1	北纬29°31'	东经125°53'30"
2	北纬29°49'	东经125°53'30"
3	北纬30°04'	东经126°03'45"
4	北纬30°00	东经126°10'23"
5	北纬30°00'	东经126°20'00"
6	北纬29°55'	东经126°26'00"
7	北纬29°31'	东经126°26'00"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08).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핵심이익 확보를 위한 지전략을 소개함과 동시에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안보 고려로써의 중일공동개발구역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원칙적 합의」는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중일공동개발구역의 형성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실리적 측면을 강조한 잠정협정으로 도출한 중일공동개발구역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륙붕 정책의 특징과 도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으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2028년 한일대륙붕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은 '관망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지, 혹은 과거 한일공동개발구역(JDZ: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에서 한일 양국은 중국과도 본격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교섭에 착수할 것인지, 혹은 한·중·일 3국이 새로운 동중국해 해양자원에 관한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할 것인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

7) 사토 노리코·김진기. "일본의 해양정책: '반응국가'로부터의 탈피?." 『일본연구논총』 제37호(2013), p. 130.

8) 中国政府网. "外交部副部长就中日东海问题原则共识发表谈话." June 19, 2008. https://www.gov.cn/xwfb/2008-06/19/content_1021854.htm (검색일: 2023. 6. 12).

Ⅱ. 핵심이익으로서 지전략: 해양자원 확보와 안보의 고려

지전략은 지정학(geo-politics)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리 공간에 근거한 전략 구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치-경제-관념-기술이 상호 연결된 복합적인 전략'이라고 정립할 수 있다.[9] 여기에서 정치-경제-관념-기술은 상호 구성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전략을 표현하는 지리적 인식, 지리적 이해관계, 지리적 권력 투사가 맞물려 공존한다. 이 개념은 주로 지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대외정책의 한 유형으로, 정치경제 및 안전보장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약하거나 영향을 주며, 국익을 도모하고 지키는 방략(方略)이다.[10] 지전략이란 개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지정학적 목표, 지방, 지역 또는 글로벌 차원에 해양정책 분석에도 적합하다.[11]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지전략은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동중국해에서 해양안보와 자원 확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2012년 5월 22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王家瑞)는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가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표명하며, 영유권 문제의 양보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12] 중국 정부는 '핵심이익'의 제시를 통해 국가이익의 명확한 우선순위, 특히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의 범주 또는 영역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도서 영유권 등과 관련된 현안들이 불거지면 보다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해양강국으로서 핵심이익 확보를 위한 지전략을 운용하는 것은 국가대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중국의 지전략 운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중국의 해양자원 확보와 안보 강화가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본은 예의주시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륙붕 정책과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중일 간 대륙붕 또는 EEZ의 관할권을 둘러싼 해양경계획정을 해양법의 관점에서 진단한 연구가 있다. 이석우·박영길은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 해양경계획정, 해양

---

9) 오승희·박창건. "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국방연구』 제63권 제3호(2020), p. 32.

10) 程广申. 『地缘战略论』 (北京: 国防大学出版社, 1999), p. 16.

11) Dhirendra, Kumar Veer. "Geostrategic considerations in road building in the himalayan borderland: A comparative study of India and China." *disertasi PhD*(2011); 황보가람·박창건. "지전략으로서 일본의 지역구상: 인도-태평양 구상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6권 제4호(2020), p. 180.

12) 중국의 '핵심이익'은 2009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간 전략경쟁대회에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인 다이빙궈(戴秉国)가 '중미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상호이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및 자국 핵심이익의 보호'라고 주장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이빙궈가 제시한 핵심이익은 첫째,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기본제도 유지; 둘째, 국가안보와 영토 및 주권 보호; 셋째,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보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원의 공동개발을 검토했다.[13] 장동쟝·우웨이리(张东江·武伟丽)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중일 동중국해 경계획정 문제의 초점과 유래를 분석하고 양측의 권리 주장과 법리상의 게임을 깊이 탐구하여 양자 간 평화적 담판이 이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기본 방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14] 리훙타오·천사오이(李洪涛·陈少宜)는 국제법에 따르면 자연연장의 원칙은 대륙붕 개념의 기반이며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자연연장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중국의 입장이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5] 반면, 오시마 에이치(大嶋英一)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휩싸이는 것은 UN해양법협약을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륙붕 경계획정 등을 포함한 해양정책에서 협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했다.[16]

둘째는 중국의 대륙붕 정책에 관한 관심이 지정학으로 전이되거나 지경학과 연계성이 있는 연구가 있다. 류중민(刘中民)은 중국이 해양안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거시적으로 중국 해양안전을 중시하고 미시적으로 중일 대륙붕 분쟁을 포함한 해양권익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쟝주·장즈룽(姜姝·张植荣)은 에너지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일 해양분쟁을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있다고 간파했다.[17] 이동률은 중국이 기존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의 제한적 위상을 벗어나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체제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조망했다.[18] 오승희·박창건은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일 해양 갈등도 첨예화되고, 중국은 해양안보를 강화하며 자국 중심의 해양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9] 박창건은 대륙붕 경계·권리에 대한 중국 입장을 패권국으로서의 부상과 복합적 해양전략과 함께 주목하면서, 2008년 중일 합의 사례로 동중국해 내에서 중국의 점진적 현상변경 가능성에 대해 진단했다.[20]

셋째는 중일공동개발구역의 효율적 공동개발을 위한 대응방안을 해양 거버번스의 차원에서 논의한 연구가 있다. 해양 거버넌스는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21] 이러한 의미에서 동중국해는 협력과 갈등이 복합

---

13) 이석우·박영길.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과 자원공동개발.” 『STRATEGY 21』 제15권 제2호(2012).

14) 张东江·武伟丽. “论中日东海海域划界问题及其解决: 从国际法角度的研究.” 『世界经济与政治』 4期(2006).

15) 李洪涛·陈少宜. “论中日东海大陆架划界争端.” 『深圳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3期(2016).

16) 大嶋英一. “中国の海洋政策と海洋法: 中国の海洋法解釈と国家実行.” 『アジア研究シリーズ』 100(2019).

17) 姜姝·张植荣. “东海油争: 能源地缘政治与中日钓鱼岛争端.” 『中国地质大学学报(社会科学版)』 2期(2014).

18) 이동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경학과 지정학의 동학.”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집 제3호(2021).

19) 오승희·박창건. “중일 대륙붕 경계획정의 정치적 함의: 석유가스전 공동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2호(2022).

20) 박창건.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이행 및 지속 방안 연구』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2a), pp. 76-92.

적으로 작동하는 중첩구조이기에 제도화된 해양 협력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종완·심어진은 현재 중일공동개발구역의 경계획정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비롯한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베이징과 도쿄가 합의 의무 이행을 통해 동중국해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협력 레짐'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해양 협력의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고 제시했다[22]. 저우 커위안(Zou Keyuan)은 동중국해 내의 모든 국가들은 공동 발전을 위한 해양 협력 프레임워크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3] 가메다 아키히사(亀田晃尚)는 중일 쌍방의 신뢰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완전히 개선되는 것과 더불어 2008년 중일 공동개발 합의 실현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24]

이상의 연구들은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 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은 중일공동개발구역의 공동개발 문제에서 일본과 입장의 차이를 보였고, 자국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원용했다는 주장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해양자원 확보와 자원 고려로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이 해상민명대를 전초 부대로 활용하면서 중일공동개발구역이 중일 양국의 대립 혹은 우발적인 충돌로 비화되는 역학관계에 놓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핵심이익 확보를 위한 중국의 지전략이라는 분석 틀에서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이 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정치·동태적 변수는 '해양자원'과 '해양안보'이다.

먼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해양자원 체제에서의 영향력 강화와 함께 지전략적 운영이 추진되어왔다. 이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지경학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책 의지를 표출하면서 해양의 자원개발에 관련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석유와 가스 매장지역인 중일공동개발구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원안보 등을 고려하여 동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중일관계 전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하여 중일 양국이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 이해

---

21) 박창건. "해양 거버넌스의 재구축을 향한 일본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13~2014년도 해양법·정책·안보·자원 및 환경 분야에 관한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7권 제2호(2015), pp. 197-198.

22) 홍종완·심어진. "동중국해에서의 한·중·일 대륙붕 중첩주장수역의 공동개발에 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제1호(2009).

23) Zou, Keyuan. "Seeking joint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in Zou, Keyuan (eds.) *Maritime Cooperation in Semi-Enclosed Seas: Asian and European Experiences* (Netherlands: Brill Nijhoff, 2019).

24) 亀田晃尚. "東シナ海の海洋資源と日本の外交政策の変容: 尖閣問題を中心に." 法政大学博士学位論文 (2020).

관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충되기도 하며 동중국해 해양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일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공세적 대륙붕 정책을 추진하여 2008년에 형성된 중일공동개발구역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적 차원에서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국영석유회사와 당·정부 간의 상호작용 속에 전개된다. 중국의 대륙붕 자원개발은 국영석유회사가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석유자원개발전략 수행은 국제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공산당 정권의 리더십이나 국가해양국, 상무부와 같은 다른 정책 행위자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Ⅲ. 2008년 중일공동개발구역의 합의 과정

미요시 마사히로(三好正弘)는 공동개발을 "영해 이원의 해저에서 탄화수소 자원의 공동탐사와 (또는) 개발의 기능적 목적을 위해 고안된 잠정적 성격의 정부 간 약정"으로 정의하고 있다.[25] 공동개발구역은 공동개발협정에 의해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추후 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잠정적인 해결책으로 역할을 하지만, 확정된 경계선을 대신할 영구적인 해결책으로도 선택될 수 있다.[26] 하지만 경계를 획정한 국가들은 특정한 유정(油井)이나 광상(鑛床)에 대해서 광구통합 방식의 선호라는 경향이 있기에 최종 경계선의 일부로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는 사례가 흔한 것은 아니다.[27]

중국과 일본은 각각 1996년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이후, "해양법에 관한 협의"라는 이름으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2003년까지 14번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고, 2004년에는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의"로 이름을 바꾸어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2008년까지 중일 양국은 총 11차례의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 및 공동개발 의제를 포함한 전반적 갈등 관리 협상을 추진했다. 아래의 〈표 1〉은 중일 간의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회담의 일정과 주요 논의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25) Miyoshi, Masahiro. *The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in relation to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Durham: Ibru, 1999), p. 3.

26) Townsend-Gault, Ian, and Stormont, William G. "offshore Petroleum Joint Development Arrangements: Functional Instruments? Compromise? Obligation?." in Blake, Gerald Henry (eds.). *The peacefu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sources* (Dordrecht: Graham & Trotman / Martinus Nijhoff, 1995), p. 51.

27) Gault and Stormont(1995), pp. 51-52; 김자영.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 25.

〈표 1〉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의' 회의 일정과 주요 논의 사항

구분	회차	일자	주요 의제 및 논의 사항	주요 참석자
1단계: 입장 확인	1차 2차 3차	2004.10.25. 2005.5.30. 2005.9.30.	동중국해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각자의 입장과 우려를 표명; 대화와 협상을 통해 동중국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모색하기로 합의; 하지만 공동개발을 둘러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 존재	추이텐카이(崔天凯), 야부나카 미토지(薮中三十二)
2단계: 방향성 모색	4차 5차 6차 7차	2006.3.6. 2006.5.18. 2006.7.8. 2007.3.29.	중일 양측은 향후 공동개발 방향을 확인하고 위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 제6차 회담에서 중일 양국은 해상 핫라인(hotline) 구축에 합의	후정위에(胡正跃), 사사에 겐이치로(佐贤江賢一郎)
3단계: 공감대 형성	8차 9차 10차 11차	2007.5.25. 2007.6.26. 2007.10.11. 2007.11.14.	주로 공동개발에 관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제11차 협의에서 중국 측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이견을 해소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성의를 충분히 표명	후정위에 , 사사에 겐이치로

* 출처: 宋婷·高亨超. "界定中日东海共同开发海域的法律问题." 『世界经济与政治』 4期(2006), pp. 43-48; 贾宇. "中日东海共同开发的问题与前瞻." 『世界经济与政治论坛』 4期(2007), pp. 49-54; 中国政府网. "中日第十轮东海问题磋商商讨共同开发对象海域等." October 11, 2007. https://www.gov.cn/jrzg/2007-10/11/content_774162.htm (검색일: 2023. 6. 26); 高兰. "中日海洋战略视角下的东海油气开发合作." 『世界经济与政治论坛』 6期(2008), pp. 67-74 자료를 바탕으로 취합 정리함.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회담은 논의 과정에 따라 ① 입장 확인, ② 방향성 모색, ③ 공감대 형성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28] 먼저 1단계(제1차~제3차)에서는 동중국해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2004년 10월 25일 추이텐카이(崔天凯)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야부나카 미토지(薮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은 베이징에서 제1차 동중국해 문제를 다루는 협의회를 가졌다. 그들은 동중국해에서 중첩되고 있는 양국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재 이 수역을 경계미획정된 공간임을 분명히 주장했다. 양측은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원만하고 공정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법의 기반을 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29] 2005년 5월 30일 중국과 일본은 베이징에서 제2차 동중국해 문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양국 정상이 자카르타 회담에서 도출했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동중국해 문제를 적절히 처리

28) 高兰(2008), pp. 68-69.

29) 中国新闻网. "中日就东海问题进行磋商 同意继续对话解决纠纷." October 26, 2004. http://www.chinanews.com.cn/news/2004/2004-10-26/26/498525.shtml (검색일: 2023. 6. 24).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 동의했다.[30] 하지만 일본 측은 중국 측에 동중국해 대륙붕 탐사 관련 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파행을 맞이하였다. 이후 2005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도쿄에서 제3차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의"가 다시 개최되었다.[31]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측이 중국 측에 공동개발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이 공동개발 구역으로 제안한 지역은 중일 '중간선'을 포함하는 양측 해역, 즉 춘샤오(春晓, 일본명 시라카바 白樺), 텐와이텐(天外天, 일본명 가시 樫), 돤차오(断桥, 일본명 구스노키 楠), 룽징(龙井, 일본명 아스나로 翌檜)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동개발'의 범위가 '중간선'의 동쪽 지역이라며 일본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 결과 3차 협의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다.

2단계(제4차~제7차) 협의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중일 양국이 공동의 방향성을 모색해 나갔다. 2006년 3월에 개최된 제4차 국장급 회의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및 한일공동개발구역(JDZ) 부근에서 양국이 가스전을 공동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부근의 공동개발에 관해서 중국 측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다.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급증이나 이미 가스전 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 국내 사정을 설명하면서 가스전 공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일본에게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제안은 협상 과정에서의 단순한 시간 벌기로 인식하고 공동개발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32] 이후 중일 양국은 5월에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동중국해 공동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여 공동개발 방향을 확인했다.[33] 2006년 7월 제6차 회담에서부터 동중국해에서 발생할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중일 양국은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일 양국은 해상 핫라인(hotline)을 조기에 개설하여 동중국해의 갈등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34] 이후 제7차 협상은 2007년 3월 29일 도쿄에서 열렸다. 후정위에(胡正跃)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일본 외무성 사사에 겐이치로(佐贤江賢一郎)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팀을

30) 新华网. "专家：东海磋商凸显中日对话解决问题意愿." May 31, 2005. https://mil.news.sina.com.cn/2005-05-31/2341293024.html (검색일: 2023. 6. 24).

31) 中新社. "中日第三轮东海问题磋商结束 双方同意加快进程." October 1, 2005. http://lianghui.china.com.cn/chinese/sy/987078.htm (검색일: 2023. 6. 24).

32) 東京新聞社. "東シナ海ガス田問題深まる溝 中国『尖閣で共同開発』政府反発『時間稼ぎだ』." 『東京新聞』 (2006. 3. 9).

33) 中国经济网. "第五轮中日东海问题磋商在东京举行." May 18, 2006. http://www.ce.cn/macro/gjbd/zg/200605/18/t20060518_7009758.shtml (검색일: 2023. 6. 24).

34) 中国青年报. "中日再次磋商东海问题." July 10, 2006. http://zqb.cyol.com/content/2006-07/10/content_1441421.htm (검색일: 2023. 6. 24).

이끌고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개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나, 공동개발을 둘러싼 경계획정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이견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중일 양국은 상당한 관계 개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양국 정상의 방문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되었기 때문이다.[35] 이러한 중일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일본이 중국의 '분쟁을 접어둔 채, 공동개발'을 수락함으로써, 2007년 4월 11일 해저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36] 다시 말하면 중국과 일본은 공동개발을 둘러싼 문제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

3단계(제8차~제11차)에서는 중일 양국이 동중국해 해저 자원의 공동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중일 양국의 고위층 관료들에 의해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의"가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제8차 동중국해 문제에 대한 양국의 국장급 협의는 2007년 5월 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했다.[37] 하지만 중일 양국은 여전히 경계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형평의 원칙'과 '중간선 원칙'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제9차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의는 2007년 6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공동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했다.[38] 중일 양국은 제10차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의를 2007년 10월 11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공동개발 대상 해역과 관련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39] 이후 2007년 11월 14일 도쿄에서 제11차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에서는 양국이 공동개발 관련 문제를 보다 솔직하게 논의했으며, 중국 측은 우호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면서 이견을 해소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성의를 표명했다.[40] 그 결과 같은 해 12월 28일 중국을 방문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후진타오(胡

35) 2006년 10월 아베(安倍) 수상의 '얼음을 깨는 방문(破冰之旅)', 2007년 4월 원자바오(温家宝) 총리의 '얼음을 용해시키는 방문(融冰之旅)'이 추진되었다.

36) 이 회견은 총 8개 항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의 발전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 제6항이 동중국해에서의 공동개발에 관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中国政府网. "中日联合新闻公报." April 11, 2007.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621243.htm (검색일: 2023. 6. 26)에서 참조.

37) 中国政府网. "中日第八轮东海问题磋商举行 双方阐述各自设想." May 25, 2007. https://www.gov.cn/jrzg/2007-05/25/content_626058.htm (검색일: 2023. 6. 26).

38) 中国新闻网. "第9轮中日东海问题磋商 探讨共同开发有关方案." June 26, 2007. https://www.chinanews.com/gn/news/2007/06-26/965798.shtml (검색일: 2023. 6. 26).

39) 中国政府网. "中日第十轮东海问题磋商商讨共同开发对象海域等." October 11, 2007. https://www.gov.cn/jrzg/2007-10/11/content_774162.htm (검색일: 2023. 6. 26).

40) 中国新闻网. "中日第11轮东海问题磋商就共同开发等交换意见." November 14, 2007. http://www.chinanews.com.cn/gn/news/2007/11-14/1077684.shtml (검색일: 2023. 6. 26).

锦涛)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과의 연쇄회담을 갖고,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과 영유권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로 합의했다.[41] 특히 원자바오 총리와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동중국해 문제에 관해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2007년 4월 체결한 중일 양국 간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동중국해를 평화, 협력과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공동개발을 추진하는데 동의했다.[4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부터 본격화된 동중국해 석유·가스전 개발 분쟁은 중일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정부 간 협상과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쳐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도출했다. 그 결과 2008년 6월 베이징과 도쿄는 '전면적 호혜관계' 구축의 상징적인 과제로 정치적 결단에 의한 동중국해 자원 공동개발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일명 '2008년 합의'로 칭해지며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원칙적 합의」라는 제목으로 크게 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조항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협력에 관한 것으로, 동중국해를 '평화, 협력 및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경계획정이 되기 전까지 협력을 하자는 내용이다. 두 번째 조항은 공동개발구역에 관한 양해 사항이며, 세 번째 조항은 춘샤오/시라카바 가스전 개발에 일본 기업의 참여 양해에 관한 내용이다.

Ⅳ. 중국 대륙붕 정책의 특징과 도전

중국과 일본은 2008년 정상회담을 통해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중일 양국이 합의한 공동개발구역은 일본이 주장하는 양국의 중간선 해역에 있는 춘샤오/시라카바 유전과 룽징/아스나로 남부 해역 등 3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일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기본 입장의 차이, 영해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처해 있다. 2010년 일본과의 GDP 규모가 역전되면서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반일' 카드를 이용해 정통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대한 결연한 태도는 중국 내에서 반일의 강력한 저항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반면 중국 위협론에 공감하는 일본 안보 현실주의자들은 아베 내각의 대중 견제 강화에 동조

41) 홍인표. "경제밀월 노린 中·日 '실리의 건배'." 『경향신문』 (2007. 12. 28).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0712281818541#c2b (검색일: 2023. 7. 22).

42) 中国新闻网. "中日两国领导人就东海问题达成四点共识." December 28, 2007. http://www.chinanews.com.cn/gn/news/2007/12-28/1118076.shtml (검색일: 2023. 6. 26).

하기 시작했다.[43]이처럼 중일 양국은 더욱 공세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결국 2008년에 이루어진 '원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지전략적 관점에서 중일공동개발구역의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을 동중국해, 중일관계, 그리고 국내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중국의 대륙붕 정책의 특징과 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적극 개발'로서의 대륙붕 정책의 특징

중국 정부는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향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연안국 간의 대륙붕 경계는 그 당사국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4]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은 '형평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내법 관계 변화와 연계하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주장하는 중국은 UN해양법협약에 EEZ을 도입하고 대륙붕의 한계를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다.[45] 흥미롭게도 2008년의 '원칙적 합의'에 따라 형성된 중일공동개발구역은 JDZ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86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구역에 불과하지만, 중국 정부는 춘샤오/시라카바 유전을 포함한 4개의 유전을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인근의 수역에서 개발하고 있다.[46] 주지할 사실은 이 구역이 해양자원 개발, 분쟁수역 관리, 해양경계획정 등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자원과 안보 영역에서 국가정책을 지전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은 중일공동개발구역을 지전략적 가치를 기반으로 동중국해의 핵심이익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의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동중국해 차원에서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해양자원의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되, 관련 국가들과의 합의를 거쳐 해결하고 협상 과정에서 제반 요소와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47] 더

---

43) 서승원. "시진핑과 아베 신조의 중일 관계: 군사·안보적 고려, 지정학적 환원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게임." 『일본연구논총』 제39호(2014), p. 174.

44) Ma, Ying-jeou. *Legal Problems of Seabed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Baltimor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84), p. 54; 박창건·김지예. "동북아 지역 협력으로서의 한중해양경계획정: 이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0권 제3호(2013), p. 15.

45) 이창위·정진석. 『해양경계 관련 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주장 및 타당성 분석』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p. 108; 이석우·신청훈·박영길. "해양관할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해양국가의 입법상의 노력." 『법학연구』 제13집 제1호(2010), p. 38.

46) 박창건. "Post-2028년을 대비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아시아 브리프』 제3권 제17호(2023). https://asiabrief.snu.ac.kr/?p=1036 (검색일: 2023. 6. 4).

욱이 해양자원 확보를 포함한 고려 사항에서 중국의 대륙붕 정책 추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해양자원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 시진핑(习近平) 지도부에서도 국가정책에서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미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따라 중국은 동중국해 해양자원 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실제로 동중국해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도서 쟁탈전이 아닌 에너지 안보이다.[48] 석유와 가스 매장지역인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해양자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동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해양자원 확보를 위하여 일본과의 '협조적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49] 예를 들어, 후진타오와 후쿠다 총리는 중일 양국의 해양조사와 해양개발을 구체화시켰고,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해양자원의 조사와 개발을 명확히 했다.[50] 게다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 개발, 생산, 소비 등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대일로' 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51]

2020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신시대의 중국 에너지 개발 백서(新时代的中国能源发展白皮书)』를 발표하고, 미래 30년 중국의 에너지 발전전략과 정책이념을 구체화시켰다. 동 백서에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사항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동중국해 해양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일공동개발구역의 춘샤오/시라카바 가스전 공동개발 사례는 중국의 대륙붕 정책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에 관해 합의를 했지만, 춘샤오/시라카바 가스전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중국 정부는 춘샤오/시라카바 가스전 공동개발에 관해 중국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일본 기업의 개발 참여를 환영한다고 표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일방적인 개발 행위를 진행해왔다."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중일 양국은 해양자원 영역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악성 경쟁은 양국에게 엄청난 손실과 대가를 초래하고 있다.[52] 이는 중일공동개발구역

47) 世界知识出版社. 『中国代表团出席联合国有关会议文件集』 (北京: 人民出版社, 1978), pp. 126-127; 世界知识出版社. 『中国代表团出席联合国有关会议文件集』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1979), pp. 83-84; 양희철(2012), p. 22.

48) 童舜尧. "单独开发思维下的中国能源战略嬗变: 以中日东海能源争端为例." 『西南石油大学学报』 1期(2016), p. 18.

49) 五百籏頭眞. "冷戦後の日本外交とリーダーシップ." 『国際問題』 468(1999); 최청호. "동아시아 지역주의 부상에 따른 중-일 관계: 협조적 경쟁을 향하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제1호(2007).

50) 손기섭. "중일 해양영토 분쟁의 원인과 특성: 갈등사이클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3집(2012), p. 287.

51) 이동률(2021), p. 278.

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 향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의 〈표 2〉는 2012-2021년 중국 석유·천연가스 수입량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중국 원유 수입량은 2020년 대비 5.4% 줄어든 5억 1298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국내 과잉 연료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유업자를 규제하고 수요 부족에 재고가 대량으로 쌓였기 때문이라고 시장에선 분석했다. 한편, 천연가스 수입은 2021년에 19.9% 증가한 12,136만 톤에 이르렀다.[53]

〈표 2〉 2012-2021년 중국 석유·천연가스 수입량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석유 (만톤)	27,103	28,174	30,837	33,550	38,101	41,957	46,189	50,568	54,201	51,298
천연 가스 (억㎥)	421	525	591	611	746	946	1,246	1,332	1,403	1,675

* 출처: 中能传媒研究院(2022)

둘째,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중일관계 향방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동중국해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림랜드(Rimland)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는 이중적 위계 구도하에서 중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일치하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상충하기도 한다. 탈냉전 이후 중일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안보·정치 분야의 갈등(세력균형)이 깊어지는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였다.[54] 하지만 2012년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를 계기로 중일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 사건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를 유보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관할을 용인한다."는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유지되어 온 양국의 암묵적 합의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을 의미했다.[55] 해양안보·자원 고려의 우위,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관념화, 그리고 민족주의 게임이란 지전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공세적으로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을 추진해왔다.[56] 이는 2008년에 체결된 중일공동개발구역에서 지향했던 양

52) 孙冰冰. "论中日东海争端与能源合作." 『太平洋学报』 6期(2005), p. 91.

53) 中能传媒研究院. 『中国能源大数据报告(2022)』 (北京: 中能传媒研究院, 2022), pp. 36-47.

54) 조양현.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對中)정책: 일본 민주당 정부 출범 후의 일·중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제2011권 제2호(2012), p. 118.

55) 孫崎享. 『日本の国境問題: 尖閣·竹島·北方領土』 (東京: 筑摩書房, 2011), p. 35.

56) 서승원(2014), pp. 163.

국의 협력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실제로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국유화' 사건 이후, 중국 어민들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주변에 공선(公船)을 반복적으로 진입시켜 왔다. 구체적으로 2011년 중국의 공선이 일본 영해를 진입한 것은 2차례에 불과했지만, '국유화' 조치 이후 이듬해인 2013년에는 188차례로 늘어났다.[57] 더욱이 2012년 5월 개설된 제1차 중일 해양협의회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다.[58] 해양관할권 확대의 일환으로 공산당 지도부는 해군력 증강을 강조해왔다. 예를 들면, 중국의 항모전단은 주변 해역에서 해양관할권과 해양권익을 확대하여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발발할 것을 대비하여 강압 능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해양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 해군은 신형 호위함 및 초계함을 동해함대와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해함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연안 통제능력 및 영유권 분쟁을 대비하여 신속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59] 2016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근해 대규모 어선단 진입 사건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첨예화되고 있는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핵심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화된 조직을 갖춘 해상 민병을 안보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60]

한편, 중일 양국은 충돌의 장기화로 인한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불안과 국내 경제안보 강화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주목받아왔다.[61] 2014년 11월 베이징과 도쿄는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4개 항의 합의(中日处理和改善中日关系四点原则共识)'를 발표하고, 양국의 정상회담 개최와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했다.[62] 이후 중일 양국은 2012년 개설된 방위 당국자 협의를 재개했고, 2015년 5월 29일 양국 간 '해공연락 메커니즘'을 조기에 운용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흥미롭게도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 해저 자원 공동개발 혹은 합작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개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동중국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처럼 중일 간의 복합적 전개 양상은 공동개발

57) 이동률. "중국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한 전략과 요인: 댜오위다오(钓鱼岛)/센카쿠(尖閣)열도 분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2015), p. 63.

58) 罗国强. "《中日东海问题原则共识》与东海共同开发: 结合钓鱼岛与防空识别区问题的讨论." 『法学论坛』 1期(2015), p. 39.

59) 김현승.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 특징 및 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 p. 116.

60) James Kraska and Michael Monti. "The law of naval warfare and China's maritime militia."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 91, No. 1(Summer 2015), 453-454: Chubb, Andrew. *Chinese Nationalism and the "Gray Zone": Case Analyses of Public Opinion and PRC Maritime Policy* (Newport, RI: Naval War College Press, 2021), pp. 71-73.

61) 북한의 안보위협, 국제적 대테러,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흥규.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와 중일관계 분석."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8집(2014), p. 26에서 참조.

62) 金永明. "新时期东海海空安全机制研究." 『中国海洋大学学报』 1期(2020), p. 10.

의제를 포함한 갈등 완화 협상 추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셋째, 국내적 차원에서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국영석유회사와 당·정부 간의 상호작용 속에 전개된다. 중국의 대륙붕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국제정치도 중요하지만, 정당, 정부기관, 석유기업 등의 국내 행위자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은 안정된 석유확보를 위한 진출에서 자국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3대 국영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해양석유그룹(CNOOC)에 의해 정부의 외교정책과 별도로 자산인수와 입찰참여 등의 해외 석유자원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국영석유회사는 국가의 통제를 받아 에너지 부분의 정책 목표 실현을 회사의 목표로 하며, 이는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이익을 고려하여 장기적 차원의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다.[63] 이 중에서 해양석유그룹은 현재까지 보하이만(渤海湾)이 남중국해에서 유전개발 활동을 집중해 왔으나 동중국해에서의 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2년 말까지 동중국해의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동 회사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의 약 3.1%, 약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7년의 2.8%, 1.0%에 비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64] 이처럼 중국 대륙붕 자원개발은 중국해양석유그룹이 주도하고 있고, 동중국해 석유개발에 대한 점진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륙붕 자원개발은 국영석유회사가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석유자원 개발전략 수행은 국제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공산당 정권의 리더십이나 국가해양국, 상무부와 같은 다른 정책 행위자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중국해양석유그룹의 대륙붕 자원개발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석유해외의존도 상승, 천연가스 수요 증가 등 문제가 가시화되자 국영석유사에게 자본투자비를 지시했다.[65] 또한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은 해양문제를 '핵심이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해양굴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바다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해양국의 기능확대와 조직개혁을 실시해왔다. 2017년 5월 3일, 국가해양국은 「심해저 자원 자원 탐사·개발 허가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동 법률에 의하면,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를 획득하는 공민, 법인이나 기타조직은 법에 따라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허가증에 규정된 업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국의 감독과 관리를 받게 된다.[66] 물론 2018년에 기

63) 석유 관련 중국의 세 개 기업은 모두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의 관할 하에 있는 이른바 '중앙기업(中央企业)' 131개(2023년 기준)에 포함되는 초대형 기업들이다.

64) 中国海洋石油有限公司. "中国海洋石油有限公司2022年年度报告." April 11, 2023, p. 25. https://www.cnoocltd.com/module/download/down.jsp?i_ID=15337536&colID=3881 (검색일: 2023. 10. 12).

65) 변국영. "해외자원개발, 경쟁국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퇴보하나." 『에너지데일리』 (2020. 1. 30).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31 (검색일: 2023. 9. 26).

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국가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되었지만, 설치법률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특히 해경은 영유권 분쟁지역에 설치된 외국의 석유 시추 시설 등에 대해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대륙붕 정책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대륙붕 자원개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정책결정자, 정부, 국영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2018-2022년 동중국해 중국해양석유그룹의 채굴작업 동향

생산량 분류 /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석유생산량(배럴/일)	3,347	3,902	5,377	5,493	6,014
천연가스 생산량(백만제곱피트/일)	49.4	44.9	57.4	68.6	79.9
생산량 합계(석유환산배럴/일)	11,580	11,389	14,948	16,927	19,327

* 출처: 中国海洋石油有限公司(2023), pp. 12-15

2. '지전략 충돌'로서의 대륙붕 정책의 도전

중국과 일본은 2008년 동중국해 해저 자원의 공동개발과 합작개발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중일 양국이 해양영토 주권에 관련된 문제를 일단 보류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공동의 이해가 도출된 결과로서 해양협력의 공간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중일공동개발구역은 JDZ에 인접한 아주 작은 구역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합의 사항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67] 주지할 것은 합의 이후에도 중국은 핵심이익 확보의 일환으로 개발 및 해양탐사를 독자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에 해양개발 구조물의 일부에 군사시설까지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는 베이징과 도쿄의 긴장관계를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역내의 해양 안보적 위협의 상승을 초래하고 중국의 해양 팽창정책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미중 전략 충돌로 인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다. 동중국해는 중국의 해양굴기와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전략이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중국 견제와 양안

66) 中国海洋发展研究中心. "有效规范深海区域勘探开发管理——大洋办主任刘峰详解《深海海底区域资源勘探开发许可管理办法》." May 4, 2017. http://aoc.ouc.edu.cn/2018/1212/c15169a231066/pagem.psp (검색일: 2023. 10. 12).

67) 이석우·박영길(2012), p. 198.

문제 간섭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다. 주지할 사실은 동중국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중일 간의 협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공해 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동중국해에서 영향력을 여전히 발휘하면서 중국과의 해양전략 경쟁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관할권이 미치는 대륙붕의 상부 수역에서 미국이 군사 활동을 전개하면 적극적으로 대항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중일 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더라도 베이징의 입장을 고려하면, 중국 측에 속하는 중간선 안쪽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제어될 수 있다.[68] 이는 향후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해양자원·안보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은 EEZ의 상부 수역에 관해서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항해를 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해 자유의 원칙을 간주하고 있기에, 주권 국가는 '일방적이며 무제한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일공동개발구역 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인 자원개발 및 해양탐사를 지속하고 해양개발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활동은 워싱톤의 해양 군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지전략적 판단으로 해석하고 있다.[69]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자원개발과 해양탐사에 미국이 간섭한다면 현존 공동개발구역이 미중 간의 해양전략 경쟁에 연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대륙붕 개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견제하게 되면,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오히려 미국과의 경쟁을 지정학과 지경학을 넘어 지전략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동중국해 해저 가스전 개발 구조물 사업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주변 국가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핵심이익 확보'를 제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해저 가스전 개발을 양보하는 선책을 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둘째는 해양자원과 안보 고려 등 공동개발에 대한 중일 간의 입장이 대치한다. 중일 양국은 춘샤오/시라카바를 둘러싼 공동개발 '의지'는 표명했지만, 기타 주변의 다른 유전 개발에 관한 논의, 개발방식에 관한 입장의 차이, 국내법 체제에 따른 해석이라는 점 등에서 여전히 대립의 소지가 남겨져 있다. 이러한 중일 간의 입장의 차이는 신냉전이라는 국제질서 변화에 맞물려 중일관계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특히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은 공동개발을 둘러싼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22년 11월 17일

68) 박창건·윤석정.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과 대륙붕경계획정: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와 중국 변수." 『국제학논총』 제35집(2022a), p. 143.

69) 박창건(2022a), pp. 91-92.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양측은 성심성의껏 대하고 신용으로 교제하며 중·일 4대 정치 문건(중일 관계와 관련한 4대 중요 합의서)의 원칙을 엄수하고, 역사적 경험을 살려 객관적·이성적으로 서로의 발전을 대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동중국해 문제에 관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정상회담을 통하여 일본 측에 전달하고자 했다.[70] 최근 중일관계와 관련하여 류장융(刘江永) 칭화대 교수는 "중일관계가 미중관계보다 더 위태롭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71] 같은 맥락에서 미중 경쟁이 한국 외교의 입지를 좁히는 국제적 차원의 구조라면, 일본의 대중 경쟁과 그로 인한 중일관계의 악화는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지역 차원의 하부구조와 같다.[72] 현재 일본의 해양전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과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만이 주변 해양안보 환경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해양질서 유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해양자원과 안보 이익을 추구하게 했다. 미일 양국의 대중 해상봉쇄, 해도주권과 해양권익의 분쟁, 타이완해협 사태의 변수, 해상통로의 리스크가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이 직면하는 난관이다.[73] 다시 말하면 중국은 중일공동개발구역에서의 해양구조물 설치가 오히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서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 강화 명분을 제공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해양영토 주권과 직결된 양국의 민족주의 촉발이다. 민족주의는 대륙붕 문제와 더불어 영토분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시진핑 정권은 출범과 함께 고도성장 신화의 쇠퇴에 경험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비전을 제시함과 더불어 인민들에게 G2 시대의 중국 부상에 대한 기대를 고양해왔다. 이를 통해 시진핑 체제는 공산당 일당 통치와 권력 집중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74]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와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현재 중국의 대륙붕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일공동개발구역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이다. 특히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은 중국이 주권과 영토 수호에 강력한 의지를 갖

---

70) 안성용. "3년 만에 중일 정상회담…동중국해·대만문제 놓고 신경전." 『노컷뉴스』 (2022. 11. 18). https://www.nocutnews.co.kr/news/5851271 (검색일: 2023. 6. 26).

71) 윤고은. "中 학자 '미중 관계보다 중일 관계가 더 위태로워'" 『연합뉴스』 (2022. 12. 26).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6046100074 (검색일: 2023. 6. 26).

72) 윤석정. 『(정책연구시리즈 2020-17) 중일 역전 이후 일본의 대중 전략: 평가 및 함의』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p. 28.

73) 杨晓丹·杨志荣. "维护海洋权益 建设海洋强国." 『当代世界』 2期(2017), pp. 28-31; 孙健. "新时代建设海洋强国战略研究述评." 『青岛科技大学学报』 2期(2020), p. 101.

74) 이동률. "남중국해 분쟁에서의 중국의 전략과 딜레마."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2019), p. 279.

고 있으며 양보 불가한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중국에게는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 주권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75] 하지만 중국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는 오히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권의 대륙붕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대륙붕 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동중국해의 안정된 동북아 해양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동원하는 민족주의는 정치·사회적 진화의 향방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만약 통제를 벗어나면 오히려 통치 구조의 부담이 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2012년 9월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대한 국유화 결정 이후, 중일 양국은 각각 유엔 총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강경한 표현을 쓰면서 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담은 시위가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어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쳤다. 중일공동개발구역의 이행도 이 사건의 영향으로 좌절되었다. 이후 동중국해 문제는 일본의 군비 확장 및 헌법개정의 도구가 되었다.[76] 한편 중국 내에서의 민족주의 고조, 공세적 대륙붕 정책 수행 등으로 중일 양국은 서로 강수를 두는 정책을 채택했고, 이는 전방면에 걸쳐 역내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77] 이러한 가운데 민족주의적 의식을 부추기는 중국의 언론보도는 대륙붕 정책의 유연성과 외교적 합리성의 발휘를 어렵게 만들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중국의 대륙붕 정책을 핵심이익으로서 지전략이란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일공동개발구역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를 논의했다. 논의는 중국과 일본의 경계미확정의 분쟁지역인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대륙붕 정책이 해양자원과 안보고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은 중일공동개발구역의 공동개발 문제에서 일본과 입장의 차이를 보였고, 자국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원용했을 뿐만 아니라, 해양자원 확보와 해양안보 강화도 함께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 중국은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서 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상민병대를

75) 王恩宝·高嵩峰. “破解中日东海能源争端难题: 兼论钓鱼岛的主权归属问题.”『党政干部学刊』12期(2008), p. 52.

76) 童舜尧(2016), p. 16.

77) 김흥규(2014), p. 22.

전초 부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중일공동개발구역이 중일 양국의 대립 혹은 우발적인 충돌로 비화되는 역학관계에 놓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일공동개발구역은 설정되었지만, 그 뒤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과 차디즈(CADIZ) 설정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 이후 중일관계의 악화가 2017년에 들어서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공동개발 이행을 촉구하는 의제를 상정했다. 그런데도 아직 2008년 합의의 신뢰성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실행 국가가 상대방과의 이해충돌을 경험할 때 점진적(incremental)인 방식으로 현상유지(*status quo*)를 변화한 후 '핵심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

여기서 중국이 대륙붕 정책에서 점진적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다. 먼저 해상 영유권 분쟁에 대한 '힘의 투사'이다. 예를 들면, 동중국해 주변 영공에서 중국의 항공 초계비행 역시 그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정규 중국의 항공기들이 이용된다는 의미에선 전통적 군사력이 투입되지만, 방공식별구역의 진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중국의 안보 고려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전투기뿐 아니라 각종 정찰기와 장거리 폭격기 등이 일본과 중첩되어 있는 차디즈(CADIZ)를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점진적인 고려는 그 대상이 되는 국가의 적절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을 어렵게 하여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야의 현상유지 상황을 중국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가 결국 의도한 '핵심이익' 확보를 달성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영향력 확장은 자신이 전략적 가치를 둔 영역을 군사력으로 선점하기보다 어선, 해양 순시선, 민병대를 점진적인 방식으로 동원하여 영향력을 극대화시킨 후 각종 건설 관련 선박과 군함을 동원하여 여기에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을 건설한 후 중국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은 해양관할권의 점진적 확대(creeping jurisdiction)로 정리될 수 있다. 중국은 대륙세력으로서 해양세력의 패권에 반대하는 정책을 취해왔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변화해 나가면서 그러한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78]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은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중국해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2028년이 되면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록 JDZ가 한일 양국의 기능적 역할, 협동적 행위의 강화, 규범적 통합을 제도회된 협동으로 발전시켰지만, 동 구역은 동북아 해양지역 질서 재편

78) 이창위.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34호(2011), pp. 332-333.

에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로부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JDZ를 자국을 배제한 채 합의한 불법 협정으로 간주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79] 또한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일 간 잠정 경계선을 설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으로부터 대륙붕 제도의 근본적 원칙에 어긋난 행위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은 국제법의 기초 위에 형평의 원칙에 대륙붕 경계의 합의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주장에 대해 대륙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협정의 미래를 고려하는 데 있어 중국의 행동 패턴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중국은 외교적 현실을 고려하여 JDZ에 진입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강도와 중일·한일관계의 전개 양상에 따라 JDZ에 대한 중국의 정책 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된다면, 한국 혹은 일본의 독자적 JDZ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중국과 일본의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넓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현상변경에 의한 중국의 독자적 개발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80] 이처럼 현 상황으로 2028년에 협정이 종료될 경우 JDZ에서 한·중·일 3국은 본격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교섭에 착수하거나 중국이 참가한 혹은 중국의 이해를 고려한 새로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81] 특히 한일 양국은 post-2028년을 대비하여 JDZ에서 해양자원과 안보라는 공동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해저 자원의 공동개발을 제도화된 협력체제로 구축하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이행 및 지속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79) 「世界和日本」数据库.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就日韩大陆架共同开发协定'自然生效'发表声明."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JPCH/19770613.O1C.html (검색일: 2023. 7. 26).

80) 정민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714호(2020), p. 3; 박창건. "지경학의 국가경제책략으로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결'에서 '발효'까지 한일정치과정." 『사회과학연구』 제29집 제2호(2021), p. 11; 박창건·윤석정.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변수: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 『국가전략』 제28권 제1호(2022b), pp. 107-108.

81) 박창건. "지경학의 연결성으로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Post-2028년을 대비하는 한일 양국의 입장과 중국 변수."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3호(2022b).

참고문헌

국문자료

구민교. “국제해양질서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2017. 3. 27).

김자영.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김현승.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 특징 및 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

김흥규.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와 중일관계 분석.”『한일군사문화연구』제18집(2014).

박창건·김지예. “동북아 지역 협력으로서의 한중해양경계획정: 이어도 문제를 중심으로.”『아태연구』제20권 제3호(2013).

박창건. “해양 거버넌스의 재구축을 향한 일본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13~2014년도 해양법·정책·안보·자원 및 환경 분야에 관한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동서연구』제27권 제2호(2015).

박창건. “지경학의 국가경제책략으로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결’에서 ‘발효’까지 한일 정치과정.”『사회과학연구』제29집 제2호(2021).

박창건.『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이행 및 지속 방안 연구』(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2a).

박창건. “지경학의 연결성으로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Post-2028년을 대비하는 한일 양국의 입장과 중국 변수.”『국제정치논총』제62집 제3호(2022b).

박창건. “Post-2028년을 대비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아시아 브리프』제3권 제17호(2023). https://asiabrief.snu.ac.kr/?p=1036 (검색일: 2023. 6. 4).

박창건·윤석정.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과 대륙붕경계획정: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와 중국 변수.”『국제학논총』제35집(2022a).

박창건·윤석정.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변수: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국가전략』제28권 제1호(2022b).

변국영. “해외자원개발, 경쟁국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퇴보하나.”『에너지데일리』(2020. 1. 30).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31 (검색일: 2023. 9. 26).

사토 노리코·김진기. “일본의 해양정책: ‘반응국가’로부터의 탈피?.”『일본연구논총』제37호(2013).

서승원. “시진핑과 아베 신조의 중일 관계: 군사·안보적 고려, 지정학적 환원주의, 그리고 민

족주의 게임.” 『일본연구논총』 제39호(2014).
손기섭. “중일 해양영토 분쟁의 원인과 특성: 갈등사이클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3집(2012).
안성용. “3년 만에 중일 정상회담…동중국해·대만문제 놓고 신경전.” 『노컷뉴스』 (2022. 11. 18). https://www.nocutnews.co.kr/news/5851271 (검색일: 2023. 6. 26).
양희철.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1호(2012).
오승희·박창건. “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국방연구』 제63권 제3호(2020).
오승희·박창건. “중일 대륙붕 경계획정의 정치적 함의: 석유가스전 공동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2호(2022).
유복근. “중국 해양법의 이론과 실천 사례.”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30호(2013).
윤고은. “中 학자 ‘미중 관계보다 중일 관계가 더 위태로워’” 『연합뉴스』 (2022. 12. 26).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6046100074 (검색일: 2023. 6. 26).
윤석정. 『(정책연구시리즈 2020-17) 중일 역전 이후 일본의 대중 전략: 평가 및 함의』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이동률. “중국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한 전략과 요인: 댜오위다오(钓鱼岛)/센카쿠(尖閣)열도 분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2015).
이동률. “남중국해 분쟁에서의 중국의 전략과 딜레마.”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2019).
이동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경학과 지정학의 동학.”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집 제3호(2021).
이석우·박영길.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과 자원공동개발.” 『STRATEGY 21』 제15권 제2호(2012).
이석우·신청훈·박영길. “해양관할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해양국가의 입법상의 노력.” 『법학연구』 제13집 제1호(2010).
이창위.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34호(2011).
이창위·정진석. 2008. 『해양경계 관련 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주장 및 타당성 분석』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정민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714호(2020).
조양현.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對中)정책: 일본 민주당 정부 출범 후의 일·중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제2011권 제2호(2012).

채첩. “중국 국내법상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수용 고찰: 중국의 2개의 해양법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67집(2020).

최청호. “동아시아 지역주의 부상에 따른 중-일 관계: 협조적 경쟁을 향하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제1호(2007).

황보가람·박창건. “지전략으로서 일본의 지역구상: 인도-태평양 구상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6권 제4호(2020).

홍인표. “경제밀월 노린 中·日 ‘실리의 건배’.” 『경향신문』 (2007. 12. 28).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0712281818541#c2b (검색일: 2023. 7. 22).

홍종완·심어진. “동중국해에서의 한·중·일 대륙붕 중첩주장수역의 공동개발에 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제1호(2009).

영문자료

Chubb, Andrew. *Chinese Nationalism and the “Gray Zone”: Case Analyses of Public Opinion and PRC Maritime Policy* (Newport, RI: Naval War College Press, 2021).

Dhirendra, Kumar Veer. “Geostrategic considerations in road building in the himalayan borderland: A comparative study of India and China.” *disertasi PhD*(2011).

James Kraska and Michael Monti. “The law of naval warfare and China’s maritime militia.”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 91, No. 1(Summer 2015).

Ma, Ying-jeou. *Legal Problems of Seabed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Baltimor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1984),

Miyoshi, Masahiro. *The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in relation to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Durham: Ibru, 1999).

Townsend-Gault, Ian, and Stormont, William G. “offshore Petroleum Joint Development Arrangements: Functional Instruments? Compromise? Obligation?.” in Blake, Gerald Henry (eds.). *The peacefu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sources* (Dordrecht: Graham & Trotman / Martinus Nijhoff, 1995).

Zhang, Xinjun. "Why the 2008 Sino-Japanese Consensus on the East China Sea Has Stalled: Good Faith and Reciprocity Considerations in Interim Measures Pending a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42, No.1(Winter 2011).

Zou, Keyuan. "Seeking joint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in Zou, Keyuan (eds.) *Maritime Cooperation in Semi-Enclosed Seas: Asian and European Experiences* (Netherlands: Brill Nijhoff, 2019).

일문자료

五百籏頭眞. "冷戦後の日本外交とリーダーシップ."『国際問題』468(1999).

井口武夫. "排他的経済水域と大陸棚のレジーム形成とその相関関係についての考察."『世界法年報』第17号(1997).

大嶋英一. "中国の海洋政策と海洋法: 中国の海洋法解釈と国家実行."『アジア研究シリーズ』100(2019).

亀田晃尚. "東シナ海の海洋資源と日本の外交政策の変容: 尖閣問題を中心に." 法政大学博士学位論文(2020).

東京新聞社. "東シナ海ガス田問題深まる溝 中国『尖閣で共同開発』政府反発『時間稼ぎだ』."『東京新聞』(2006. 3. 9).

孫崎享.『日本の国境問題: 尖閣・竹島・北方領土』(東京: 筑摩書房, 2011).

중문자료

程广中.『地缘战略论』(北京: 国防大学出版社, 1999).

董世杰. "争议海域既有石油合同的法律问题研究." 武汉大学博士学位论文(2016).

高兰. "中日海洋战略视角下的东海油气开发合作."『世界经济与政治论坛』6期(2008).

贾宇. "中日东海共同开发的问题与前瞻."『世界经济与政治论坛』4期(2007).

姜姝·张植荣. "东海油争: 能源地缘政治与中日钓鱼岛争端."『中国地质大学学报(社会科学版)』2期(2014).

金永明. "中日东海问题原则共识内涵与发展趋势."『东方法学』2期(2009).

金永明. "新时期东海海空安全机制研究."『中国海洋大学学报』1期(2020).

李洪涛·陈少宜. "论中日东海大陆架划界争端."『深圳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3期(2016).

罗国强. “《中日东海问题原则共识》与东海共同开发: 结合钓鱼岛与防空识别区问题的讨论.”『法学论坛』1期(2015).

「世界和日本」数据库.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就日韩大陆架共同开发协定‘自然生效’发表声明.” https://worldjpn.net/documents/texts/JPCH/19770613.O1C.html (검색일: 2023. 7. 26).

世界知识出版社.『中国代表团出席联合国有关会议文件集』(北京: 人民出版社, 1978).

世界知识出版社.『中国代表团出席联合国有关会议文件集』(北京: 世界知识出版社, 1979).

宋婷·高亨超. “界定中日东海共同开发海域的法律问题.”『世界经济与政治』4期(2006).

孙冰冰. “论中日东海争端与能源合作.”『太平洋学报』6期(2005).

孙健. “新时代建设海洋强国战略研究述评.”『青岛科技大学学报』2期(2020).

童舜尧. “单独开发思维下的中国能源战略嬗变: 以中日东海能源争端为例.”『西南石油大学学报』1期(2016).

王恩宝·高嵩峰. “破解中日东海能源争端难题: 兼论钓鱼岛的主权归属问题.”『党政干部学刊』12期(2008).

新华网. “专家：东海磋商凸显中日对话解决问题意愿.” May 31, 2005. https://mil.news.sina.com.cn/2005-05-31/2341293024.html (검색일: 2023. 6. 24).

杨晓丹·杨志荣. “维护海洋权益 建设海洋强国.”『当代世界』2期(2017).

张东江·武伟丽. “论中日东海海域划界问题及其解决: 从国际法角度的研究.”『世界经济与政治』4期(2006).

中国海洋发展研究中心. “有效规范深海区域勘探开发管理 ——大洋办主任刘峰详解《深海海底区域资源勘探开发许可管理办法》.” May 4, 2017. http://aoc.ouc.edu.cn/2018/1212/c15169a231066/pagem.psp (검색일: 2023. 10. 12).

中国海洋石油有限公司. “中国海洋石油有限公司2022年年度报告.” April 11, 2023. https://www.cnoocltd.com/module/download/down.jsp?i_ID=15337536&colID=3881(검색일: 2023. 10. 12).

中国经济网. “第五轮中日东海问题磋商在东京举行.” May 18, 2006. http://www.ce.cn/macro/gjbd/zg/200605/18/t20060518_7009758.shtml (검색일: 2023. 6. 24).

中国青年报. “中日再次磋商东海问题.” July 10, 2006. http://zqb.cyol.com/content/2006-07/10/content_1441421.htm (검색일: 2023. 6. 24).

中国新闻网. “中日就东海问题进行磋商 同意继续对话解决纠纷.” October 26, 2004. http://www.chinanews.com.cn/news/2004/2004-10-26/26/498525.shtml (검색일: 2023. 6. 24).

中国新闻网. “第9轮中日东海问题磋商 探讨共同开发有关方案.” June 26, 2007. https://www.chinanews.com/gn/news/2007/06-26/965798.shtml (검색일: 2023. 6. 26).

中国新闻网. “中日第11轮东海问题磋商就共同开发等交换意见.” November 14, 2007. http://www.chinanews.com.cn/gn/news/2007/11-14/1077684.shtml (검색일: 2023. 6. 26).

中国新闻网. “中日两国领导人就东海问题达成四点共识.” December 28, 2007. http://www.chinanews.com.cn/gn/news/2007/12-28/1118076.shtml (검색일: 2023. 6. 26).

中国政府网. “1998年6月26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通过 1998年6月26日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6号发布.” September 12, 2005. http://www.gov.cn/ziliao/flfg/2005-09/12/content_31086.htm (검색일: 2023. 7. 19).

中国政府网. “中日联合新闻公报.” April 11, 2007.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621243.htm (검색일: 2023. 6. 26).

中国政府网. “中日第八轮东海问题磋商举行 双方阐述各自设想.” May 25, 2007. https://www.gov.cn/jrzg/2007-05/25/content_626058.htm (검색일: 2023. 6. 26).

中国政府网. “中日第十轮东海问题磋商商讨共同开发对象海域等.” October 11, 2007. https://www.gov.cn/jrzg/2007-10/11/content_774162.htm (검색일: 2023. 6. 26).

中国政府网. “外交部副部长就中日东海问题原则共识发表谈话.” June 19, 2008. https://www.gov.cn/xwfb/2008-06/19/content_1021854.htm (검색일: 2023. 6. 12).

中能传媒研究院. 『中国能源大数据报告(2022)』 (北京: 中能传媒研究院, 2022).

中新社. “中日第三轮东海问题磋商结束 双方同意加快进程.” October 1, 2005. http://lianghui.china.com.cn/chinese/sy/987078.htm (검색일: 2023. 6. 24).

China's Continental Shelf Policy in the Chin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Considering Maritime Resources and Security as Geostrategy

Chang-Gun Park & Cai Jie

Keywords

Chin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Sino-Japanese relations, Geo-Strategy, ocean resources, ocean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hina's East China Sea continental shelf policy is revealed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The focus of the debate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hina's continental shelf policy with the economic approach of "joint development" of ocean resources surrounding the Sino-Japanese continental shelf joint development zone and the security approach of "power proj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eo-strategy. Geo-strategy is a complex concept that encompasses all aspects of geopolitics, geology, and fingerprinting, and China's continental shelf policy has the attributes of securing ocean resources and considering ocean security in terms of securing core interests. As such a core interest, the Geo-Strategy has been promoted along with strengthening influence in the ocean resource system surrounded by the development problem of the Sino-Japanese joint development zone, was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 of Sino-Japanese relations, and expresses the characteristics of strengthening the pride of the entire nation's maritime culture. In the future, the Sino-Japanese Joint Development Zone is likely to become a venue for both countries to develop ocean resources and strengthen ocean security, so the two countries should actively seek new opportunities in various strategic concerns for maritime cooperation based on their sincere cooperation and restraint. However, China's continental shelf policy is difficult to break away from as a variable for the United States, and it has not been able to narrow the gap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for marine resource development with Japan, and has limitations in triggering nationalism directly related to maritime territorial sovereignty. China's East China Sea continental shelf policy reviewed above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s continental shelf policy.

[논문투고일 : 2023. 10. 20.]
[심사의뢰일 : 2023. 11. 17.]
[게재확정일 : 2023. 12. 6.]

국방연구 2023년 12월
제66권 제4호, pp. 73-107

북한 핵 위협 평가와 핵무장 정책선호*

윤광일**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험적 분석
Ⅳ. 결어

요 약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북핵 위협을 더 심각하게 인식, 걱정하고, 삶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게 하는 정치심리 기반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핵무장 관련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북핵 위협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걱정, 관심, 영향의 세 차원에서의 응답 평균으로 지수화한 북핵 위협 평가에서만 미세하게나마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세 차원 모두 개별적으로는 정치이념 성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북핵 위협 평가가 심각할수록 핵무장과 현 핵우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보이는 경향이 대체로 강했으며,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정책에 대한 찬성 정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북한, 핵 위협 평가, 핵무장 정책 선호, 정치이념 성향, 정치심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3A2A01095861). 또한 이 연구는 통일연구원의 연구과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의 지원으로 수행됨.

**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서론

최근까지 국제정치학에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미시적, 심리적 연구는 불모지와 다름없었다. 전통적으로 국제정치는 개인(첫 번째), 국내 정치(두 번째), 국제체계(세 번째) 등 세 개의 이미지 곧, 분석 수준에서 연구되어왔는데 세 번째 분석 수준에서의 접근이 지배적이었다.[1] 비록 1980년대 이전에 분쟁 억지와 안보딜레마 관련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오지각(misperception)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학에서 시작된 '인지 혁명(cognitive revolution)'의 세례를 받은 바 있으나, 정치엘리트 차원의 연구에 한정되었고 그나마 이후에는 다시 오랜 휴지기를 맞았다.[2] 그러나 지난 20여 년에 걸쳐서 연구주제와 방법론에서 정치심리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연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주제 측면에서는 국제관계가 개인 수준에서 정치엘리트뿐만 아니라 대중 차원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유권자의 정책 선호가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가 눈에 띄는 성장세에 있다.[3] 방법론에서도 경험적, 실증적 접근에 기초한 연구가 늘어나고,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대중 차원에서 관찰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연구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실험 연구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4]

그렇다면, 국제정치학에서 개인을, 그것도 일반 유권자로서 개인을 분석 수준으로 접근하

---

1)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sley Pub. Co, 1979).; Gries, Peter, and Paton Pak Chun Yam. "Ideolo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Vol. 34(2020), pp. 135-141.

2)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Tetlock, Philip E. "Psychological Advice on Foreign Policy: What Do We Have to Contribute?" *American Psychologist* Vol. 41, No. 5(1986), pp. 557-567.

3) McDermott, Rose. *Political psych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Kertzer, Joshua D. "Microfound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4, No. 1(2017), pp. 81-97; Kertzer, Joshua D. "Re-Assessing Elite-Public Gaps in Politic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6, No. 3(2022), pp. 319-339; Kertzer, Joshua D., and Thomas Zeitzoff. "A Bottom-up Theory of Public Opinion About Foreign Poli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1, No. 3(2017), pp. 543-558; Kertzer, Joshua D., and Dustin Tingley. "Political Psych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Beyond the Paradigm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1, No.1(2018) pp. 319-339; Rathbun, Brian C., Joshua D. Kertzer, Jason Reifler, Paul Goren, and Thomas J. Scotto. "Taking Foreign Policy Personally: Personal Values and Foreign Policy Attitu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0, No. 1(2016), pp. 124-137; Rathbun, Brian C., and Rachel Stein. "Greater Goods: Mora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Nuclear Weap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4, No. 5(2020), pp. 787-816.

4) McDermott, Rose. "New directions for experimental work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5, No. 2(2011), pp. 503–520; Davis, James W., and Rose McDermot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Behavioral I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5, No. 1(2021), pp. 147-177.

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 컨버스(Converse) 이래로 대중의 정치 지식 수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입증한 사실은, 대중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무지하거나 정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체계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 사안을 대외정책으로 한정한 연구도 대중의 무지와 변덕스럽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는 여론에 대해 이론이 없다는 이른바 '알몬드-리프만 합의(Almond-Lippmann Consensus)'를 제시했다. 주권자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암울한 이미지로 인해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 연구에서는 현실주의자를 중심으로, 대중의 선호는 민주주의 국가라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 설 자리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5)]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반 유권자도 자기 현실과 가장 동떨어져 보이는 국제관계 문제와 군사 및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처럼 성격 특성(trait)이나 성향(disposition)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이나 도덕적 핵심 가치에 의해 체계적인 선호를 형성하고 있다는 반론이 대두되었다. 외교안보 정책으로 좁혀본다면, 유권자들은 진보나 보수 성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대 고립주의(isolationism) 또는 협력적 국제주의 대 군사적 국제주의 혹은 공세적(assertive) 성향 등 비교적 안정적 성격 지향(orientation)에 의존하여 태도를 형성하는데, 이들 성향은 성격 특성에 가까운 대조적인 도덕 기반(moral foundations)이나 기본 가치(basic value) 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6)] 아울러 정치심리학 접근은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역설했다. 예를 들면, 현재 국제정치학에서 정치심리학 접근을 주도하고 있는 커쳐(Joshua D. Kertzer)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은 군사적 개입 결정 시 여론을 세심하게 관찰해왔다. 이들은 공개적으로는 대중의 영향을 경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으나 여론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조차도 암묵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왔다.[7)] 같은 시기 대리인(agent)으로서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도자의 대외정책을 관찰, 평가, 보상, 처벌하는 주체(principal)로서 유권자를

---

5) Holsti, Ole R.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Challenges to the Almond-Lippmann consensu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6, No. 4(1992), pp. 439-466; Kertzer, Joshua D. *Resolve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Kertzer and Zeitzoff(2017), pp. 543-558.

6) Holsti(1992), pp. 439-466; Herrmann, Richard K., Philip E. Tetlock, and Penny S. Visser. "Mass Public Decisions on Go to War: A Cognitive-Interactionist Frame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3(1999), pp. 553-573; Kertzer, Joshua D. "Making Sense of Isolationism: Foreign Policy Mood as a Multilevel Phenomeno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5, No. 1(2013), pp. 225-240; Rathbun et al.(2016), pp. 124-137; Rathbun and Stein(2020), pp. 787-816.

7) Kertzer(2016), p. 50.

상정한 청중비용(audience cost) 이론이 제기되어 이후 그 타당성에 대해 활발한 논쟁을 이어온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8)]

한편, 이와 같은 대외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여론 형성과정과 영향력에 대한 낙관적인 묘사와 대비되는 정치심리학 접근의 또 다른 흐름은 유권자 선호 형성에 있어서 엘리트와 정당 그리고 준거집단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다시 엘리트나 내집단(in-group)의 선호가 여론에 재현되는 것이라 보는 '하향식(top-down)' 이론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격 특성과 도덕 기반 및 가치 등에 의존하면서도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고 다시 이를 매개로 엘리트 담론에 영향을 주는 대중을 상정하는 '상향식(bottom-up)' 이론으로 크게 나뉜다. 다시 말해서, 전자에 의하면, 국내 정책 선호 형성과정과 마찬가지로 대외정책 현안에 대해 엘리트 내 담론 논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파심에 따른 선택적 수용 과정을 거쳐 태도를 형성하거나,[9)] 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특정 쟁점에 대해 엘리트가 보내는 강력한 단서(cue)를 당파심과 내집단(in-group) 애착심 또는 중심 성향(ethnocentrism)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10)] 이처럼 하향식 여론 형성과정에 주목하는 접근에 의하면, 대중이 군사 행동과 같은 고난도의 정책 쟁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고 새로운 정보도 적절하게 고려하며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하여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중의 선호는 지지 정당 엘리트 또는 내집단의 선호를 받아들인 결과이다.[11)]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향식 이론은 대외정책 결정자들이 현실주의 처방에 따라 대중의 변덕으로부터 절연하려 해도 여론은 정당과 준거집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의 정책 선호는 사회적 관계와 맥락으로부터 고립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내재하여(embedded) 형성하며, 하향식보다는 내집단 동료의 의견에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상향식 이론은 개인의 정책 선호와 대외정책 결정 과정 간의 상호작용 분석에 있어서, 집단 맥락을 중시하는 '중간 기초(mesofoundation)' 연구를 주창한다.[12)]

---

8) Fearon, James D.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3(1994), p. 581; 김지용.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1994-2014."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4호(2014), pp. 195-232.

9) Zaller, John.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0) Berinsky, Adam J. *In Time of War: Understanding American Public Opinion from World War II to Iraq*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11) Berinsky(2009).

12) Kertzer(2016); Kertzer and Zetizoff(2017), pp. 543-558.

요약하면, 현재 국제정치 연구에서 개인의 정책 선호와 이의 집계로 형성되는 여론은 더 이상 알몬드-리프만 합의에서 그려진 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외교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의미 없는 아우성은 아니다. 대외정책에 관한 개인 정책 선호와 여론은 국내 현안에 대해서처럼, 엘리트와 준거집단의 선호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집단과 사회적 맥락에 내재한 개인의 특성과 원칙 및 도덕 가치에 따라 형성되어, 다시 내집단과 지지 정당을 매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분석 대상으로 상정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든 국제관계에 대해서든 유권자 선호와 정책 결정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려는 미시적 접근에 대한 정당성이 광범한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는 국내 정책 선호 형성과정에 관한 축적된 정치심리학의 연구 성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 연구에서 개인을 분석단위로 호명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한국의 경우 정치심리학에 기초한 미시적 접근은 아직 일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 만에 민주주의의 거의 모든 경험적 차원에서 최고 수준을 구가하게 된 현재에도, 유권자 선호의 형성과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내 정치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제정치학의 대중 차원의 미시적, 정치심리학 접근에서 서구와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 한반도 외교 및 안보 현안의 중핵인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핵무장 관련 정책 쟁점에 대한 유권자 평가와 선호의 정치심리 기반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배경 검토에서는 위협 인식 및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정치심리 성향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위협 평가와 개인 정치심리 특성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군사 정책 관련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보수 성향이 북핵 위협에 더 예민하며, 북핵 위협에 민감할수록 또는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핵무장 관련 정책에 강한 선호를 보일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을 제시한다. 경험적 분석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본 설문조사 자료[13]를 활용하여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한다. 결론에서는 경험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핵 위협과 핵무장 관련 쟁점에 대한 유권자 현재 선호의 정책 함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

13) 설문조사 자료는 통일연구원이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여론』 연구하에 수집한 것이다. 이 자료는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7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종이 설문을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로 모았다. 2023년 3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로 표본을 표집했고 응답자는 총 1,001명이다.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위협 평가의 정치심리

위협 인식은 전쟁, 억지, 강제, 동맹, 분쟁 해결 이론 등에 있어서 핵심 연구주제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정치 연구자들은 위협 인식을 주로 정책결정자 차원에서 접근해왔고, 최근에서야 위협이 전문가, 정치인, 대중 간 사적 또는 공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흐름이 부상했다.[14] 그런데 위협이 같은 자극 대상으로부터 유래하더라도 개인 심리 특성, 특히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위협 인식의 민감도가 다른 것으로, 따라서 인식 및 평가 그리고 동기가 매개하는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정치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위협에 더 예민하다는 경험적 판단에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15] 그런데, 핵무장 관련 위협에 대해서는 정치이념 성향 차이가 자아내는 인식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므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위협에 관한 정치심리학 논의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협과 위협이 초래하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보수 성향 간 긴밀한 관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초래한 불안과 공황 심리로부터 도피하여 파시즘에 굴종하게 된다는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통찰과 아울러 정신역동적(psychodynamic) 접근에 기초하여 나치로 대표되는 파시스트 지지 성향을 파악한 권위주의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 연구가 일찍이 주창한 바 있다.[16] 이후 실증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수 성향과 태도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윌슨은 이의 심리적 바탕을 "불확실함으로 인한 불안 또는 위협을 경험하는 데에 대한 광범한 민감성(generalized susceptibility)"으로 규정하여, 보수 성향이 무엇보다 위협 인식 또는 이의 정서적 체험과 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다.[17] 윌슨 이래로 심리학자들은 관찰 및 실험 연구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론적 접근과 측정 방식, 그리고 광범한 메타분석을 통해서 보수 성향 및 태도와 위협 그리고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사이에 밀접한 관계

---

14) Stein, Janice Gross.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ited by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365.

15) Crawford. Are Conservatives More Sensitive to Threat Than Liberals? It Depends on How We Define Threat and Conservatism." *Social Cognition* Vol. 35, No. 4(2017), pp. 284-298.

16) Adorno, Theodor W., Else Frenkel-Brunswik, Daniel Levinson, and Nevitt Sanford.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0).

17) Wilson, G. D.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Massachusetts: Academic Press, 1973), p. 259.

가 있음을 반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냈다[18]

예컨대, 조스트와 동료들은 조사 기간 60여 년, 16개국 약 37만 명의 참여자를 포괄하는 최대 181개 연구에 대한 광범한 메타분석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위협에 대한 공포감이 보수 성향을 강하게 예측함을 밝혀냈다. 이들은 정치 신념 체계로서 보수의 핵심 담론이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불평등 정당화로 구성되며, 이는 위협과 불확실함에 대처하려는 존재론과 인식론적 욕구가 추동한 것이라는 '동기화된 사회인지(motivated social cognition)' 이론을 주창했다. 보수는 위협 상황이 되면 활성화하는 이 욕구가 만성적으로 강한 성향으로 파악된다.[19]

보수 성향이 위협에 민감하여 불안과 공포를 쉽게 느끼는 데에는 생리적 및 신경과학적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외집단이나 내부의 규범 위반으로부터 현존 사회 구조를 보호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보수 성향은 해외 원조, 이민, 반전·평화주의, 총기 규제 등을 선호하는 진보 성향보다 거미, 구더기, 총 등과 같은 위협적인 이미지를 본 후 피부 전도반응(skin conductance response)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급작스럽고 큰 백색 소음에 대해 반사적인(reflexive) 눈깜빡임의 진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20] 나아가 보수 성향은 위협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자극에 생리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심리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에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하는 "부적 편향(negativity bias)"이 강한 데, 이것이 바로 진보 성향과의 다양한 차이를 초래하는 조직 원리로까지 제시되었다.[21]

한편, 상징적 정치이념 성향으로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성향과 성격 특성 차이에서 찾는 연구에 의하면, 보수 정치이념 성향은 보수적 이데올로기 성향, 곧, 우익권위주의(RWA: Right-Wing Authoritarianism), 사회지배지향(SD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

18) Jost et al.(2003), pp. 365-367.

19) Jost et al.(2003), pp. 339-375;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2009), pp. 307-337; Jost, John T. "Ideological asymmetries and the essence of political psychology." *Political psychology* Vol. 38, No. 2(2017), pp. 167-208.

20) Oxley, D. R., Smith, K. B., Alford, J. R., Hibbing, M. V., Miller, J. L., Scalora, M., ... and Hibbing, J. R. "Political attitudes vary with physiological traits." *science* Vol. 321, No. 5896(2008), pp. 1667-1670.

21) Hibbing, John R., Kevin B. Smith, and John R. Alford. "Differences in negativity bias underlie variations in political ideolog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37, No. 3(2014), pp. 297-307; Nash, Kyle, and Josh Leota. "Political Orientation as Psychological Defense or Basic Disposition? A Social Neuroscience Examination."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Vol. 22, No. 3(2022), pp. 586-599.

체제정당화(System Justification) 등 동기적 개인차 변인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서, 성격 특성과 환경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이들 이데올로기 성향은 사회와 정치체제의 구성 원리 또는 현실에 관한 신념으로서 유권자가 자신을 보수나 진보 성향으로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22] 각기 다른 동기 또는 가치 차원에서 보수 정치이념 성향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 성향 또한 위협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아도르노의 연구를 계승하여 보수 성향의 광범한 편견적 태도를 설명하는 성격 요인으로 우익권위주의를 제시한 얼트마이어에 의하면, 보수 성향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만연한 타락과 퇴폐, 악과 폭력 등으로 인해 무질서하고 자기파괴로 치닫는 위협적인 곳으로 파악하는 '위험한 세계관(dangerous worldview)'과 관련이 있다. 그는 RWA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한 세계관으로 인해 위협에 예민하여 공포를 쉽게 느끼며 이는 질서와 전통에 위협이 되는 집단에 대한 공격적인 행태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23] RWA가 사회문화 차원의 보수 성향으로서 전통과 도덕, 권위 질서 붕괴에 대한 위협에 민감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에 비해, 프라토와 시다니우스 제시한 SDO는 경제 차원의 보수 성향으로서, '경쟁적 세계관(competitive worldview)'으로 인해 현존하는 위계와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에 민감하게 할 것이다.[24] SDO는 집단 간 지배-피지배의 불평등이 가득 찬 정글과 같은 현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신화(legitimizing myth)'를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 성향이다. 따라서 SDO가 강할수록 이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특히 열등한 외집단을, 더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 하나의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으로서 체제정당화 동기는, 개인 또는 내집단에 피해가 되더라도 현존 정치, 사회, 경제 질서가 공정하고 바람직하다고 믿는 개인차 변인으로서, 현상(status quo)을 방어, 강화,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25] 체제정당화는 체제 위협에 대한 심리적 방어(ego-defense) 심리적 대처로 위협이 자

---

22) 성격 특성과 성향, 이데올로기 성향과 상징적 정치이념 성향의 위계적 관계에 관해서는 윤광일(2019), pp. 29-37; 윤광일(2020), pp. 37-42 참고.

23) Altemeyer, Bob. *The authoritarian specter*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Altemeyer 1996; *The Authoritarians*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2006).

24) Sidanius, Jim, and Felicia Pratto.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Lavine, Howard, Milton Lodge, James Polichak, and Charles Taber. "Explicating the Black Box through Experimentation: Studies of Authoritarianism and Threat." *Political Analysis* Vol. 10, No. 4(2002), pp. 343-361; Onraet, Emma, Kristof Dhont, and Alain Van Hiel.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and Right-Wing Attitudes: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0, No. 6(2014), pp. 712-725; Duckitt, John, and Chris G. Sibley.. "The Dual Process Motivational Model of Ideology and Prejudice."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Prejudice*, edited by Sibley, Chris G., and Fiona Kate Barlow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아내는 불안과 공포를 완화하려는 존재론적(existential) 동기에 기초한다.[26] 따라서 체제 정당화 동기가 강하거나 체제 위협이 이를 활성화할수록, 현존 체제에 대한 위협을 민감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정치이념 및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이 위협을 상대적 예민하게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적 예측은 실증적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예컨대, 존재론적 동기에 한정한 메타분석에서 자기평가로 측정되는 상징적 정치 정체성으로서 보수 성향뿐만 아니라 이의 심리적 기반으로서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인 RWA와 SDO, 그리고 경제 차원에서 체제정당화 동기가 주관적 위협 인식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음이 드러났다.[27] 또한,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위협 실재 여부와 별 관계없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위협 인식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분산과 변동 폭도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28]

요약하면, 보수 정치이념 성향의 기저에는 예민한 위협 인식과 이에 대한 강한 심리적 대처 욕구가 자리하고 있으며, 객관적 위협 상황에서는 보수 성향은 이를 실재보다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 욕구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보수 성향의 바탕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존재론적 동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성격 특성과 정치 성향으로서의 보수가 불특정 다수를 절멸시킬 핵무기의 위협에 훨씬 더 민감할 것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이다. 특히, 신체적 외상(trauma)이나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 신체 위협(physical threat) 상황이 가치나 신념, 정체성에 대한 추상적, 상징적(meaning or symbolic) 위협 상황보다 위협과 보수 성향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보여준다는 결과를[29] 고려한다면, 북한 핵 위협이 상징적 보수 성향과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에 설득력을 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첫 번째 이론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

25) Jost, John T. "A quarter century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Questions, answers, criticisms, and societal applic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8, No. 2(2019), pp. 263-314.

26) Jost, John T., Chadly Stern, Nicholas O. Rule, and Joanna Sterling. "The Politics of Fear: Is There an Ideological Asymmetry in Existential Motivation?" *Social Cognition* Vol. 35, No. 4(2017), pp. 324-353.

27) Jost et al.(2017), pp. 324-353.

28) Hetherington, Marc J., and Jonathan Weiler. *Authoritarianism and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Hetherington, Marc J., and Elizabeth Suhay. "Authoritarianism, Threat, and Americans' Support for the War on Terr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5, No. 3(2011), pp. 546-560.

29) Crawford, Jarret T. "Ideological Symmetries and Asymmetries in Political Intolerance and Prejudice toward Political Activist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55(2014), pp. 284-298; Crawford(2017), pp. 354-373.

가설 1. 다른 조건이 같다면,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이데올로기 성향(RWA, SDO, 체제정당화)이 강할수록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2. 위협 평가와 이념 성향 그리고 핵무장 관련 정책 선호

핵무기에 대한 여론에 관한 연구는 1945년 8월 일본 패망의 결정타를 날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후, 10여만 개 이상의 핵폭탄과 핵탄두 개발에도 그리고 핵보유국이 교전국이 된 전쟁뿐만 아니라 핵무장국 간 실제 전쟁이 있었음에도, 80년 가까이 핵공격이 없었다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에 집중해왔다.[30] 이들 연구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도 핵 공격이 없었다는 사실로 '핵 억제(nuclear deterrence)' 이론의 경험적 결함을 비판하면서 대중의 역할에 주목하며 출발했다. 선행연구는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내면화한 '핵무기 사용 금기(nuclear taboo)' 규범이 국제 수준에서 반핵 여론을 형성하고 금기를 제도화했다는 구성주의자의 '타당성(appropriateness)' 논리와[31] 핵 사용 선례가 향후 또 다른 핵 사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과 여론에 영향을 받는 정책결정자가 장기적인 국가안보 이익을 계산하여 신중한(prudent) 핵 비사용의 전통을 만들었다는 현실주의자의 주장이[32] 대립해 왔다. 이른바 '핵 비사용(nuclear nonuse)' 1세대 연구로 명명된 초기 선행연구는 기록 및 사례 연구, 반사실적 사고 실험 등에 기초하여, 여론과 국익을 고려하는 정책결정자가 어떻게 핵 비사용의 규범과 전통을 만들어 왔는지 설명했다.[33]

질적 연구방법론과 정책결정자 연구에 의존한 1세대 연구로부터 탈피한 2세대 연구는 직접적으로 유권자 선호에 주목하여, 주로 다수 사례(large-N) 설문 실험을 활용하여 금기 규범보다는 핵무기 사용이 초래할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가

---

30) Press, Daryl G., Scott D. Sagan, and Benjamin A. Valentino. "Atomic Aversion: Experimental Evidence on Taboos, Tradition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7, No. 1(2013), pp. 188-206; Smetana, Michal, and Carmen Wunderlich. "Forum: Nonuse of Nuclear Weapons in World Politics: Toward the Third Generation of "Nuclear Taboo" Research."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23, No. 3(2021), pp. 1072-1099.

31) Tannenwald, Nina.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mative Basis of Nuclear Non-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1999), pp. 433-468.

32) Sagan, Scott D. "The problem of redundancy problem: Why more nuclear security forces may produce less nuclear security."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24, No. 4(2004), pp. 935-946.

33) 금기는 내면화한 '규범'으로서 핵무기 사용을 강하게 억제하지만, '전통'은 핵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깨뜨릴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억제력이 취약하다(Sagan 2004).

핵 공격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전통을 이끌어 왔다는 합리주의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34] 아울러 이들 연구는 핵무기 사용 불사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유권자가 절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핵무기 금기 규범의 이론적 취약함을 비판했다. 예컨대, 북한의 핵무장을 90% 정도로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만 있다면 1백만 명의 북한 민간인이 사망할지라도 예방적 핵 공격에 동의하는 미국 내 매파 응답자가 33%에 달했고, 2만 명의 미군을 살릴 수만 있다면, 2백만 명의 비핵무장 민간인이 죽을지라도 이란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과반이나 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35]

특히, 2세대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핵무기 사용과 위협에 대해 지도자가 처한 제약을 이해하는 데에 핵 관련 여론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한다.[36] 비록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사례를 이용한 설문 실험을 통해 여론이 선출 정치인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와[37] 선출직이 아닌 군 관료의 군사력 동원 결정에도 여론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38] 그리고 정치인, 관료, 군인 등 엘리트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외정책 관련 실험의 메타분석을 통해 양자 모두 실험적 처치에 매우 비슷하게 반응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연구[39] 등은 핵 관련 여론 연구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최근 2세대 연구는 핵무장 관련 정책에 대한 유권자 선호의 기원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래쓰번과 스타인은[40] 대부분 유권자가 핵무기 사용의 군사적 효용을 따지는 결과주

---

34) Press et al. (2013), pp. 188-206; Smetana and Wunderlich (2021), pp. 1072-1099; Dill, Janina, Scott D. Sagan, and Benjamin A. Valentino. "Kettles of Hawks: Public Opinion on the Nuclear Taboo and Noncombatant Immunity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and Israel." *Security Studies* Vol. 31, No. 1(2022), pp. 1-31; Horschig, Doreen. "Israeli Public Opinion 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Lessons from Terror Management Theory."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Vol. 7, No. 2(2022); Onderco, Michal, Tom W Etienne, and Michal Smetana. "Ideology and the Red Button: How Ideology Shapes Nuclear Weapons' Use Preferences in Europe."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8, No. 4(2022).

35) Haworth, Alida R., Scott D. Sagan, and Benjamin A. Valentino. "What Do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Conflict with Nuclear North Korea? The Answer Is Both Reassuring and Disturbing."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5, No. 4(2019), pp. 179-186; Sagan, Scott D., and Benjamin A. Valentino. "Revisiting Hiroshima in Iran: What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Using Nuclear Weapons and Killing Noncombata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42, No. 1(2017), pp. 41-79.

36) Press et al. (2013), pp.192-193; Rathbun and Stein(2020), pp. 789-800.

37) Tomz, Michael, Jessica L. P. Weeks, and Keren Yarhi-Milo. "Public Opinion and Decisions About Military Force in Democrac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4, No. 1(2020), pp. 119-143.

38) Lin-Greenberg, Erik. "Soldiers, Pollsters, and International Crises: Public Opinion and the Military's Advice on the Use of Force."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7, No. 3(2021).

39) Kertzer(2022), pp. 539-553.

40) Rathbun and Stein(2020), pp. 787-816

의자이긴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도덕적 직관과 가치에 영향을 받는 도덕적 공리주의자로서 선호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래함(Graham)과 하이트(Haidt)의 정립한 도덕 기반 이론에 근거하여 권위 존중과 내집단에 대한 충성 등 보수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결속(binding) 도덕 기반과 악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보복(retribution)의 도덕적 원칙이 핵 사용 지지와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들의 연구는 결속 도덕 기반 성향이 강할수록 내집단 희생자 수와 무관하게 외집단에 대한 보복 핵 공격의 지지가 높다는 연구와[41] 동포 편애와 보복 신념이 민간인 살상을 수반하는 핵 사용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보고한 연구[42] 등에 의해서도 그 타당성이 뒷받침되었다.

한편, 보수 정치이념 성향 지지자 또는 보수 정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핵무기 사용 불사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공화당 지지자와 특히, 트럼프 지지자의 경우 공격의 효과성이나 민간인 살상 정도와 상관없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예방적 핵 공격을 포함하여 군사 행동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43] 또한, NATO의 핵 공유 협정으로 미국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네덜란드 유권자를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가상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선호를 측정한 설문 실험 연구는 두 나라 응답자 모두 보수 성향과 우익 정당 지지자들이 핵 사용을 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44] 특히, 딜과 동료 연구자(Dill et al.)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핵보유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실험 연구에서 이들 나라 모두에서 보수 정치이념 성향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지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평가하게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45]

요컨대, 핵무장 관련 여론에 관한 서구 연구는 2차대전 이후 핵무기 개발이 폭증했고, 실제 핵 사용의 위기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핵 공격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반핵 여론과 이의 영향을 받는 정치엘리트가 만들어낸 핵무기 금기 또는 전통에 주목해왔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핵보유국 유권자를 중심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유권자 선호의 바탕을 탐구하여, 이들의 선호가 대체로 핵 사용의 윤리적 타당성보다는 결과주의적 효용에 좌우되나, 권위 존중과 내집단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보복 등 보수 성향과 관련이 있는 도덕 원칙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수 성향 또는 보수 정당 지지 유권자의 핵 사용에 대한 긍정적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성취에 기대

41) Smetana and Wunderlich (2021), pp. 1072-1099.
42) Dill et al.(2022), pp. 1-31.
43) Press et al.(2013), pp. 188-206; Haworth et al.(2019), pp. 179-186.
44) Onderco et al.(2022).
45) Dill et al.(2022), pp. 1-31.

어 한국 유권자 핵무장 관련 정책 선호의 정치심리 기반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지만 독자적 핵 개발과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과반이 넘는 한국 유권자의 핵무장 관련 선호의 바탕에 관한 연구는, 핵보유국 유권자 중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핵무장 관련 여론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46]

그렇다면, 유권자의 위협 평가와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은 핵무장 관련 정책 선호와 어떤 연계를 맺고 있는가? 우선, 정치심리학에서는 사회심리학 접근을 토대로 주관적 위협 인식이 개인에게 인지, 감정,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해 왔다. 예컨대, 위협은 주관적으로 인식된 것이든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든 위협을 가하는 외집단 또는 적에 대한 무관용과 편견, 내집단 중심 성향, 외국인 혐오로 이어진다. 또한, 위협은 적의 고정관념과 이미지에 의존할 가능성을 높이며, 주관적 위협 인식은 논리나 합리적 고려보다는 감정에 영향을 받아 갈등을 증폭시키는 호전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인다.[47] 특히, 국가에 대한 위협 곧, '사회적 위협(sociotropic threat)'은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의 위협과 호전성에 대한 인식은 전쟁을 포함하여 군사 행동에 대한 지지를 높이며, 공격적 외교정책과 우파 정당과 정책에 대한 지지를 뚜렷하게 높인다는 광범한 연구 결과가 있다.[48]

한편, 핵 위협은 여타 위협이 초래하는 상술한 결과를 증폭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위협, 곧,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협은 추상적인 국가에 대한 위협보다 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데,[49] 핵무기 피습은 자신을 포함 대다수를 절멸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46) 통일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한국 유권자의 핵 보유 찬성 여론은 첫 조사 시점인 2014년 이후 과반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면 2021년 10월 71.3%의 정점을 찍은 바 있다. 2022년 조사에서도 69%로 높게 나타났으나 올해는 60.2%로 다소 떨어졌다.

47) Gordon, Carol, and Asher Arian. "Threat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5, No. 2(2001), pp.196-215; Huddy, Leonie, Stanley Feldman, Theresa Capelos, and Colin Provost. "The Consequences of Terrorism: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Personal and National Threat." *Political Psychology* Vol. 23, No. 3(2002), pp. 486-489; Huddy, Leonie, Stanley Feldman, Charles Taber, and Gallya Lahav. "Threat, Anxiety, and Support of Antiterrorism Poli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9, No. 3(2005), p. 594.

48) Hermann et al.(1999), pp. 553-573; Huddy, Leonie, Stanley Feldman, and Christopher Weber.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erceived Threat and Felt Insecur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4(2007), pp. 131-153; Elad-Strenger, Julia, and Golan Shahar. "Revisiting the Effects of Societal Threat Perceptions on Conflict-elated Positions: A Three-Wave Study."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2, No. 8(2018), pp. 1753-1783; Webster, Steven W., and Bethany Albertson. "Emotion and Politics: Noncognitive Psychological Biases in Public Opin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5, No. 1(2022), p. 410.

49) Huddy et al. (2002), pp. 485-509.

자신의 죽임 가능성을 두드러지게 하여 극도의 공포를 자아내며 국가에 대한 위협을 개인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50]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 인식이 심각할수록 북한에 대한 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죽음의 공포와 같은 존재론적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동기가 일반 군사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절멸시킬 수도 있는 핵무기 사용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공포관리(terror management theory)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와[51]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 우위 가능성이 한국 유권자의 핵확산 지지를 높였다는 보고,[52]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철회, 북한 미사일 실험, 한국의 핵무장 등 가상 위협 시나리오가 2차대전 패전 이후 핵무기 혐오를 보여 온 일본 유권자조차도 핵무장에 대한 지지를 높인다는 설문 실험 연구 결과[53] 등은 이 같은 예측의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보유국 유권자 대상으로 한 핵 여론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수 성향과 친화성이 있는 권위 존중과 내집단 충성 등 결속 도덕 기반이나 보수 정치이념 성향이 강한 유권자, 그리고 보수 정당 지지자가 핵무기 사용을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1절에서 논의한 대로 보수 성향을 상징적 정치이념 성향과 이의 동기적 기반인 이데올로기 성향인 RWA, SDO, 그리고 체제정당화 동기로 구분하여 이의 핵무장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와의 독립적인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핵 관련 여론에 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핵무장 관련 정책 선호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보수 성향이 군사 및 안보 정책에서 강경한 선호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이론적 가설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보수 정치이념 성향의 또 다른 동기적 기반인 기본가치로서 보수주의(conservation)와 결속 도덕 기반이 매파 성향의 전투적 군사 개입주의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54] 착안하여, 보

---

50) 위협이 자아내는 정서 중 가장 널리 연구되어 온 공포는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의 핵심 주제이며, 공포 연구는 핵확산과 대테러 전쟁 연구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실재하는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위협 인식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지속하며 국내 및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일단 발생하면 잦아들기 어려운 공포 정서와 관계가 있다(Stein(2013), pp. 380-381). 공포의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주제로 남겨둔다.

51) Burke, Brian L., Spee Kosloff, and Mark J. Landau. “Death goes to the polls: A meta-analysis of mortality salience effects on political attitudes.”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2(2013), pp. 183-200; Horschig(2022).

52) Son, Sangyong, and Man-Sung Yim. “Correlates of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Nuclear Proliferation.” *Asian Survey* Vol. 61, No. 6(2021), pp. 1028-1057.

53) Matsumura, Naoko, Atsushi Tago, and Joseph M. Grieco. “External Threats and Public Opinion: The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and Japanese Views on the Nuclear Optio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3, No. 1(2023), pp. 23-44.

수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할수록 북한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핵무장 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으로서 권위주의 복종과 인습주의와 같이 권위주의 공격을 하위차원으로 하는 RWA와[55] 이와 함께 집단 지배 지향으로서 하위집단에 대한 공격성을 공유하며 안보 정책에서 매파 선호로 이어지는 SDO가[56] 강할수록 위협적인 외집단으로 인식되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질 것이며 동시에 핵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강경한 선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이 같은 이론적 예측에 경험적 타당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다. 예컨대, 대학생 표본이긴 하지만 RWA가 강할수록 핵무기 사용에 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57]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실험 연구에서는 SDO가 강할수록 핵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58] 또 다른 대학생 연구에서 RWA는 위협 인식을 강화하여 전쟁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SDO는 인명피해에 대한 염려를 줄여주어 전쟁에 대한 찬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59] 한편, 체제정당화는 현상 유지 선호 성향으로서, 현 체제에 대한 변화 위협이 초래하는 불안과 공포에 직면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려는 동기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여타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에서처럼, 북한이라는 위협 요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이에 맞서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핵무장에 대한 선호와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유권자의 위협 평가와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 그리고 핵무장 관련 정책 선호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할수록,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할수록, 핵무장 정책에 대해 강경한 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

54) Rathbun et al.(2020), pp. 787-816.

55) Altemeyer(2006).

56) Kandler, Christian, Edward Bell, and Rainer Riemann. "The Structure and Sources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30, No. 4(2016), pp. 406-420; Renshon, Jonathan. *Fighting for Status: Hierarchy and Conflict in World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57) Doty, Richard G., David G. Winter, Bill E. Peterson, and Markus Kemmelmeier. "Authoritarianism and American Students' Attitudes About the Gulf War, 1990-1996."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3, No. 11(1997), pp. 1133-1143.

58) Matsumura et al. (2023), pp. 23-44.

59) McFarland, Sam G. "On the eve of war: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and American students' attitudes toward attacking Iraq."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1, No. 3(2005), pp. 360-367.

Ⅲ. 경험적 분석

1. 핵 위협 평가의 정치심리 요인

상징적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이데올로기 성향(RWA, SDO, 체제정당화)이 강할수록 핵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 1〉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전에, 종속변수인 핵 위협 평가의 구성 변수와 독립변수인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했고, 그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핵 위협 평가는 통일연구원이 2016년부터 2차례 실시한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정, 관심(인지), 행동 차원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유권자 평가를 조사해 왔다. 심리학에서는 태도 또는 평가는 감정(Affective), 행동(Behavior), 인지(Cognition)의 3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른바 ABC 모델이 지배적인데,[60] 통일연구원 조사는 이에 근거해서 핵 위협 평가를 측정한 것이다. 예컨대, 감정 차원에서는 "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십니까?"로, 인지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관심(이야기, 기사나 책 읽기, TV 시청하기 등)이 있으십니까?"로, 그리고 행동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은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로 각각 북핵 위협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를 5점 척도로 측정했다.[61]

〈그림 1〉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감정, 관심, 행동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평가하는 응답자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곧, 각 설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걱정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 위협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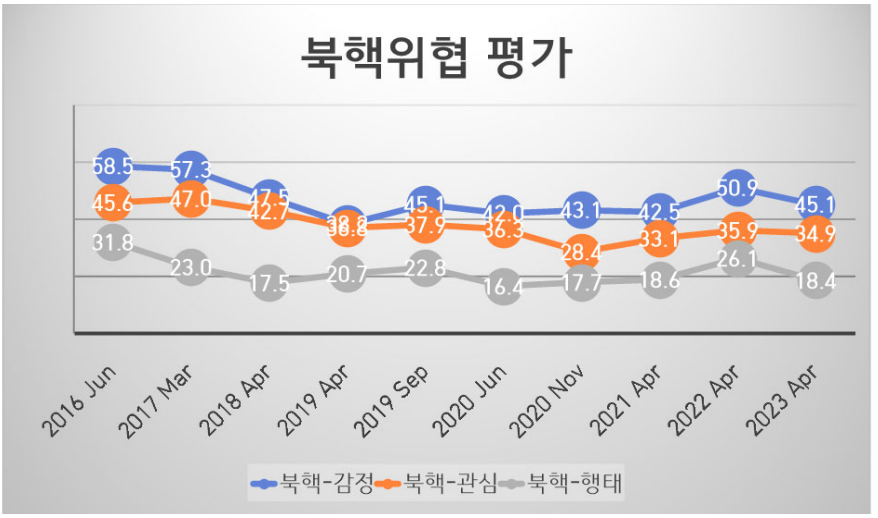
〈그림 1〉에 의하면,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감정 차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첫 조사 이래로 매해 북핵 위협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또한 이 비율은 45.1%로 관심(34.9%)이나 행동(18.4%) 차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매해 감정, 관심, 행동 차원 순으로 북한 핵 위협의 심각함을 평가하고 있으며, 각 차원의 변화 추이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인 북한의 핵 개발과 핵실험 도발이 변화 추이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면서, 핵 공격이 연상시키는 절멸과 파국의 이미지와 공포가 감정 차원에서 심각한 평

60) Eagly, Alice H., and Shelly Chaiken.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ited. Daniel Todd Gilbert, Susan T. Fiske and Gardner Lindzey (New York: McGraw-Hill, 1998).

61) 각 문항의 끝에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청을 동일하게 넣었다.

가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귀분석에서는 감정, 관심, 행동의 세 차원과 함께 이의 평균인 '북핵 위협 평가'를 별도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M=2.81, SD=0.79).[62]

〈그림 1〉 감정, 관심, 행동 차원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함 평가의 변화, 2016-2023 (단위: %)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정치이념 성향과 이데올로기 성향의 조작적 정의와 분포를 알아보자. 우선 상징적 정치 정체성을 측정하는 정치이념 성향은 '매우 진보(0점)', '중도(5점)', '매우 보수(10점)' 등 기준점을 제시하고 11점 척도로 응답자가 자신의 이념 성향에 가까운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작화했다(M=5.35, SD=1.98). 정치이념 성향의 동기적 기반으로 상정된 이데올로기 성향으로서 사회문화 보수 성향으로도 알려진 우익권위주의(RWA) 성향은 얼트마이어의 '우익권위주의 척도(RWA scale)'를 '권위주의적 공격과 복종'과 '보수주의' 두 차원으로 단순화한 척도로[63] 측정했다(M=3.23, SD=0.71).[64] 두 번째 이데올로기 성향

62) 올해의 경우 세 차원의 신뢰성 계수(Cronbach's alpha)는 0.67로 지난해 0.75보다 다소 낮았지만, 지수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63) Manganelli Rattazzi, Anna Maria, Andrea Bobbio, and Luigina Canova.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3, No. 5(2007), pp. 1223-1234.

64) RWA는 ①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와 싸워서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②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③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 ④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권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⑤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⑥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

변수로서 경제 보수 성향을 나타내는 사회지배지향(SDO)은 프라토와 시다니우스(Pratto and Sidanius)가[65] 개발한 1차원의 원척도를 집단 지배(SDO-D)와 반평등주의(SDO-E)의 2차원의 하위 척도로 개량, 타당화한 호와 동료 연구자(Ho et al.)의[66] 척도를 사용했다(M=3.47, SD=0.59).[67] 세 번째 이데올로기 성향 개인차 변인인 체제정당화 동기는 캐이와 조스트(Kay and Jost)가[68] 현 체제 유지 선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활용했다(M=4.93, SD=0.93).[69]

이제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이데올로기 성향(RWA, SDO, 체제정당화)이 강할수록 핵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 1〉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만든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해 보자. 〈표 2〉는 감정(북핵 위협 걱정), 인지(북핵 위협 관심), 행동(북핵 위협 영향) 등 3차원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평가와 이의 평균으로 지수화한 북핵 위협 평가를 종속변수로, 정치이념 성향과 이데올로기 성향 개인차 변인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성,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 변수와 출신 지역(만 15세까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⑦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지휘에 잘 따르는 질서 정연한 국민이다 등 7개 진술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묻고 이의 평균으로 지수화했다. 신뢰성 계수는 0.82로 다른 이데올로기 성향 변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5) Pratto, Felicia, Jim Sidanius, Lisa M. Stallworth, and Bertram F. Mall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1994), p. 741.

66) Ho, Arnold K., Jim Sidanius, Nour Kteily, Jennifer Sheehy-Skeffington, Felicia Pratto, Kristin E. Henkel, Rob Foels, and Andrew L. Stewart.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_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9, No. 6(2015), p. 1003.

67) SDO는 ①어떤 집단은 상층부에, 다른 집단들은 하층에 있을 때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②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③어떤 한 집단도 사회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④하층의 사람들이라도 최상류층과 마찬가지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⑤집단들끼리의 평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⑥여러 집단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⑦각 집단들이 처한 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⑧모든 집단들에게 공평한 성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등 8개 진술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1점),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4점), '매우 지지한다'(7점) 등 7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묻고, 높은 점수가 강한 SDO를 가리키도록 변환후에 평균을 구해 측정했다. 신뢰성 계수는 0.70으로 지수화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참고로 ①~④의 4개 진술이 집단 지배 성향을 ⑤~⑧의 4개 진술이 반평등 성향을 각각 측정한다.

68) Kay, Aaron C., and John Jost, "Complementary Justice: Effects of "Poor but Happy" and "Poor but Honest" Stereotype Exemplars on System Justification and Implicit Activation of the Justice Mo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5, No. 5(2003), p. 823.

69) 체제정당화 동기는 ①대체로 우리사회는 공평한 것 같다 ②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③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다 ④부자가 되고 행복을 누릴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다 ⑤대체로 보아 한국의 정치체제는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다 ⑥대부분의 정책은 공익에 기여한다 ⑦우리사회는 매년 나빠지고 있다 ⑧사람들은 사회에서 대체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등 8개로 이루어진 현 정치사회체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반반이다'(5점), '매우 동의한다'(9점) 등 9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묻고, 체제정당화 동기가 강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도록 변환한 후 평균을 구해 측정했다. 신뢰성 계수는 0.72로 지수화에 적합했다.

지역 기준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가변수로 그 외 지역을 기준 변수로 측정), 북핵 지식[70], 지지 정당(정의당 지지 또는 지지 정당이 없거나 기타 정당을 지지한 경우를 기준범주로 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각각 가변수로 만듦),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만든 4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71]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보아 〈가설 1〉은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 달리 정치 정체성으로서 정치이념 성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감정, 인지(관심), 행동(영향) 어느 차원에도 독립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 정치이념 성향이 강할수록 세 차원의 평균으로 지수화한 북핵 위협 평가에서는, p-값이 다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미세하게나마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이념 성향의 동기적 바탕으로서 위험한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위협에 민감하기도 하고 높은 수준의 위협 인식을 보이게 한다는 이데올로기 성향인 RWA는 북핵 위협 태도의 구성 차원과 평가 어느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인 SDO는 북핵 위협에 대해 관심 및 행동 차원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SDO가 강할수록 북핵 위협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SDO가 세상을 냉혹한 경쟁(dog-eat-dog)이 가득한 곳으로 그리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쟁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향으로서, 위협에 대해 냉담하고, 열등한 외집단에 대해 잔인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연상되는 대목이다.[72] 이들에 의하면 위협에 예민한 보수 성향은 RWA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70) 핵 지식은 "2007년 폐쇄되었으나, 2013년 북한이 다시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지역"(영변), "핵무기가 없는 국가"(독일)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로 공격받은 일본의 도시"(히로시마), 우리나라가 "핵확산 금지조약(NPT) 가입국"인지(그렇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았"는지(아니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정답 수로 측정했다(M=2.50, SD=1.26).

71) 이하 회귀분석에서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변환하지 않은 원 사회경제 변수를 사용했다. 곧, 연령은 조사 시점 당시 만 나이로, 학력은 무학부터 대학원(박사과정)까지 최종학력 기준 8개 범주로 측정했다. 소득은 응답자가 직접 기재한 가구 월평균 세전 소득을 100만 원 이하, 101-200만 원, 201-300 만 원, 301-5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5개 소득 집단으로 재분류한 변수이다. 회귀계수의 통계적 검정은 응답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군집화 로버스트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했다.

72) Pratto, Felicia, Jim Sidanius, and Shana Levin. "Social Dominance Theory and the Dynamics of Intergroup Relations: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7, No. 1(2006), pp. 271-320; Choma, Becky L., and Gordon Hodson. "Right-Wing Ideology: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 to Threat." *Social Cognition* Vol. 35, No. 4(2017), pp. 415-432.

〈표 2〉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과 북핵 위협 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북핵 위협 평가: 회귀계수(표준오차)			
	북핵 위협 걱정	북핵 위협 관심	북핵 위협 영향	북핵 위협 평가
연령	0.008*(0.003)	0.014**(0.003)	0.009**(0.002)	0.009**(0.002)
여성	0.120***(0.016)	−0.058(0.032)	0.060+(0.028)	0.080**(0.019)
학력	−0.021(0.056)	0.043(0.029)	0.024(0.024)	0.009(0.026)
가구소득	0.054(0.033)	0.045(0.045)	0.073+(0.030)	0.066*(0.024)
광주/전라	−0.249*(0.087)	−0.217(0.152)	−0.141(0.079)	−0.177+(0.079)
대구/경북	0.065(0.123)	0.078(0.088)	−0.075(0.039)	−0.028(0.052)
부산/울산/경남	−0.209*(0.081)	−0.317**(0.060)	−0.359*(0.100)	−0.309*(0.085)
핵 지식	0.027(0.041)	0.046*(0.013)	0.008(0.023)	0.014(0.024)
더불어민주당	0.048(0.114)	0.139(0.119)	0.032(0.078)	0.038(0.084)
국민의힘	−0.002(0.165)	0.049(0.148)	−0.054(0.112)	−0.036(0.121)
정치이념 성향	0.038(0.020)	0.014(0.014)	0.013(0.011)	0.021+(0.010)
RWA	0.073(0.095)	0.004(0.074)	0.048(0.085)	0.056(0.088)
SDO	−0.288*(0.101)	−0.157(0.087)	0.132(0.069)	−0.008(0.075)
체제정당화	0.008(0.045)	0.131*(0.043)	0.165**(0.035)	0.113*(0.035)
상수	3.112***(0.314)	1.714***(0.244)	0.330(0.487)	1.257*(0.373)
N	998	998	998	998
R2	0.06	0.10	0.10	0.08

*+ p<0.10, * p<0.05, ** p<0.01, *** p<0.001*

현상 유지 선호의 보수 성향인 체제정당화 동기는 걱정 차원에서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심과 행동 차원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 차원에서 예상대로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동기가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추동하는 기능을 하기에, 이 같은 정적인 관계는 현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유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73] 또한, 체제정당화 동기가 강할수록 위협이 자아내는 불안과 공포에 대한 자기방어에 능할 수도 있기에 감정 차원에서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74]

73) 관심을 묻는 문항에서 "이야기, 기사나 책읽기, TV 시청하기" 등의 행동을 관심의 예시로 제시한 것도 체제정당화 '동기'가 관심과 정적 관계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74) Jost et al.(2017), pp. 324-353; Nash and Leota(2022), pp. 586-599.

통제 변수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흔히 진보-보수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북한 위협에 대한 태도와 평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알려진 대구/경북 출신의 유권자들도 유의미한 관계를 드러내지 않았다.

요약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행연구에 근거한 예측과 달리 정치이념 성향과 RWA는 북핵 위협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걱정, 관심, 영향 차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에도 별 영향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SDO와 체제정당화 동기의 영향에 대한 사후적 해석은 향후 후속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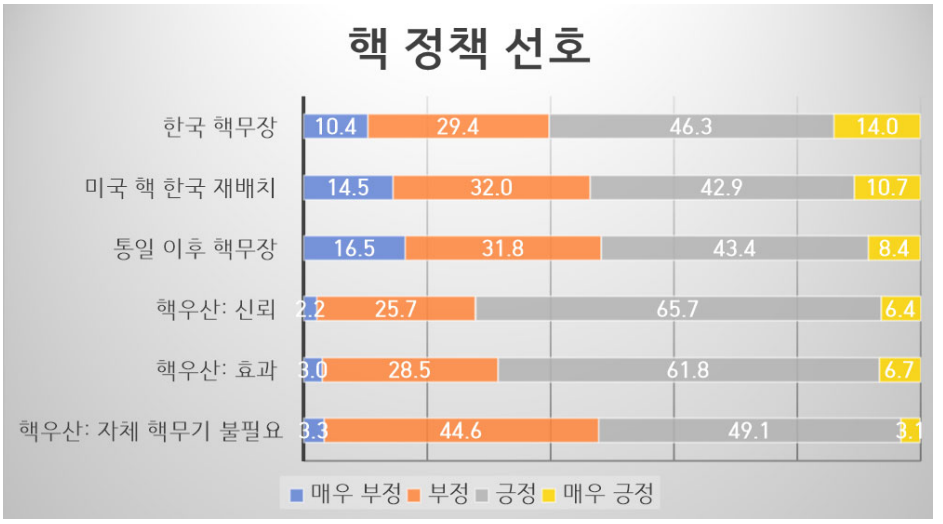
2. 북핵 위협 평가와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 그리고 핵무장 정책 선호 간의 관계

다음으로 북핵 위협 평가와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의 정치심리 특성이 핵무장 관련 정책에 어떠한 선호로 이어지는지 파악해 보자.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여론'을 주제로 조사를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핵무장 정책에 대한 선호를 한미동맹, 핵우산 정책 그리고 독자적 핵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담았다. 이 절에서는 이들 정책 선호를 종속변수로 북핵 위협 평가와 정치심리 특성 변인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사회경제변수(성,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출신 지역, 핵 지식, 지지 정당 등을 통제변수로 구축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할수록,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할수록, 핵무장 정책에 대해 강경한 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정한다. 이하에서는 종속변수인 핵무장 관련 정책 선호를 4점 순서 척도로 측정한 일련의 핵무장 및 핵우산 정책 선호와 6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여 지수화한 독자적 핵무장 정책 선호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핵무장 및 핵우산 정책 선호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와 그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자.

응답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한국 핵무장),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핵무기를 남한에 재배치해야 한다"(미국 핵 한국 재배치),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통일 이후 핵무장) 등 일련의 핵무장 정책에 대한 찬반 선호를 4점 척도(1점 "매우 반대"~4점 "매우 찬성")로 나타냈다. 또한, 응답자는 "미국의 "핵확장 억제", 혹은 "핵우산" 정책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핵무기가 없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

다.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는 제시문을 읽은 후,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핵우산: 신뢰) 정도를 4점 척도(1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4점 "매우 신뢰한다")로 나타내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핵우산: 효과)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핵우산: 자체 핵무기 불필요)는 주장에 대해 동의 정도도 4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점 "매우 동의한다")로 답했다.

〈그림 2〉 핵 정책 선호 분포



〈그림 2〉는 핵무장 관련 정책에 대한 선호의 분포를 드러내는데, 무엇보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와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매우 높게 드러난 점이 눈에 띈다. 핵우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 또는 신뢰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2.1%에 달했고, 이 정책으로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비율도 68.5%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핵우산 정책으로 자체 핵무기 개발이 필요 없다는 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47.9%로 나타났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한국 안보를 완전히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핵우산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와 억지 효과에 대한 믿음이 실제 선호라기보다는 추상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높은 지지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한국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핵 보유 의사와도 연계되어 있었다. 응답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데에 60.3%, 미국 핵무기를 남

한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데에 53.6%로 절반이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통일 이후에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에는 찬반이 갈리긴 했지만, 찬성률이 5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핵무장이 통일 이후에도 안보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제 북핵 위협 평가와 정치심리 특성이 이들 핵무장 및 핵우산 정책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자. 종속변수를 4점 순서 척도로 측정했으므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 추정을 통해 가설을 검정했다(〈표 2〉 참조).

〈표 2〉 핵 관련 정책에 대한 핵 위협 평가와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핵 정책 선호: 회귀계수(표준오차)					
	한국 핵 보유	미국 핵 재배치	통일 이후 핵무장	핵우산: 신뢰	핵우산: 효과	핵우산: 자체 핵무기 불필요
연령	0.002(0.004)	−0.000(0.002)	0.002(0.003)	−0.000(0.003)	−0.002(0.004)	−0.003(0.003)
여성	−0.135+(0.070)	−0.106***(0.024)	−0.203***(0.061)	−0.049(0.069)	−0.076(0.097)	−0.019(0.035)
학력	−0.035(0.052)	−0.016(0.037)	0.051(0.036)	−0.005(0.030)	0.037(0.037)	−0.020(0.038)
가구소득	−0.063***(0.015)	0.026(0.054)	0.011(0.026)	0.022(0.054)	−0.006(0.031)	0.032(0.042)
광주/전라	−0.209(0.132)	−0.288*(0.129)	−0.240***(0.061)	−0.006(0.175)	0.113(0.208)	0.014(0.102)
대구/경북	0.057(0.096)	−0.005(0.141)	0.045(0.139)	0.282***(0.081)	0.244*(0.101)	0.098(0.074)
부산/울산/경남	−0.036(0.063)	−0.232**(0.077)	−0.126(0.118)	0.413***(0.109)	0.140(0.087)	0.015(0.095)
북핵 위협 평가	0.204+(0.112)	0.114(0.116)	0.147*(0.064)	0.209***(0.044)	0.152**(0.055)	0.004(0.157)
핵 지식	−0.041(0.032)	−0.057**(0.022)	0.004(0.045)	−0.046(0.034)	−0.049(0.031)	0.050(0.038)
더불어민주당	−0.003(0.127)	−0.049(0.047)	0.047(0.098)	−0.006(0.130)	0.045(0.139)	0.060(0.098)
국민의힘	−0.000(0.051)	0.140(0.089)	0.131*(0.062)	0.275+(0.143)	0.285*(0.142)	0.185(0.173)
정치이념 성향	0.018(0.015)	0.064+(0.037)	0.016(0.021)	0.041+(0.022)	0.042(0.034)	0.030(0.027)
RWA	0.158*(0.071)	0.169(0.134)	0.075(0.058)	0.062(0.123)	−0.020(0.186)	−0.038(0.067)
SDO	−0.248*(0.105)	−0.359+(0.194)	0.034(0.035)	−0.229+(0.137)	−0.163(0.120)	0.179(0.136)
체제정당화	0.036(0.027)	0.065(0.065)	0.029(0.046)	0.179*(0.073)	0.016(0.058)	−0.001(0.082)
cut 1	−1.324*(0.596)	−1.074(0.978)	0.291(0.406)	−0.970(1.076)	−1.808***(0.427)	−1.104(0.711)
cut 2	−0.277(0.523)	−0.051(0.939)	1.256**(0.383)	0.544(1.091)	−0.364(0.589)	0.7190.707)
cut 3	1.123*(0.469)	1.364(0.989)	2.714***(0.369)	2.827*(1.175)	1.681**(0.634)	2.656***(0.749)
N	998	998	998	998	998	998
Log Likelihood	−1186.49	−1194.75	−1202.74	−828.81	−915.23	−916.53
Pseudo R2	0.03	0.04	0.02	0.06	0.03	0.01

*+ p<0.10, * p<0.05, ** p<0.01, *** p<0.001*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선, 북핵 위협 평가가 심각할수록,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고, 통일 이후에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북핵 위협 평가는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가능성이 컸고, 이의 북핵 억지 효과에 대해서도 동의 정도를 높일 가능성도 컸다. 다만 북핵 위협 평가는 미국 핵 한국 재배치와 핵우산 정책으로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찬성과 동의 정도를 높이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자체 핵무장과 현 핵우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져 보이는 북핵 위협 평가와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과 이데올로기 성향은 핵무장 정책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정치이념 성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 핵 재배치를 미약하게나마 찬성하는 강도를 높였으며,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였으나 다른 정책에 대한 선호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WA는 예상한 대로 한국 핵 보유 찬성 강도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다른 정책 선호와는 관계가 없었으며, SDO는 오히려 한국 핵 보유와 미국 핵 재배치 찬성 강도를 낮췄고, 핵우산 정책 신뢰도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5] 체제정당화 동기는 핵우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정책 선호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수 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지지는 통일 이후에도 핵무장을 찬성하고,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이의 억지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할 가능성을 각각 크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Ⅳ. 결어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북핵 위협을 더 심각하게 인식, 걱정하고, 삶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게 하는 정치심리 기반을 파악하고(〈가설 1〉) 구체적인 핵무장 관련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가설 2〉)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정치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북핵 위협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걱정, 관심, 영향의 세 차원에서의 응답 평균으로 지수화한 북핵 위협 평가에서만 미세하게나마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세 차원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RWA는 세 구성 차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75) 이는 오랜 핵무장 혐오의 사회적 규범에도 SDO와 핵무장 지지가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일본 유권자 대상 연구 결과(Matsumura et al. 2023)와 배치된다.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체제동기화 동기는 예상대로 관심, 영향, 전반적 평가에 있어서 북핵 위협 인식의 심각함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SDO는 대체로 관계가 없었다. 보수 성향 및 RWA와 위협 간의 밀접한 관계에 관한 풍부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가설 1〉은 지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가설 2〉는 제한적으로 지지 되었다. 북핵 위협 평가가 심각할수록 핵무장과 현 핵우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보이는 경향이 대체로 강했으며, RWA의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정책에 대한 찬성 정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WA가 강할수록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선호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DO와 체제정당화 동기는 핵무장 관련 정책 선호에 있어서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났거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경험적 관찰 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먼저 서구 선행연구와 달리 상징적 정치 정체성으로서 보수 성향이 북핵 위협 인식을 높이지 않았고, 통제 변수이긴 하지만, 보수 세가 강한 대구/경북 출신이나 정당 지지도 북핵 위협 평가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북핵 위협이 진영 간 양극화를 심화하는 쟁점으로 동원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위협 인식은 실제 위협과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사적 또는 공적 담론 공간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사회화되고 엘리트와 정당에 의해 동원되기도 한다. 또한, 위협 인식이 자아내는 공포와 불안은 실제 위협이 사라지고 나서도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 및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76] 대북 정책 선호가 정치이념과 정당 지지를 가르는 주요 차원으로 기능해 온 한국정치 맥락을 고려할 때, 북핵 위협의 동원은 현재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정치 양극화를 폭발적으로 심화하고 유지 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상대로,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고 평가할수록, 적어도 북한을 경계나 적대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관찰 결과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각 이념 진영의 자제가 절실하다.

글을 마치면서, 후속 연구 과제를 예비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객관적 위협 상황의 변화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실제 위협이 보수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을 활성화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수적 대외정책 선호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들 성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 만성적으로 위협 인식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기에, 위협의 한계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수 성향이 약한 또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실제 위협

76) Stein(2013).

탓에 위협에 민감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수적 정책 선호가 강해질 것인지 판별할 수 없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통한 도발은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자행되는, 고질적인 위협의 양상을 띠고 있어, 위협 인식의 민감함이 정치이념 및 이데올로기 성향 차를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가정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할 가설일 뿐이며, 현 연구에서는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했다. 아울러 서구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번 연구에서 예상과 달리 확인되지 않은 보수 정치이념 성향 및 RWA와 위협 평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김지용.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1994-2014.”『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4호(2014).

윤광일.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국방연구』 제62권 4호(2019).

_____. “미국 인식 및 평가의 정치심리 기반.”『국방연구』 제63권 4호(2020).

Adorno, Theodor W., Else Frenkel-Brunswik, Daniel Levinson, and Nevitt Sanford.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0).

Altemeyer, Bob. *The authoritarian specter*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_____. *The Authoritarians*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2006).

Berinsky, Adam J. *In Time of War: Understanding American Public Opinion from World War II to Iraq*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Burke, Brian L., Spee Kosloff, and Mark J. Landau. “Death goes to the polls: A meta-analysis of mortality salience effects on political attitudes.”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2(2013).

Choma, Becky L., and Gordon Hodson. “Right-Wing Ideology: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 to Threat.” *Social Cognition* Vol. 35, No. 4(2017).

Crawford, Jarret T. “Ideological Symmetries and Asymmetries in Political Intolerance and Prejudice toward Political Activist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55(2014).

_____. “Are Conservatives More Sensitive to Threat Than Liberals? It Depends on How We Define Threat and Conservatism.” *Social Cognition* Vol. 35, No. 4(2017).

Davis, James W., and Rose McDermot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Behavioral I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5, No. 1(2021).

Dill, Janina, Scott D. Sagan, and Benjamin A. Valentino. “Kettles of Hawks: Public Opinion on the Nuclear Taboo and Noncombatant Immunity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and Israel.” *Security Studies* Vol. 31, No. 1(2022).

Doty, Richard G., David G. Winter, Bill E. Peterson, and Markus Kemmelmeier.

"Authoritarianism and American Students' Attitudes About the Gulf War, 1990–1996."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3, No. 11(1997).

Duckitt, John, and Chris G. Sibley.. "The Dual Process Motivational Model of Ideology and Prejudice."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Prejudice*, edited by Sibley, Chris G., and Fiona Kate Barlow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Eagly, Alice H., and Shelly Chaiken.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ited. Daniel Todd Gilbert, Susan T. Fiske and Gardner Lindzey (New York: McGraw-Hill, 1998).

Elad-Strenger, Julia, and Golan Shahar. "Revisiting the Effects of Societal Threat Perceptions on Conflict-Related Positions: A Three-Wave Study."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2, No. 8(2018).

Fearon, James D.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3(1994).

Feldman, Stanley. "Enforcing Social Conformity: A Theory of Authoritarianism." *Political Psychology* Vol. 24, No. 1(2003).

Gordon, Carol, and Asher Arian. "Threat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5, No. 2(2001).

Gries, Peter, and Paton Pak Chun Yam. "Ideolo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Vol. 34(2020).

Haworth, Alida R., Scott D. Sagan, and Benjamin A. Valentino. "What Do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Conflict with Nuclear North Korea? The Answer Is Both Reassuring and Disturbing."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5, No. 4(2019).

Herrmann, Richard K., Philip E. Tetlock, and Penny S. Visser. "Mass Public Decisions on Go to War: A Cognitive-Interactionist Frame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3(1999).

Hetherington, Marc J., and Jonathan Weiler. *Authoritarianism and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Hetherington, Marc J., and Elizabeth Suhay. "Authoritarianism, Threat, and

Americans' Support for the War on Terr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5, No. 3(2011).

Hibbing, John R., Kevin B. Smith, and John R. Alford. "Differences in negativity bias underlie variations in political ideolog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37, No. 3(2014)

Ho, Arnold K., Jim Sidanius, Nour Kteily, Jennifer Sheehy-Skeffington, Felicia Pratto, Kristin E. Henkel, Rob Foels, and Andrew L. Stewart.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_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9, No. 6(2015).

Holsti, Ole R.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Challenges to the Almond-Lippmann consensu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6, No. 4(1992).

Horschig, Doreen. "Israeli Public Opinion 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Lessons from Terror Management Theory."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Vol. 7, No. 2(2022).

Huddy, Leonie, Stanley Feldman, Theresa Capelos, and Colin Provost. "The Consequences of Terrorism: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Personal and National Threat." *Political Psychology* Vol. 23, No. 3(2002).

Huddy, Leonie, Stanley Feldman, Charles Taber, and Gallya Lahav. "Threat, Anxiety, and Support of Antiterrorism Poli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9, No. 3(2005).

Huddy, Leonie, Stanley Feldman, and Christopher Weber.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erceived Threat and Felt Insecur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4(2007).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Jost, John T. "Ideological asymmetries and the essence of political psychology." *Political psychology* Vol. 38, No. 2(2017).

_____. "A quarter century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Questions, answers, criticisms, and societal applic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8, No. 2(2019).

Jost, John T., Jack Glaser, Arie W. Kruglanski, and Frank J. Sulloway.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9, No. 3(2003).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2009).

Jost, John T., Chadly Stern, Nicholas O. Rule, and Joanna Sterling. "The Politics of Fear: Is There an Ideological Asymmetry in Existential Motivation?" *Social Cognition* Vol. 35, No. 4(2017).

Kandler, Christian, Edward Bell, and Rainer Riemann. "The Structure and Sources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30, No. 4(2016).

Kay, Aaron C., and John Jost, "Complementary Justice: Effects of "Poor but Happy" and "Poor but Honest" Stereotype Exemplars on System Justification and Implicit Activation of the Justice Mo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5, No. 5(2003).

Kertzer, Joshua D,. "Making Sense of Isolationism: Foreign Policy Mood as a Multilevel Phenomeno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5, No. 1(2013).

_____. *Resolve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_____."Microfound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4, No. 1(2017).

_____."Re-Assessing Elite-Public Gaps in Politic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6, No. 3(2022).

Kertzer, Joshua D., and Thomas Zeitzoff. "A Bottom-up Theory of Public Opinion About Foreign Poli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1, No. 3(2017).

Kertzer, Joshua D., and Dustin Tingley. "Political Psych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Beyond the Paradigm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1, No. 1(2018).

Lavine, Howard, Milton Lodge, James Polichak, and Charles Taber. "Explicating the Black Box through Experimentation: Studies of Authoritarianism and

Threat." *Political Analysis* Vol. 10, No. 4(2002).

Lin-Greenberg, Erik. "Soldiers, Pollsters, and International Crises: Public Opinion and the Military's Advice on the Use of Force."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7, No. 3(2021).

Manganelli Rattazzi, Anna Maria, Andrea Bobbio, and Luigina Canova.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3, No. 5(2007).

Matsumura, Naoko, Atsushi Tago, and Joseph M. Grieco. "External Threats and Public Opinion: The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and Japanese Views on the Nuclear Optio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3, No. 1(2023).

McDermott, Rose. *Political psych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_____. "New directions for experimental work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5, No. 2(2011).

McFarland, Sam G. "On the eve of war: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and American students' attitudes toward attacking Iraq."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1, No. 3(2005).

Nash, Kyle, and Josh Leota. "Political Orientation as Psychological Defense or Basic Disposition? A Social Neuroscience Examination."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Vol. 22, No. 3(2022).

Onderco, Michal, Tom W Etienne, and Michal Smetana. "Ideology and the Red Button: How Ideology Shapes Nuclear Weapons' Use Preferences in Europe."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8, No. 4(2022).

Onraet, Emma, Kristof Dhont, and Alain Van Hiel.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and Right-Wing Attitudes: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0, No. 6(2014).

Oxley, D. R., Smith, K. B., Alford, J. R., Hibbing, M. V., Miller, J. L., Scalora, M., ... and Hibbing, J. R. "Political attitudes vary with physiological traits." *science* Vol. 321, No. 5896(2008).

Pratto, Felicia, Jim Sidanius, Lisa M. Stallworth, and Bertram F. Mall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1994).

Pratto, Felicia, Jim Sidanius, and Shana Levin. "Social Dominance Theory and the Dynamics of Intergroup Relations: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7, No. 1(2006).

Press, Daryl G., Scott D. Sagan, and Benjamin A. Valentino. "Atomic Aversion: Experimental Evidence on Taboos, Tradition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7, No. 1(2013).

Rathbun, Brian C., Joshua D. Kertzer, Jason Reifler, Paul Goren, and Thomas J. Scotto. "Taking Foreign Policy Personally: Personal Values and Foreign Policy Attitu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0, No. 1(2016).

Rathbun, Brian C., and Rachel Stein. "Greater Goods: Mora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Nuclear Weap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4, No. 5(2020).

Renshon, Jonathan. *Fighting for Status: Hierarchy and Conflict in World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Sagan, Scott D. "The problem of redundancy problem: Why more nuclear security forces may produce less nuclear security."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24, No. 4(2004).

Sagan, Scott D., and Benjamin A. Valentino. "Revisiting Hiroshima in Iran: What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Using Nuclear Weapons and Killing Noncombata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42, No. 1(2017).

Sidanius, Jim, and Felicia Pratto.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Smetana, Michal, and Carmen Wunderlich. "Forum: Nonuse of Nuclear Weapons in World Politics: Toward the Third Generation of "Nuclear Taboo" Research."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23, No. 3(2021).

Son, Sangyong, and Man-Sung Yim. "Correlates of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Nuclear Proliferation." *Asian Survey* Vol. 61, No. 6(2021).

Stein, Janice Gross.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ited by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Tannenwald, Nina.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mative Basis of Nuclear Non-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1999).

Tetlock, Philip E. “Psychological Advice on Foreign Policy: What Do We Have to Contribute?” *American Psychologist* Vol. 41, No. 5(1986).

Tomz, Michael, Jessica L. P. Weeks, and Keren Yarhi-Milo. “Public Opinion and Decisions About Military Force in Democrac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4, No. 1(2020).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 Addison-Wesley Pub. Co, 1979).

Webster, Steven W., and Bethany Albertson. “Emotion and Politics: Noncognitive Psychological Biases in Public Opin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5, No. 1(2022).

Wilson, G. D. *The psychology of conservatism* (MA: Academic Press, 1973).

Zaller, John.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Policies

Yoon, Kwang-Il

Keywords

North Korea, Nuclear Threat, Nuclear Armament,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Psychology

The study aimss to identify politic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lead people to perceive, worry about, and evaluate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s more serious and impactful on their lives and to support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policie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It found that there was only a weak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conservatism and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ich was indexed by the average response across the three dimensions of interest, worry, and impact that constitute attitudes toward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However,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conservatism and any of the three dimensions individually. Additionally, it found that people who evaluated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s more seriou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and the current nuclear umbrella policy. Right-wing authoritarianism was found to further strengthen support for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논문투고일 : 2023. 10. 31.]
[심사의뢰일 : 2023. 11. 16.]
[게재확정일 : 2023. 12. 6.]

국방연구 2023년 12월
제66권 제4호, pp. 109-140

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부형욱**

Ⅰ. 서 론
Ⅱ. 핵무기와 확장억제의 정치·군사적 효용성 논란
Ⅲ. 워싱턴 선언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핵공유
Ⅳ. 한국형 핵공유 방안의 정치·군사적 효과 및 북핵 협상에의 활용
Ⅴ.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북핵 고도화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왔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무기의 정치적·군사적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또 워싱턴 선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 강화 대안과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적절히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제안하였고, 핵공유 추진을 위한 대미 협상전략 및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활용한 북핵 협상전략도 제시되었다.

키워드: 북핵 위협, 확장억제, 동맹보장, 핵공유

* 본 논문은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역량과제를 수행한 결과물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I. 서 론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억제가 가능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면밀한 분석에 의하면 북한 핵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조합으로 억제가 가능[1]하다고 판단되지만 여론의 향배는 그렇지 않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일각에서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독자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깨지 않고는 불가능한 대안이고, 전술핵 재배치는 국제적인 논란을 유발할 소지[2]가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필요 이상으로 고강도 조치[3]이므로 '워싱턴 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문제는 '워싱턴 선언'으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이 원천 봉쇄된 것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워싱턴 선언'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동맹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 다수의 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 대표적인 논의는 Adam Mount, 김정섭 등의 저술에서 발견된다. Adam Mount. (2019). "Conventional Deterrence of North Korea."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 김정섭. (2015).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1권 2호, pp. 5-40.

2)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은 1970년에 체결되었다. NPT 제1조에서는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PT 협상과정 중에 핵보유국이 타국에 이미 배치한 전술핵에 대해서는 상호 양해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에 대해서는 NPT 위반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NPT 조약 체결 이전에 한국에 배치되었던 전술핵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는 이를 억지논리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억지 주장을 하니 자신들이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도 비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처럼 동맹국에 새로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일단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은 NPT 관련하여 많은 논란거리와 국제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미-러 간 NPT 위반 관련 논쟁은 다음 링크를 참고; 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belarus -united-nations-nuclear-0139f0f7f830e275b509cbfa4737915a).

3)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군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중력폭탄인데, 주한 미 공군기지나 한국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할 때마다 북한에서는 전술핵에 의한 선제타격의 공포를 느낄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핵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파괴당하는 상황을 막고자 남한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할 때마다 핵 경보를 발령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오판에 의한 우발전쟁의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북한은 경보즉시발사(LOW: Launch on Warning) 교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핵을 가진 북한이 감시, 정찰, 조기경보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3축 체제 발전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억제력을 강화할 수단으로 '한국형 핵공유'[4]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핵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3축 체제 강화에 부가하여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강화 방안을 한국형 핵공유 가능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동안 북핵 대응에 있어 확장억제의 신뢰성 강화 방안으로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왜 한국형 핵공유 옵션을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한국형 핵공유 옵션이 장기적으로는 북핵 협상에 있어 전략적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도 주장할 것이다. 북핵이 고도화되어도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더욱 발전시킨 한국형 핵공유 옵션을 결합하면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고, 동맹보장과 관련한 한국민의 우려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억제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핵 협상에서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야 할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Ⅱ. 핵무기와 확장억제의 정치·군사적 효용성 논란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정치적인 무기, 절대무기로 불린다. 그래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없이도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뒤에서 논의될 것인데, 여기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극단적 대안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음을 논증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핵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1. 핵무기의 정치적·군사적 효용성 논쟁

핵무기 앞에서 재래식 전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그래서 북한 핵이 완성되면 적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우리 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다. 이를 더욱

4) 여기서 말하는 핵공유는 나토(NATO)식 핵공유, 즉 미국의 전술핵이 전진배치되는 형태의 핵공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유럽에서 핵공유 개념의 확장이 시도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핵무기 전진배치 없는 핵공유를 논의한다.

부추기는 것이 북한의 과장된 행태다. 북한은 2022년 '핵 선제공격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한반도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영토 완정(完整)'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우리 사회 내부에 가득한 핵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에 더하여 이와 같은 북한의 과장된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핵무기를 절대무기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핵무기의 정치적·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상황만 봐도 그렇다. 버지니아大의 섹서(Sechser) 교수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의 정치적 효용성이 제한적임이 증명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5] 그에 의하면 지금 러시아는 핵무기가 결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핵 공갈로 1차 걸프전[6]과 같은 서방의 직접 군사개입은 막았지만 경제제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는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러시아의 호전적인 핵 공갈은 국제적 반감을 극도로 증폭시키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며, 전황을 반전시키는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오하이오大의 뮬러(John Mueller) 교수는 어떤 국가가 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핵무기의 정치적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7] 그에 의하면 핵무기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인데, 개발과 보유에 있어 기술적,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전략적 비용이 막대하다. 통상 어떤 국가가 핵을 보유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항적 세력균형이 도모됐고, 정작 전쟁에서는 써먹지도 못했다. 핵보유국들이 베트남전, 포클랜드전, 걸프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핵을 독점한 시기에도 미국은 어떤 나라에게도 복종을 강요할 수 없었고, 그것이 통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8] 타카하시(Takahashi)의 설명에 의할 경우 핵무기로 '무엇을 못하게 하는' 억제(deterrence)는 가능하겠지만 '무엇을 하게 만드는' 강제(compellence)는 불가능해보인다.[9]

---

5) Carnegie Corporation, How i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lilkely to Alter the Post-World War II International Order, May 25, 2022. (https://www.carnegie.org /our-work/article/how-is-russias-invasion-of-ukraine-likely-to-alter-the-post -world-war-ii-international-order/) 참조.

6)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다국적군을 투입하여 이라크군을 패퇴시키고 쿠웨이트의 영토를 회복시켜주었다.

7) 그는 파키스탄이 핵을 가져서 국제사회의 주의를 끌었지만 그것뿐이었고 중국은 핵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보다 경제적으로 부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본다. 또한 프랑스나 영국이 지금보다 핵무기를 두 배 더 가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거의 의미 없다고 주장한다.

8) John Mueller. (2010). Atomic Obs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9) 타카하시는 억제(deterrence)를 '무엇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강제(compellence)를 '이미 무엇을 먹었다면 위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먹은 것을 빼내는 것'이라는 적나라한 표현으로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Sugio Takahashi, Development of gray-zone deterrence: concept building and 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 *The Pacific Review*, DOI:10.1080/09512748.2018.1513551) 핵무기로 어떤 강제가 가능했던 사례는 매우 희박하다 하겠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상이한 설명이 가능할 수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도 러시아가 핵 공갈을 감행했기 때문에 서방의 개입을 성공적으로 차단했고, 이번 전쟁을 핵 그림자 하의 재래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공적으로 조성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강압 수단으로서의 핵무기의 효용성은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핵무기에 대해 가져왔던 '절대무기'라는 이미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확장억제: 억제(deterrence)와 동맹보장(assurance)의 딜레마

그동안 한국 사회 일각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실제로 억제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해왔다. 이를 고려하여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협의체계를 보강함으로써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10] 1953년 이후 정전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어왔고,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억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의 확장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국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것은 동맹보장의 문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와 동맹보장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11] 확장억제 관련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동맹보장이 공고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비핵화 노력이 실패로 끝나고 새 정부 들어 북핵 고도화에 대응한 억제 강화조치가 필요했던 시점인 2023년 4월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다. 워싱턴 선언으로 실질적인 억제 강화조치가 취해졌지만 과거에 논의되었던 확장억제 발전 방안과 비교하여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도 엄연히 존재한다.[12] 이런 견해를 펼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억제 강화조치와 동맹보장이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간극 때문에 동맹 간 신뢰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각각이 처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

10) 한·미 간 확장억제협의체계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1953년 이래 미국의 핵우산은 암묵적으로 작동 → ② 1978년 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초로 핵우산 명시 → ③ 2006년 38차 SCM에서 핵우산 재확인 → ④ 2009년 한미 정상회담과 41차 SCM에서 핵우산 다시 언급 → ⑤ 2010년 42차 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구성 합의 → ⑥ 2011년 43차 SCM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신설 → ⑦ 2015년 억제전략위원회(DSC) 추가 → ⑧ 2016년 한미 2+2회담 및 48차 SCM에서 확장억제전략위원회 출범(EDSCG) → ⑨ 2023년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11) 확장억제의 대상은 적국인데 반하여 동맹보장의 대상은 우방국 및 그 국민이다.

12) 국방대 설인효 교수는 현재 안보·국방 커뮤니티 내에서 워싱턴 선언 관련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를 상기와 같이 전달하였다(2023. 9. 1. 자문내용).

고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운운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주한 미군 28,500명이 한국 땅에 주둔하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표가 어디 있겠느냐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이 보는 미국은 전략상황이 변화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손쉽게 꺼낸 나라다. 닉슨 대통령이 그랬고, 카터 대통령이 그랬으며, 가깝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했다.[13]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동맹보장의 핵심적, 물리적 증표'라는 주장이 이제는 더 이상 대중에게 호소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여론의 지형이 이러하므로 북핵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보장의 물리적 증거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

여론의 지형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확장억제의 출발점은 북핵 위협 평가이며, 한미간 핵위협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북핵 위협보다 한국의 인식이 더 심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국은 이를 미국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하게 된다. 특히 미중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14] 더불어 북한의 핵능력 신장에 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국내에 잘 설명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필연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 연계분리) 문제를 야기하여 한국민의 안보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워싱턴 선언으로 실질적인 동맹보장 강화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걸 도외시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내 여론은 다시 동요할 것이다. 이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정부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동맹 간 신뢰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오해를 풀어야 하는지, 미국이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이제는 한·미 양국이 워싱턴 선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억제와 핵 관련 동맹보장의 상시적이고 물리적 보증수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사회 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이 고도

---

13)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11월 13일, 조선일보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핵무장을 결단할 수 있고, 그러면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는 요지의 사설을 게재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 11/12/2019111203527.html, 검색일: 2023. 8. 30.).

14) 설인효·손한별. (2023).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3권 2호, p. 28.

화되고 있고, 신냉전 구도가 공고해지면서 북한의 폭주를 막을 정책대안이 '억제력 강화' 방향으로 크게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공동안보 논의에서 최소한의 핵 억제력 보유를 강조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있다. 1980년대 군사적 적대국과의 공동안보를 논의하던 UN 팔메 위원회[15]에서도 최소한의 핵 억제력 보유를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한국 내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이었고, 어떤 제한점이 있었던 것인가? 이 질문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강화, 동맹보장의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나누어 검토한다.

3.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안들과 문제점

미국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핵위협에 대해 다소 느슨한 대응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16] 유럽에는 러시아라는 핵 강국이 있지만 아시아에는 중·소규모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뿐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아시아에 배치되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겠는가? 그동안 미국은 한측이 제기하는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조치에 대한 대응으로써 홍보나 협의체 구성 위주의 접근에 중점을 둬왔다.[17] 이에 비판적인 한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서 '핵 관련 요소'의 강화 또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제기된 방안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① 확장억제의 틀을 유지하되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강화하는 방안, ② 전술핵 재배치 및 핵공유론, ③ 마지막으로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들 주장의 개략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가. 美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강화 및 정례화

한반도에서 핵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이슈가 되었던 것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다. 그동안 한반도 핵 위기 시마다 미군은 항모, B-1/B-2/B-5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SSN) 등의 전략

---

15) 1980년대 들어 유엔은 '군축 및 안전보장 독립위원회(The 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스웨덴 출신의 올로프 팔메(Olof Palme) 전 총리가 이끌었는데, 이 때문에 이 위원회가 '팔메 위원회(Palme Commssion)'로 불린다.

16) 부형욱(2023)은 아시아적 확장억제는 핵 억제보다는 재래식 억제를 강조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시아적 확장억제 모델'을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필요시에만 '날아왔다 돌아가는 방식(fly-in, fly-out arrangement)'으로 설명한 리온(Lyon)의 예를 들며 핵 관련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아시아적 확장억제 모델의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다(부형욱, "아시아적 확장억제 모델의 향배." 『동북아안보정세분석』, 국방연구원, 2023. 8. 30.).

17) Town, Jenny and Ragnone, Iliana. (2022) *US-ROK Strategic Dialogue: Recalibrating Deterrence Against An Evolving DPRK Nuclear Threat,* Stimpson Center(https://www.stimson.org/2022/us-rok-strategic-dialogue-recalibrating- deterrence-against-an-evolving-dprk-nuclear-threat/).

자산을 전개하여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화, 상시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여 한측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강화 및 정례화 문제 외에 한국의 요구에 따른 전략자산 즉각 배치, 보다 구체적인 정보공유, 핵사용을 포함한 작계의 공동 작성 및 이를 반영한 연합연습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단순히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강화와 정례화 등을 넘어서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사실상 뒤에서 논의하게 될 핵공유의 상당한 특징을 포함하게 되었다.

전략자산의 가시성 강화 및 전개 정례화의 구체적 방법 측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동안 한국에 전개되었던 대다수의 미군의 전략자산은 핵투발 모듈이 없는 것들이었다.[18] 이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확장억제에서 '핵 관련 요소(nuclear elements in extended deterrence)'는 나토(NATO)와 비교 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리온(Lyon)의 표현대로라면 한국에 제공된 확장억제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필요시에 '날아왔다 돌아가는 방식(fly-in, fly-out arrangement)'으로 요약된다.[19]

북한 핵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날아왔다 돌아가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은 미국이 핵 사용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박휘락(2021)은 미군의 저위력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4척을 동해에 상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20] 한동안 안보 커뮤니티 내에서 박휘락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그의 주장은 미군이 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현재로서는 논의할 수 없는 방안이 되어버렸다.

한편 202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하게 되었는데 이는 박휘락의 제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군이 실행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적어도 한국에 제공되는 확장억제에서 '핵 관련 요소'의 비중이 대폭 증대된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워싱턴 선언으로 미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국에 기항하면서 그동안 한국이 요구했던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강화 및 정례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

18) 실제로 항모 전투단에는 핵무기가 없으며, 괌에서 날아오는 B-1/B-52 전략폭격기에는 핵 투발 모듈이 제거된 것들이었다. 가끔씩 부산항에 기항하는 핵잠수함(SSN)에도 핵무기는 장착되지 않는다. 미군이 핵잠수함(SSN)에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프로그램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다. 미 본토에서 날아오는 B-2 폭격기만이 핵투발 모듈이 있었을 것이나 실제로는 상징적인 비행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 Lyon, Rod. (2019). *Nuclear Strategy in a Changing World*,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p. 22.

20) 박휘락. (2021). "나토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의 현황과 동북아시아 도입에 관한 시론적 분석." 『국가전략』, 27권 1호, pp. 103-128.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배치 및 전개가 이루어질지는 양국 간 협의의 심도와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할 것이다.[21] 그러나 과거와 비교 시, 워싱턴 선언 이후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갈증은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

나. 전술핵 재배치 및 핵공유론

전술핵 재배치론은 한국 내 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서 미국의 권한 하에서 미군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성훈(2023)에 의하면 미국은 냉전기에 한반도에서 1991년까지 핵무기를 운용하였는데, 여기에는 핵지뢰, 어네스트 존(Honest John) 등 미사일 체계, 곡사포탄 등이 포함되었다.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1960년대 최대 950여 기에 달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B-61 항공폭탄 40기와 핵폭탄 60여 개로 조정되었다.[22]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1991년 말까지 당시에 남아 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켰고, 그 이후 한국 영토 내에 미군의 전술핵은 다시 배치된 적이 없다.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걸은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핵개발에 매진하였고, 급기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술핵 재배치론자들은 미군이 본토에 보유하고 있는 B-61계열의 항공폭탄을 다시 들여오자고 주장한다. 전성훈(2018)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기존의 '재래식 對 재래식'의 군사력 균형과 더불어 '핵 對 핵'의 核균형이 병존하는 '쌍균형 안보구도'가 정착되면 핵군축을 화두로 한 협상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3][24]

그러나 이제 전술핵 재배치는 정치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안이 되어버렸다. 2023년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고 하였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전술핵 재배치는

---

21) 전략핵잠수함은 미군에게도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전략자산이고 수량도 14척으로 제한되어있으며,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에 각각 6척 및 8척이 할당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 배치 및 공개적인 전개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전략핵잠수함에 탑재된 트라이던트 미사일(SLBM)은 ICBM급 사거리를 가지는 미사일이므로 최소 운용사거리(약 2,500km)가 있어 동해 전개가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것도 아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최소사거리와 관련해서는 영국 국방부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www.armedforces.co.uk/Europeandefence/edequipment/edmis/edmis1a3.htm)

22) 전성훈. (2023). "한국판 MAD와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 『이슈 브리프』 2023-16, 아산정책연구원.

23) 전성훈. (2018).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대안: 남북한 상호 핵군축." 아산정책연구원 블로그. (https://www.asaninst.org/contents/실패한-비핵화-외교의-대안-남북한-상호-핵군축/)

24) 국방대 설인효 교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하여 ① 평시에 저장 및 운영 시설만 유지하고 데프콘 3 발령 시 한반도에 전개하여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시간 제한적 재배치안'과 ② 특정 시점에 - 예컨대 1년 후 - 전술핵 재배치를 예고하고, 이 기간 동안 북한이 한미동맹이 제시하는 일정 조건에 따른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조건부 (협상 유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고 하였다. (2023. 9. 1. 자문내용)

정치적으로는 워싱턴 선언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되고,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실행이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핵공유를 주장하기도 한다. 미군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핵공유다. 이들은 핵작전의 공동 기획, 전투기 등 한국군의 전력이 핵작전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핵공유 논의는 전술핵 재배치와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두고 넘어가야 할 논점이 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워싱턴 선언에 의해 핵협의 그룹(NCG)이 설치되면서 핵공유의 주요 특성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핵무기 배치 없는 '한국형 핵공유' 논리를 전개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다.

> ...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25]

워싱턴 선언에는 캄프와 렘케스(Kamp and Remkes)가 2010년대 나토(NATO)의 핵공유 메커니즘을 논의하면서 지적한 4가지 국면이 모두 포함된다. 일찍이 캄프와 렘케스는 핵공유의 핵심을 ① 핵 관련 정보공유, ② 핵 사용 관련 협의체계, ③ 공동 핵기획, ④ 작계 공동실행이라고 한 바 있는데,[26] 워싱턴 선언에 이 4가지 측면이 모두 언급된 것이다. 이는 뒤에서 논의하게 될 핵공유 개념의 확장과 연계된다. 워싱턴 선언으로 과거 한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한 전술핵 재배치를 전제로 한 핵공유는 불가능한 대안이 되어버렸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한국형 핵공유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나누어 뒤에서 논의한다.

---

25) 대통령실. (2023). "워싱턴 선언 전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 4. 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28)

26) Kamp, Karl-Heinz and Remkes, Robertus. (2011). *Options for NATO Nuclear Sharing Arrangements*, Nuclear Threat Initiative.

다. 독자 핵무장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첫 1년 동안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실패하면서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신정부는 이에 적극 부응하여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북핵 해법이 거의 없다시피 한 마당에 자체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가볍게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을 경험한 터였기 때문에 한국민의 이러한 요구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자체 핵무장이라는 대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독자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깨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무릅쓰고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것은 핵무장을 선언하는 즉시 우리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구입할 길이 막히게 되고 원전에서 생산하는 값싼 전기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산업이 멈춰버릴 것이라는 주장이다.[27] 생각해보면 실로 엄청난 타격이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제재가 우리를 옥죌 것이다. 아무튼 이번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대안이 논의되지 않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Ⅲ. 워싱턴 선언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핵공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워싱턴 선언으로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또는 상시화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대안임이 드러났다. 특히 전략폭격기가 필요시에 '날아왔다 돌아가는 방식(fly-in, fly-out arrangement)'은 그동안 많이 활용한 방안이므로 동맹보장의 새로운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미 강화될 대로 강화된 군사력 현시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휘락(2021) 등이 미군의 핵잠수함의 동해 (상시) 전개와 같은 주장을 한

27) 미 국무부 고위 관료 출신인 아인혼(Einhorn) 박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면 원전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2022. 11. 9. 자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안은 전략핵잠수함의 운용 특성을 고려할 때 난감한 점이 있다. 전략핵잠수함의 움직임은 기밀 유지가 필수적이다. 은밀성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동맹보장 수단으로서의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필자는 한국형 핵공유 옵션을 제안한다.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되는 마당에 어떻게 핵공유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핵공유 개념의 확장으로 가능한데, 뒤에서 언급할 류제승(2019)과 이수형(2023)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된다. 이하에서는 핵공유 개념의 확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1. 한국형 핵공유 모델 논의의 기초: 핵공유 개념의 확장

가. 핵공유 개념의 유연화 추세

류제승(2019)은 한미 양국은 이미 '낮은 수준의 핵공유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의 핵무기를 나토와 같이 동맹국에 전진배치하는 것을 '높은 수준'의 핵공유체제로 보고 있는데, 한국에는 미군의 핵무기가 전진배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핵공유'의 상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핵공유체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28] 한편 이수형(2023)은 기지형, 대여형, 기부형 핵공유로 구분하면서 기존 핵공유 개념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29] 기지형(basing), 대여형(loaning)은 나토 모델을 칭하는 것이고 기부형(giving)은 한국이 원하는 '핵 잠재력 강화를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수형(2023)은 한국이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핵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0]

핵공유 개념의 유연화 또는 확장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대 유럽에서 있었던 (전술)핵배치와 핵공유를 구분하고, 전술핵 배치 없는 핵공유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즉 냉전이 종식되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순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핵무기 전진배치를 골자로 하는 나토식 확장억제 모델에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미국 핵무기가 전진배치되지 않는 확장억제 모델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캄프와 렘케스(Kamp and Remkes)의 핵무기의 전진배치 없는 핵공유(Nuclear

---

28) 류제승. (2019). "한미 '핵공유 협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자유한국당 토론회 발표문 (2019. 11. 19.)

29) 이수형. (2023).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 모색: 이론과 실제."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pp. 101-122. 이수형은 이 논문에서 "핵공유는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의 핵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유무형의 다양한 안보 자원을 지원·제공·협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치적, 안보적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전략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30) 기지형은 1950년대 나토 초기 모델을 지칭하고, 대여형은 탄두, 운반수단 분업체계인 현 나토 모델을 지칭하며, 기부형은 최근에 제안되는 모델이다.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기지형, 대여형은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형 핵공유를 제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핵공유도 NPT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sharing without forward basing) 논의이다.[31] 이들의 주장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핵공유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류제승(2019)과 이수형(2023)의 논의, 그리고 캄프와 렘케스(2011)의 논의는 핵공유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류제승과 캄프·렘케스의 주장은 '핵무기가 우리 땅에 없는 데 어떻게 핵이 공유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이 된다. 즉 나토 핵공유 모델에서 전술핵이 배치된 것이 핵공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핵공유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핵 관련 정보공유, 핵 사용 협의체계, 공동 핵기획, 핵 작전의 공동실행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무기체계가 발전되고 또 그것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영토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고 없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 등 최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사실상의 핵공유'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미국이 이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핵공유의 4가지 핵심분야 모두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른바 '사실상의 핵공유' 논란이 그것인데, 워싱턴 선언 직후 발생한 이 논란은 한국형 핵공유 옵션을 논의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사실상의 핵공유 논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직후인 2023년 4월 27일, 미국 현지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당국자의 발언을 둘러싸고 '핵공유'의 개념과 관련한 양측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에드 케이건(Ed Kaga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해석에서 한국 측이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한 데 대하여 명확하게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됐는데 여기(워싱턴

31) Kamp, Karl-Heinz and Remkes, Robertus, 전게 논문.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 ...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32]

케이건 국장의 발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어 온 기존의 '핵공유' 개념에 충실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핵이 미국의 동맹국에 배치되어야 핵공유로 간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기존 핵공유 개념은 핵무기 전진배치, 핵투발 시 역할분담, 역할 및 비용분담을 위한 공동실행 계획 등을 전제로 한다. 케이건은 기존 핵공유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동맹국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워싱턴 선언에서 전술핵 재배치 대안이 배제되었고, 전술핵 재배치가 군사적인 이점이 없다는 인식이 상당한데 우리 대통령실이 이것들을 무시하고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해석을 내놓았을 리도 만무하다. 그렇다면 남는 해석은 이런 것이다. 미측은 기존 핵공유 개념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 대통령실은 확장된 핵공유 개념을 언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먼저 미측에게 그동안 핵공유 개념의 변화 움직임이 있었고, 한·미 양국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0년대 유럽에서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핵무기 전진배치 없는 핵공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여기서 핵공유 개념의 확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야 했다. 그래야 미국이 기존 핵공유 논의와 최근 핵공유 논의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아시아의 동맹국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역내 핵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핵위협에 대해 다소 느슨한 대응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유럽에는 러시아라는 핵 강국이 있지만 아시아에는 중·소규모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뿐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실제로 확장억제의 신뢰성 이슈를 논의하면서 아시아 국가 중 특히 한국이 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비교하는 것을 두고 미측이 토로하는 불편함을 들어보면 그렇다. 그동안 미측은 나토의 NPG가 한·미 간에 있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억제전략위원회(DSC)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국은 이들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오해한다고 개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측이 제기하는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조치에 대한 대응으로써 홍보나 협의체 구성 위주의 접근에 중점을 둬왔다.[33] 그러나 유럽의 핵기획그룹(NPG)과 우리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억제전략위원회

32) 연합뉴스. (2023. 4. 28.), 美 고위당국자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8031400071)

33) Town, Jenny and Ragnone, Iliana, 전게 보고서.

(DSC) 등이 유사한 수준의 협의체라는 미측의 주장에 공감할 한국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제는 이러한 접근이 한계에 이르렀다. 실질적이고 물리적이며, 상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내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 대통령실이 언급한 '사실상의 핵공유'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 다소 성급한 해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인 것은 확실하다. 2010년대 유럽에서 논의한 핵무기가 전진배치되지 않는 핵공유와 우리 정부가 언급한 '사실상의 핵공유' 간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조항을 볼 때 '사실상의 핵공유' 발언이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측은 케이건 국장의 선 긋기 발언 이후 '핵공유'라는 용어 자체를 터부시하고 있는 분위기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미측이 우선 한측의 해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고, 한측은 당당하게 핵무기 전진배치 없는 핵공유 모델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핵무기 전진배치 없는 사실상의 핵공유 추진방향

사실상의 핵공유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의 최대치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34] 우리는 ① 전시에 핵을 공유하는 잠재적 핵공유를 염두에 두고,[35] ② 핵공유 역량을 사전에 준비하며, ③ 공동실행계획을 준비하고, ④ 정보공유 및 핵사용 전 협의기제 등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핵공유 개념과 미래에 실행 가능한 사실상의 핵공유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존 핵공유와 사실상의 핵공유 비교

구분	기존 핵공유	사실상의 핵공유(미래)
핵무기 배치	· 나토 5개국에 B-61 중력핵폭탄(전술핵) 유지	· 전진배치 자제(Forward-deployable but not forward-deployed)

34) 워싱턴 선언에 위배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향후 논의 가능한 핵공유 관련 억제 강화의 높은 수위의 정책대안들 중에는 한국에 제공될 핵 자산 명시(earmarking), 공동실행(common execution) 방안 등이 될 것이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논의한다.

35) NPT는 전시에 효력이 없으므로 전시 핵무기 공여는 문제 되지 않는다.

구분	기존 핵공유	사실상의 핵공유(미래)
핵 관련 군사 훈련	· 주기적 타격 연습 실시 ① 핵타격 명령 수령 후 핵무기 반출 및 항공기(DCA) 탑재 ② 핵무기 활성화 진행 ③ 이륙, 공중급유 받으며 목표지점까지 비행 ④ 적 방공망 제압 ⑤ 목표물 정밀 조준 및 투하 ⑥ 공중급유 및 귀환	· 직접적인 핵타격 작전을 제외한 재래식 위주의 지원훈련 실시
비용 분담	· 핵무기 보관을 위한 기지 및 시설 부담. · 이중용도항공기(DCA) 제공 · 자국 영토를 적의 핵 타격 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치·군사적 핵 위험 공유(nuclear risk-sharing)	· 핵 확장억제 관련 비용분담 일부 검토 · 나토(NATO)보다는 낮은 수준의 핵 위험공유
핵 관련 협의 기제	· NPG를 위주로 한 핵 관련 협의, 기획, 정보공유	· 핵 관련 협의, 기획, 정보공유 기제 강화

* 출처: 저자 작성

〈표 1〉에서 보듯이 사실상의 핵공유(안)는 전술핵 재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핵무장에 대한 고려는 더더욱 없다. 그럼에도 현 수준에서 미측이 논의하기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측은 핵타격 작전과 관련된 지원훈련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북한 혹은 중국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이러한 훈련을 공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역내에 불안정이 조성되지는 않을지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훈련이 군사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비용분담(burden sharing)과 위험공유(risk sharing)도 유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물론 핵 관련 협의 메커니즘을 유럽 수준으로 높이는 것에는 미군의 전략적·작전적 융통성을 이유로 다소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할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타협과 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모든 문제는 지극히 군사적이지만 그에 이르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민들은 그동안 미국이 제공한 수준의 확장억제 및 동맹보장 강화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보여주었던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 조치 중 대부분은 언론에 '사진을 찍기 위한 수단(photo-ops)'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제 한국민은 전략폭격기가 비행하는 사진,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사진, 항모가 들어오는 사진 말고 보

다 실질적이고, 상시적이며, 물리적인 증표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핵공유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삼아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 위배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핵공유로 칭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3. 한국형 핵공유 대안 모색

전술핵 재배치 없는 핵공유를 사실상의 핵공유로 칭해도 된다. 그런데 이를 좀더 한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다면 이는 사실상의 핵공유보다는 한국형 핵공유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국형 핵공유의 대안을 다양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본 고에서는 핵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미측과 사전에 조율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이를 한국형 핵공유의 특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형 핵공유의 특성으로 제시할 요소는 ① 핵무기 사전배정, ② 영토 밖 핵 시설 구축, ③ 위기 시 핵무기 공여이다. 언뜻 보아도 이를 현실화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이 초래할 위험과 부작용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한국형 핵공유의 주요 요소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제공될 핵무기 사전배정(earmarking)

한국형 핵공유의 주요 요소 중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이 핵무기 사전배정이다. 핵무기 사전배정은 한국 영토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으면서도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동맹보장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해 미군의 핵전력을 사전배정한다는 것을 공표한 적이 없다. 핵전략은 1급 국가기밀이고, 미국은 핵전력 사용상 융통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이 보유한 핵무기 중 사전배정(earmarked)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나토의 이중용도항공기(DCA)에 장착될 60발의 중력폭탄은 나토에 할당된 핵무기라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물론 이들 핵무기가 나토 이외의 동맹국에 사용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 이들 전술핵은 나토에 사전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에 큰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토 국가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략수준에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무기의 추가적인 사전배정을 희망했다.[36] 미국이 이에 호응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이 핵무기 사전배정과 관련하여 나토에 어떠한 공개적 약속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안

을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임을 알려준다. 양국의 최고 통수권자 수준에서 담판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철이 어렵다고 학술적 검토마저 하지 않을 일은 아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리스트를 펼쳐 놓고 어떤 것을 사전배정하면 좋을 것인가를 미리 논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라도 유익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표 2〉 참조). 전문가 수준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면 그것 자체가 대미 협상에 있어서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

〈표 2〉 미국의 핵무기 현황(2023)

구분	수량	핵탄두/파괴력	비고
ICBM (미니트맨III)	800	W78: 335kt(다탄두用)	400기는 작전배치 중 (나머지는 저장)
		W87: 300kt	
SLBM (트라이던트II)	1,920	W76-1: 90kt(다탄두用)	이 중 280기는 14척의 SSBN에 할당 (나머지는 저장)
		W76-2: 8kt(다탄두用)	
		W88: 455kt(다탄두用)	
ALCM (공중발사순항 미사일)	500 (B-52 투발)	W80: 5-150kt	B-52 87대 중 46대만 핵투발 가능
중력폭탄	288 (B-2 투하)	B61-7: 10-360kt B61-11: 400kt B83-1: ~1,200kt	B-2 20대 모두 핵투발 가능
	200 (F-15등 DCA 투하)	B61-3/-4: 0.3~170kt	60발은 나토 DCA 할당
계	3,708	-	퇴역/해체 대상(1,536) 포함 시 5,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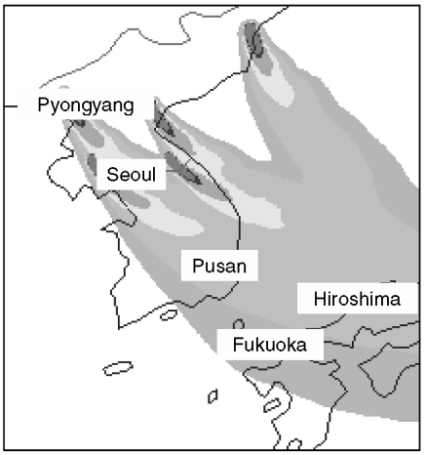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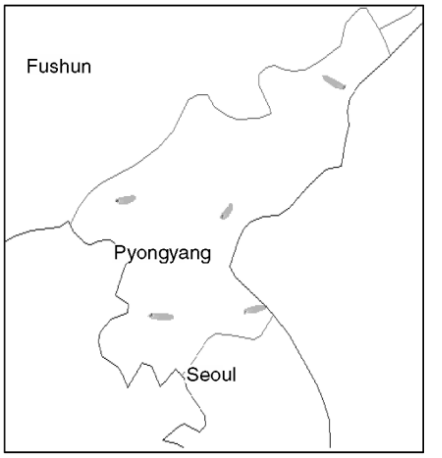
출처: Kristensen과 Korda의 자료를 수정하여 재작성 (Hans M. Kristensen, Matt Korda, *Nuclear Notebook: United States nuclear weapons 2023*,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https://thebulletin.org/premium/2023-01/nuclear -notebook-unit -ed-states-nuclear-weapons-2023/)

'미국의 핵무기 중 어떤 것을 한반도 상황에 사전배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군사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리버와 프레스(Lieber and Press)의 연구에 수록된 북한 핵시설 타격 옵션같은 것이다(〈표 3〉 참조). 리버와 프레스는 북한 핵시설 5곳을 가정하고 이를 파괴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W88을 장착한 SLBM 10발을 발사하는 대안과 B61 중력폭탄 20발을 투하하는 대안을 비교하였다. 두 대안 모두 핵시설 5곳을 완벽하게 파괴했는데 문제는 인명피해와 낙진 피해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455kt의 파괴력을 가진 W88 탄두 10발을 적용했을 때는 2~3백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0.3kt으로 파괴

36) Kamp, Karl-Heinz and Remkes, Robertus, 전게 논문.

력을 조절한 B61 탄두 20발을 투하했을 때는 100명 미만의 사망자만 나왔다.[37] 낙진 피해도 B61 탄두를 투하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 북한 핵시설 타격 옵션

구분	W88(고위력 핵무기 455kt) 10기	B61(저위력 핵무기, 0.3kt) 20기
낙진 피해 범위		
결과	- 북핵 시설 5개소 완전파괴 - 2~3백만명 사망(남·북한 합계)	- 북핵 시설 5개소 완전파괴 - 100명 미만 사망

출처: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The New Era of Counterforce: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4 (Spring 2017), p. 31.

이러한 모의결과를 볼 때 한반도 유사시에 사전배정을 요구할 미국의 핵무기는 이중용도 항공기(DCA)로 투하되는 B61 계열의 중력폭탄이나 W76-2와 같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저위력 핵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는 고위력 탄두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고위력의 전략핵 사용은 미국 단독행동으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핵공유의 중요한 4개 국면, 즉 핵 관련 정보공유, 핵 사용 협의체계, 공동 핵기획, 핵 작전의 공동실행을 적용할 수 있는 핵무기는 중력폭탄 등 저위력 핵무기가 적절할 것이다. 고위력 핵무기의 경우, 정보공유나 핵 사용협의는 가능하겠지만 핵 기획이나 핵 작전의 공동실행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핵협의 그룹(NCG)이 초기 단계이므로 미국과 핵무기 사전배정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을지, 그것이 추상적 수준에서나마 공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37)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다이얼을 돌려 폭발력을 조절하는 이른바 DAY(Dial-A-Yield) 기능이 있다.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NCG가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측은 미측으로부터 핵무기 사전배정과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비록 그것을 공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되면 이하에서 논의할 핵 관련 공동기획에서 핵시설 구축 및 유사시 핵무기 대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나. 영토 밖 핵무기 보관시설 구축(basing)

핵공유를 현실화하려면 한반도 인근에 미군의 핵시설이 존재해야 하고, 유사시에 미군으로부터 이를 공여받아 우리가 투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례로 조비연(2022)은 전술핵 재배치의 대안으로 연성 재배치를 주장하였는데, 유사시 전술핵 반입을 위해 한국 내에 핵무기 보관시설을 미리 준비하거나 괌(Guam)에 핵무기 보관시설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38] 이는 신범철(2019)이 과거 언론을 통해 제안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해 놓았다가 유사시 한국 공군의 F-35를 활용하여 한국 또는 일본에 옮겨 놓고 활용하자는 제안과 잘 융합될 수 있다.[39]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내 전문가들 대부분의 제안은 한국 영토 내에 핵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술핵 재배치가 어려우니 유사시에 한국에 들여오고, 그렇게 들여온 전술핵을 한국 영토 내 핵시설에 보관했다가 최후의 순간에 사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사전배치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여러 경로로 확인해봐도 미국은 괌에 핵무기 보관시설을 구축할 계획이 없었다.[40]

물론 미군이 괌에 핵무기 보관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이것을 가능하게 하면 된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괌의 전략적 가치는 날이 갈수록 증대될 터이고, 통합억제 측면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통합도 중요해질 것이다. 인·태 지역에서 동맹국의 영토 외에 핵 시설을 구축할 곳은 괌 이외의 대안을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괌에 핵 시설을 건설하도록 견인할 최소한의 여건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8) 조비연. (2022). “나토식 핵공유체제의 대안 모색.” 『KIDA Brief』, 한국국방연구원.

39) 조선일보. (2019. 7. 31.). “괌에 전술핵 배치, 유사시 F-35로 한반도 옮겨 놓고 사용할 가능성.”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0120.html?utm 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40)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진행한 가장 최근의 토의는 익명을 요구한 미측 전문가들과의 논의였다. 이들은 현재 미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전략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와 현역 영관급 장교였는데 현재 미군은 괌에 핵시설을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이들은 또한 한국에 핵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가 극심할 것임을 우려하였다(2023년 9월 12일 자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상의 핵공유를 위한 차원에서 괌에 핵무기 보관시설 건설 관련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하면 어떨까? 우리 정부가 매년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중 막대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쌓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괌에 핵무기 보관시설을 건립하는 데 이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한다면 미측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괌에 핵시설이 건립되었을 때,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이 얼마나 증대될지를 고려한다면 미측으로서도 흥미로운 제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괌에 건설할 핵무기 보관시설은 항공기에 장착하는 중력폭탄에만 국한할 일도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을 건조할 경우, 우리 핵잠에 있는 미사일에 미군의 핵탄두를 공여받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수중전력을 위한 핵무기 보관시설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군은 현재 자신들의 핵잠에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만 장착하고 있지만 향후 핵순항미사일도 배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미군의 수중핵전력 발전 추이를 살펴보면서 이에 보조를 맞춰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41]

다. 위기고조 시 핵무기 공여(provision)[42]

앞서 핵공유 개념의 확장을 논의하면서 이수형(2023)이 핵공유 유형을 기지형(basing), 대여형(loaning), 기부형(giving)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43] 그의 분류에 의하면 기지형, 대여형은 과거 및 현재의 나토 모델을 칭하는 것이고 기부형은 동맹국에게 '핵 잠재력 강화를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공여(provision)는 이수형의 분류에 의하면 대여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일부 나토 국가들 간의 핵공유를 핵무기 '대여'로 볼 수 없고, 일방적인 공여의 형태이며, 필자가 제안하는 핵공유는 전술핵의 재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대여형'이 아닌 핵무기 '공여'로 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위기 시 핵무기 공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한데, 본

41) Soofer, Robert and Slocombe, Walter B. (2023) Congress should fund the nuclear sea-launched cruise missile, *New Atlanticist*,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ongress-should-fund-the-nuclear-sea-launched-cruise-missile/). 이들은 러시아, 중국,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잠수함발사핵순항미사일(SLBM-N)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잠수함발사 핵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을 강력 비난하였다.

42) 공여(供與)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건이나 이익 따위를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함'이며, 미군에 의한 핵탄두를 한국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공여'가 현 논의의 맥락에 부합하는 용어라고 보겠다.

43) 이수형, 전게 논문.

연구에서는 ① 공중전력기반 핵공유의 일환으로서의 핵무기 공여, ② 수중전력기반 핵공유 방안으로서의 핵무기 공여를 제안한다.

1) 공중전력기반 핵공유의 일환으로서의 핵무기 공여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 성공하여 괌에 핵무기 보관시설이 건립된다면 한국 영토 밖에서 출발하는 핵공유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한국 영토 내에 핵시설을 건립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부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항공기에 의한 핵무기 투하는 전략적인 융통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즉 미사일은 일단 버튼을 누르면 중도 취소가 안 되는 데 반해 항공기에 의한 핵무기 투하는 사정변경에 의한 작전취소가 가능하므로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하는 데 융통성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는 우리의 F-35가 괌에서 출발하여 핵무기를 투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데프콘-3 발령 시 한반도에서 한국 공군의 F-35가 우리 공중급유기의 급유지원을 받으며 괌 기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쟁 발발 후 필요한 시점에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장착하고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민간항공기의 경우에도 괌의 원팻(A. Won Pat)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하는 시간이 4시간 내외임을 고려할 때, F-35의 비행시간은 훨씬 단축될 것이다.

이에 대해 'B-2 전략폭격기와 같은 미군 자산으로 실시하면 될 일을 굳이 우리 군의 F-35로 할 필요가 있는가? 괜히 미군의 작전적 복잡성만 증대시키는 일이 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미군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 한국민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과 핵 작전에의 기여도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해진다. 작전의 복잡도를 증대시킨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 협의가 증가하고 작전적 연계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미 연합전력의 결속력이 증대된다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수중전력기반 핵공유의 일환으로서의 핵무기 공여

위에서 논의한 공중전력기반 핵공유는 단시간에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항공기가 공중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지상 기지에 착륙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적의 최우선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의 부담도 상당해진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수중전력기반의 핵공유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비연(2022)은 미군의 핵탄두를 한국의 핵잠에 배비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하는 방식의 핵공유를 제안하였다.[44]

여기에는 최소 2가지의 전제조건이 뒤따르게 되는데, 우선 미군이 괌에 수중전력을 위한 핵보관 시설 건설에 협조하고, 유사시에 보관된 핵탄두 중 일부를 한국에 공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45] 디젤 잠수함의 경우, 한국 내 기지에서 괌까지 항행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핵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상의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중전력기반 핵공유를 운용할 때에는 공중전력기반 핵공유 시와는 다른 방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와는 별개로 최소 2척의 핵잠이 주기적으로 한국 내 잠수함기지와 미군의 괌 기지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다가 전쟁발발 시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한반도 인근으로 항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중에서 은닉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한다면 북한이 함부로 타격하지 못할 것이다. 항공기에 의한 핵공유와 달리 핵잠 기반 핵공유는 핵을 장착하고 수중에서 무제한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Ⅳ. 한국형 핵공유 방안의 정치·군사적 효과 및 북핵 협상에의 활용

1. 한국형 핵공유 방안의 정치·군사적 함의

그동안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다소 이중적이었다.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지만, 한미 연합전력의 억제력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었다.[46] 작전계획 5015는 물론이고 과거 작전계획에서 핵 관련 사항이 전혀 없었던

---

44) 조비연. (2022). 『영국식·독일식 핵공유체제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시사점』, 국방정책 전문연구시리즈, 한국국방연구원.

45) 한미 원자력협정(123 Agreement) 때문에 우리가 핵잠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잠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 미국도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전했다. (2022. 11. 10. 자문내용)

46) 최근 들어 이러한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제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핵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2023년 11월에 있었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였는데,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으로 반격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관찰된 핵 사용을 자제하는 사례나 과거 미국이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서도 핵 사용을 자제했던 사례를 볼 때, 핵 사용 문턱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자신이 이러하기 때문에 북한도 핵을 실제로 사용하기 보다 핵 사용 위협의 억제력을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감행해도 미국은 가능하면 재래식 수단을 통해 억제를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47]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노골적으로 핵사용을 언급하기 시작한 이상 재래식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억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3축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도 한미 공동작전계획에 핵 관련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서는 억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국민의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래식 위주의 대응과 다소 추상적인 미국의 핵우산을 혼합한 종래의 체제로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형 핵공유 방안은 북핵 억제(deterrence)와 동맹보장(assurance)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억제와 동맹보장은 분명히 다른 차원에 있으며, 고유한 작동방식이 있지만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형 핵공유 방안은 ① 한국에 제공될 핵무기 사전배정(earmarking), ② 영토 밖 핵무기 보관시설 구축(basing), ③ 위기고조 시 핵무기 공여(provision)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전제사항은 현재 한미 간에 논의되는 수준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 전략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이 과거와 달리 전술핵을 재래식 작전 중에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작전개념 수준[48]에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제부터 변화하는 미국의 핵전략을 활용하여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전술핵 사용 억제를 위해 발전시키는 체제[49]를 일부 변용하여 북핵 대응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단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핵 및 재래식 전력이 통합운용되면서 막강한 핵 및 재래식 억제력이 구축될 것이다. 일례로 공중전력기반 핵공유 방안

47) 필자가 수회 참석한 RAND 연구소 주관 Pol-Mil 게임에서도 미측 참가자들도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필자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는데 재래식 대응이 말이 되느냐?"는 발언에 대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왜 꼭 핵으로 보복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곤 하였다. 최근에 국방대학교가 개최한 제3회 세계안보학대회(2023. 9. 6.~7.)에서도 다수의 한측 전문가들은 미측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해주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 공격에도 미국은 재래식 대응에 무게를 둘 것이라 보았다. 한측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48) 이것이 재래식-핵 통합이며 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라 불리우고 있다.

49)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도 대만사태 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전술핵 사용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전술핵을 작전 중에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작전개념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에서 가능한 것은 스노우-캣(SNOWCAT) 작전인데, 이는 양국 군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가능한 작전이다.[50] 한·미 양국 군이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공중급유를 하면서 장거리 비행 후 핵무기를 투하하고, 또 핵무기 투하 이후 귀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탐색·구조(SAR) 작전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공동 작전상황을 그려보면 양국군 간 협업의 수준은 극도로 향상될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수중전력기반 핵공유 방안에서는 협업의 수준이 더욱 상승한다. 우선 핵잠을 건조하고 운용하는 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우리의 핵잠 확보에 부정적이어서 지레 포기하거나, 미국이 협조해주지 않으니 아예 프랑스에 접근해보자는 논의도 나온다.[51] 그러나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일부 전문가들의 논의를 지켜볼지언정 공식적으로 이런 태세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 당국은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미측과 협의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핵잠이 확보된 후에도 한미 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다. 괌 기지에 핵무기 보관소 건설 문제를 협의해야 하고, 미측의 저위력 핵탄두를 우리의 SLBM에 결합하는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 수중에서 핵무기활성화승인(Permissive Action Link) 코드를 받으려면 극저주파(ELF: Extremely Low Frequency) 수신을 위한 협업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협업의 수준은 가히 미국과 영국 사이에나 가능한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 군 사이에 이러한 수준의 공동실행(common execution)이 가능할 정도가 된다면 이를 위한 정보공유, 사전협의, 공동 작전기획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한국민 누구도 한국형 핵공유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고,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요구는 당연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여기에 3축 체제가 강화되면 북한 핵이 고도화되더라도 군사적 측면에서 억제가 확실히 작동할 것이고, 동맹보장에 대한 기존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

50) 스노우-캣은 'Support of Nuclear Operation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의 줄임말로서 핵 작전 지원을 위한 재래식 공중전술 활용을 의미한다.

51) Richey, Mason, (2021). A Boat with a Vengeance: Could France Sell Nuclear -Powered Submarines to South Korea? CSDS Policy Brief, Nov 16, (https://brussels-school.be/publications/policy-briefs/policy-brief-boat- vengeance-could-france-sell-nuclear-powered-submarines). 리치(Richey) 교수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 공급을 약속하면서 프랑스-호주간 디젤 잠수함 계약이 파기된 점을 파고들라고 조언한다. 즉 국가적 위신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프랑스가 한국과의 핵잠 공급계약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핵잠은 상용 6%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있으므로 연료 확보 문제도 없다고 한다.

2. 억제-협상 이중경로 정책과 한국형 핵공유

프리드만과 마이클스(Freedman and Michaels)에 의하면 그동안 인류가 핵무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볼 때, 핵무기 개발에 전체 비용의 7%, 배치에 55%, 표적할당(targeting)에 14%, 방어에 16%, 해체와 폐기에 8%를 사용했다고 한다.[52] 북한이 핵무기 수량을 계속 증대시키면 이와 관련한 비용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전체의 7%에 불과하므로 어느 시점이 되면 북한은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비용에 민감해질 수 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TRI)에 의하면 북한은 30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한다. 국방연구원 전문가들은 북한이 300발의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53]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30개를 갖든 300개를 만들든 정치적, 군사적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10개 정도의 핵무기면 억제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 그렇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북한이 탄두 수량을 증가시키면 제재는 더 조여 질 것이다. 신냉전 구도가 공고해져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중국이 제동을 걸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둘러대며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략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북한으로서는 적절한 시기에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형 핵공유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강한 재래식 억제력, 그리고 한국형 핵공유로 핵 관련 요소가 획기적으로 증가된 확장억제로 북한에 협상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억제와 협상, 이 두 가지 조합을 한국형 이중경로정책으로 명명할 수 있다. 40여 년 전에 미국이 소련에 대해 이 정책을 썼으며, 그 본질은 군사력 증강과 대화의 투-트랙 접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경로 정책은 1978년 카터 대통령이 결정하고 다음 해에 나토(NATO) 지도자들의 추인을 받아 공식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정치적 과실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나왔다. 카터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레이건 행정부는 고르바초프와 협상했고, 그 결과물이 1987년의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이다.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은 냉전 종식의 기폭제가 되었다.[54] 미국의 경우에도 거의 1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으니 이중경로

52) Freedman, Lawrence and Michaels Jeffrey. (2019).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London: Palgrave Macmillan

53) 박용한, 이상규. (2023).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https://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818&depth=2&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2&lang=kr)

정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이중경로 정책을 결정한 1978년부터 1986년까지 미·소 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생사를 건 핵 군비경쟁이 있었을 뿐이다. 당시 미국이 그 시간을 넋 놓고 보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남북한 간에는 군사적 긴장만이 고조되고 있다. 협상이라는 단어를 꺼내기조차 힘들다. 그러나 상황이 교착되었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 미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 엄혹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형 핵공유 프로젝트 같은 것이다. 그래야 협상력도 올라가고, 국민적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단서가 붙을 뿐이다.

한국형 핵공유 방안이 협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은 과거 전성훈(2018)이나 류재승(2019)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군축' 혹은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자는 제안과 일견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른바 '재래식 對 재래식'의 군사력 균형과 더불어 '핵 對 핵'의 核균형이 병존하는 안보구도가 형성되어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형 핵공유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사실상의 핵공유'를 심화시킴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제안과 다르다. 미군의 전술핵이 재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전술핵이 재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반대가 거의 없을 수 있다.

V. 결론

한·미 핵협의 그룹(NCG) 출범을 계기로 한국, 더 나아가 아시아에 제공되는 확장억제가 나토 모델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나토 모델이 아닌 '사실상의 핵공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핵무기가 우리 땅에 없는데 어떻게 핵이 공유될 수 있느냐'는 반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토식 핵공유 모델에서 전술핵이 배치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나토 모델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핵 관련 정보공유, 핵 사용 협의체계, 공동 핵기획, 핵 작전의 공동실행이 아닌가?

군사과학기술의 진보는 핵을 운용하는 전략자산의 '작전 운용성'을 향상시켰다. 특정 국가에 전술핵이 배치되었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무기체계의 발전을 통해 2010년대 나토에서 '핵무기 전진배치 없는 핵공유' 논의가 활성화됐다. 이제 우리도 핵공유

54) 미국과 소련이 가진 중거리핵미사일의 폐기는 INF 조약 체결 후 3년의 세월이 더 걸려서 완료되었다.

개념의 확장을 논의해야 한다. 한·미 NCG 출범,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지 입항 등 최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사실상의 핵공유로 볼 여지가 있음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미국이 이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선 긋기'에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놀랍게도 핵공유의 4가지 핵심분야 모두가 '워싱턴 선언'에 명시돼 있다. 미국이 '공유'가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아시아적 확장억제 모델에서 핵 관련 요소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미국은 아시아에서 핵공유의 핵심기제를 동맹국과 함께 할 것이다. 중국이 2035년까지 현재보다 4배에 달하는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북한 또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핵공유'를 넘어 '한국형 핵공유'를 실현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제는 핵공유의 4가지 핵심분야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때로는 속도감 있게, 때로는 신중하게 추진하여 억제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

작년에 북한이 기괴한 잠수함을 선보였다. 무척 불안해 보이는 디젤 잠수함으로 핵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공언한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나온다면 워싱턴 선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리온(Lyon)의 표현대로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필요시에만 '날아왔다 돌아가는 방식(fly-in, fly-out arrange -ment)'으로는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없이도 '한국형 핵공유'라는 큰 비전을 갖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핵공유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전술핵 재배치보다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핵잠 도입을 전제로 하는 핵공유 방안은 북한에게 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수중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여 타격할 수 있고, 우리가 개발한 SLBM에 미군의 핵탄두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막강하고도 은밀성이 보장되는 수중기반 응징보복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장착한 SLBM을 완성하기 직전인 상황이므로 정부는 공중전력기반 핵공유뿐만 아니라 수중전력기반 핵공유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핵잠 도입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차원에서도 유의미하다. 북핵 위협 심화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고, 전술핵 재배치 및 독자 핵무장 여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무마시키기에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핵잠이 확보되면 이를 활용한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미측과 협의하고 이를 북핵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통령실. (2023). “워싱턴 선언 전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 4. 27.). (https://www.korea. 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28)

박용한, 이상규. (2023).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https://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 idx=818&depth=2&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2&lang=kr)

박휘락. (2021). “나토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의 현황과 동북아시아 도입에 관한 시론적 분석.” 『국가전략』, 27권 1호, pp. 103-128.

부형욱. (2020). “미중 전략경쟁 시기 미국의 군사적 대응: 한반도 전략상황에의 함의.” 『국방논단』, 제1823호. 한국국방연구원.

_____. (2023). “아시아적 확장억제 모델의 향배.”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설인효·손한별. (2023).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3권 2호, p. 28.

전성훈. (2018).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대안: 남북한 상호 핵군축,” 아산정책연구원 블로그. (https://www.asaninst.org/contents/실패한-비핵화-외교의-대안-남북한-상호-핵군축/)

전성훈. (2023) “한국판 MAD와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 『이슈 브리프』 2023-16, 아산정책연구원.

조비연. (2022), 『영국식·독일식 핵공유체제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폴 브래큰 지음. (2012). 『제2차 핵시대』 (이시은 역).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Brands, Hal and Gaddis, John Lewis. (2021). “The New Cold War America, China, and the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November /December(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10-19/new-cold-war)

Carnegie Corporation. (2022) How i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lilkely to Alter the Post-World War II International Order, May 25. (https://www.carnegie.org/our-work/article/how-is-russias-invasion-of-ukraine-likely-to-alter-the-post -world-war-ii-international-order/)

Freedman, Lawrence and Michaels, Jeffrey. (2019).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London: Palgrave Macmillan.

Hagel C. *et al.* (2020).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https://www.thechicagocouncil.org/research/report/preventing-nuclear-proliferation-and-reassuring-americas-allies)

Hoffman, David E. (2010). *The Dead Hand: the Untold Story of the Cold War Arms Race and Its Dangerous Legacy,* New York: Anchor Books.

IISS. (2023). Military Balance.

Kamp, Karl-Heinz and Remkes, Robertus. (2011). *Options for NATO Nuclear Sharing Arrangements*, Nuclear Threat Initiative.

Kort, Ryan W. *et al.* (2019). "Twenty-First Century Nuclear Deterrence: Operationalizing the 2018 Nuclear Posture Review." *JFQ*, Iss. 94 (Aug.).

Kristensen, Hans. (2020). "Red Storm Rising: INDO-PACOM China Military Projection." FAS. (https://fas.org/blogs/security/2020/09/pacom-china -military-projection/)

Lind, J. and D. Press, D. (2021). "Five Futures for a Troubled Allianc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ep.).

Lyon, Rod. (2019). *Nuclear Strategy in a Changing World*,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p. 22.

Mason Richey. (2021). A Boat with a Vengeance: Could France Sell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South Korea? CSDS Policy Brief, Nov 16,(https://brussels-school.be/publications/policy-briefs/policy-brief-boat-vengeance-could-france-sell-nuclear-powered-submarines)

Mearsheimer, John J. (2021).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November/ December.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10-19/ inevitable-rivalry-cold-war)

Mueller, John. (2010) *Atomic Obses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arang, Vipin. (2014).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osen, Barry R. (2014). *Inadvertent Escalation: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Ithaca: Cornell Universtiy Press.

Rudd, Kevin. (2021). "Short of War." *Foreign Affairs*. (https://www. foreignaffairs.

com/articles/united-states/2021-02-05/kevin-rudd-usa-chinese-confrontation-short-of-war).

Soofer, Robert and Slocombe, Walter B. (2023). Congress should fund the nuclear sea-launched cruise missile, *New Atlanticist*,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ongress-should-fund-the-nuclear-sea-launched-cruise-missile/)

Takahashi, Sugio. (2018). Development of gray-zone deterrence: concept building and 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 *The Pacific Review*, DOI:10.1080/09512748.2018.1513551

Town, Jenny and Ragnone, Iliana. (2022) *US-ROK Strategic Dialogue: Recalibrating Deterrence Against An Evolving DPRK Nuclear Threat,* Stimpson Center. (https://www.stimson.org/2022/us-rok-strategic-dialogue -recalibrating-deterrence-against-an-evolving-dprk-nuclear-threat/)

Yohsihara and Bianchi. (2021). "Seizing on Weakness: Allied Strategy for Competing with China's Globalising Military." CSBA. (https://csba.online.org/uploads/documents/CSBA8239_(Seizing_on_Weakness_Report)_Web.pdf

A Suggestion on Response Initiative against North Korea's Advancement of Nuclear Threat: Korean nuclear sharing option and its use in nuclear negotiations

Boo, Hyeong-Wook

Keywords

North Korean Nuclear Threat,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 Nuclear sharing

This study aims to respond questions that are widely spread in Korean society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Most of people in Korea worry about advanc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Some of them question about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by the U.S. In fact, many experts and people in Korea ask for independent nuclear weapon program or re-introduc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 into South Korean soil in order to deal with assurance issue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tries to criticize these arguments and it is not rational choice for South Korea to question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 can develop deterrence options that can be preceded under umbrella of Washington Declaration, which are the mixture of nurturing of independent defense programs and solidifying extended deterrence. Policy suggestion of this study is that South Korean needs to conceptualize its own nuclear sharing options. To realize this policy, the author suggest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devise negotiation strategy for the U.S. as well as North Korea.

[논문투고일 : 2023. 10. 27.]
[심사의뢰일 : 2023. 11. 20.]
[게재확정일 : 2023. 12. 6.]

국방연구 2023년 12월
제66권 제4호, pp. 141-170

한국군의 지상작전 발전방안 연구: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이강경**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한미 지상작전 교리문헌 분석
Ⅳ.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 적용방안
Ⅴ. 결 론

요 약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지역패권을 추구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복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美 육군은 2018년 이후 도입했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개념을 군사교리로 통합하였고, 이를 현대화전략과 연계하여 실전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2022년 10월, 개정발간된 『FM 3-0 Operations』은 美 육군이 다영역 작전환경에서 위기·경쟁·대규모 전투작전 시 상대적 이점을 창출하고 성과를 확대하여 합동군의 이익을 공고화하는데 필요한 합동작전 및 제병협동 운용개념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美 육군의 개정교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조성하는 '다층적 대치상태(Layered standoff)'와 '경쟁의 연속체(competition continuum)' 개념 하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전투작전 시 승리하기 위한 교리를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는 다차원적 국방환경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혁신 4.0과 Army TIGER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韓 육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와 韓 육군의 지상작전 교리를 고찰하여 韓 육군의 교리개선 소요를 제시하였다. 향후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를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게 수용하고, 지상작전 교리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군의 미래전 대응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핵심어 : 한미동맹, 복합경쟁, 통합억제, 다역역작전, 지상작전

* 이 논문은 육군정책연구과제('22-02)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가 韓 육군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본 연구의 내용은 육군 및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또한 부족한 논문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발전적으로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군사학 박사.

Ⅰ. 문제제기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美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또는 전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우주 영역까지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은 동맹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함의가 크다. 또한 복합경쟁(Complex competition)[1]의 전환기적 안보상황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한미동맹은 향후 지상·해양·공중을 넘어 다영역(Multi-domain)으로 활동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美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의 연대에 기반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한 통합억제 개념은 잠재적인 위협세력을 대상으로 적대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이다. 美 국방부는 통합억제를 "전투영역(Warfighting domain), 전구(Theaters), 분쟁 범위, 미국의 제반 국력 요소, 동맹 및 파트너십 전반에 걸쳐 발휘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2] 현재 美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패권을 추구하며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 협력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파트너십이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이자 통합억제 전략의 무게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정책은 전통적 양자주의 동맹의 틀(Hub and spoke system)을 탈피하여 소다자주의적 동맹시스템(Spoke to spoke) 형태로 변화될 전망이며, Wilkins(2022)는 이러한 동맹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Hub and spoke plus'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3] 미국은 인도, 싱가포르, 대만 등 역내 국가들과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

1) 아산정책연구원. 『ASAN 국제정세 전망 2023: 복합경쟁(Complex Competition)』(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12, pp. 10-13. 이 보고서는 2022년 이후 뚜렷해진 복합경쟁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2000년대 이후 주요국 간의 경쟁은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체제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었고, 군사적인 대립과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로운 경쟁시대에는 성장동력(경제), 과학기술 및 표준, 지향하는 가치·체제 등 다양화된 분야에서 전면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이버 영역 등 가상공간을 둘러싼 물밑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 U.S. Department of Defense(DOD).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ctober 27, 2022), p. 1. https://media.defense.gov/2022/Oct/27/2003103845/-1/-1/1/2022-NATIONAL-DEFENSE- STRATEGY-NPR-MDR.PDF(검색일: 2023. 4. 12).

3) Thomas Wilkins. "A Hub-and-Spokes 'Plus' Model of us Alliances in the Indo-Pacific: Towards a New 'Networked' Design." *Asian Affairs*, Vol. 53, Issue. 3, 2022, pp. 457-480. Wilkins는 인도-태평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를 중심으로 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6월, NATO가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여 전통적 임무와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 것은 美 동맹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소다자주의적 네트워킹 전략은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美 동맹전략 기조는 향후 한미동맹의 성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美 육군은 2018년 이후 도입한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이하 MDOs) 개념을 군사교리로 통합하였고, 이를 현대화전략(Army Modernization Strategy)과 연계하여 실전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2022년 10월, 美 육군이 개정 발간한 『FM 3-0 Operations』은 美 육군이 다영역 작전환경에서 위기·경쟁·대규모 전투작전 시 상대적 이점을 창출하고 성과를 확대하여 합동군의 이익을 공고화하는데 필요한 합동작전 및 제병협동작전 운용개념·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조성하는 '다층적 대치상태(Layered standoff)'와 '경쟁-위기-무력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쟁의 연속체(competition continuum)' 개념 하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전투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교리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제시된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는 최근 국방혁신 4.0과 Army TIGER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韓 육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도전적인 안보상황 속에서 한국군은 국방환경의 도전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한미동맹과 연합작전태세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를 중심으로 한미 지상작전 교리를 고찰하고 韓 육군의 교리개선 소요를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의 분석틀

美 MDO 개정교리 분석	韓 지상작전 교리분석	교리개선 소요 도출
• 선행연구 검토 * 연구동향, 한계점 식별 • 美 육군의 작전수행 개념 발전과정 고찰 • 『FM 3-0 Operations』 개정교리 분석	• 『00-00 지상작전기본 개념서』 분석 • 야전교범1 『지상작전』 교리분석 ※ 한미 지상작전 교리의 연계성 확인	• 美 MDO 개정교리의 시사점 분석 • 韓 육군의 지상작전 교리개선 소요 도출 • 한미동맹 강화와 연계된 교리개선 소요 제시

양 지역의 안보 아키텍처에서 일본·호주를 미국의 핵심동맹으로 평가했고, 한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따라 한반도에 국한되는 특수한 동맹으로 간주했으며, 태국·필리핀은 점차 주변화되고 있는 동맹으로 분류했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교리 관련 연구 동향

역사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안보환경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직면하여 미군의 군사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국방변혁(Defense Transformation, DT)을 추진해 왔으며, 합동성 강화와 연계된 합동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이와 연계하여 美 육군도 합동군의 일원으로서 전쟁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적대국가 및 위협세력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이하 A2/AD) 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다영역작전 교리를 제시했다. 다영역작전 관련 기존의 연구는 크게 3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흐름은 다영역작전의 교리 개념을 분석하여 한국군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논의이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한국군에 시사하는 군사적 함의를 고찰한 연구이다. 세 번째 연구흐름은 다영역작전의 분야별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군이 수용할 수 있는 교리분야 개선소요와 전투수행방법 관련 발전방안을 모색한 논의이다.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영역작전 교리에 대한 한국군의 적용방안을 고찰한 연구를 살펴보면, 허광환(2019)은 美 다영역작전에 대한 비판과 수용방안을 제시한 연구에서 美 다영역작전을 작전술의 관점, 합동작전의 원칙, 합동전투발전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영역작전의 관점에서 한반도가 중국·러시아와의 분쟁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 황태성 등(2020)은 인공지능이 다영역작전의 정보·감시·정찰, 표적획득, 미사일 방어, 사이버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5] 장재규(2021)는 韓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美 육군이 발전시켜 온 공지전투, 다영역작전 교리를 비교·분석하고, 韓 육군에서 다영역작전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 '혁신의 대상·수준, 전략·방법, 한미동맹, 전략목표'의 6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6] 정민섭 등(2021)은 현대전의 특성을 반영하여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대응전략을 분석했으며, 한국군의 지상작전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美 육군이 추진

4) 허광환. "미국의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한 비판과 수용." 『군사연구』 제147집(2019).
5) 황태석·이만석.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과제." 『한국군사학논집』 제76권 제3호(2020).
6) 장재규. "한국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방안 연구: 공지전투와 비교." 『한국군사학논집』 제77권 제3호(2021).

하고 있는 다영역작전 사례를 평가하여 중·장거리 정밀화력, 극초음속 무기체계, 사이버·전자전 등 韓 육군이 적용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7)]

다음으로 미·중간 군사전략의 변화와 연계하여 美 다영역작전의 군사적 함의를 고찰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지효근(2019)은 美 육군의 새로운 전투수행 개념 발전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를 다룬 연구에서 9.11 사태 이후 미래전에 대한 美 육군의 인식변화와 다영역작전에 대한 전투수행 개념 발전과정을 고찰하였고, 미군의 미래전 대비 노력이 한국군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8)] 최영근 등(2019)은 美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 군사전략과 연계하여 중국의 부상·군사위협이 美 합동군의 군사전략에서 최고의 위협 및 도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다영역작전 개념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규명했다.[9)] 또한 박휘락(2020)은 美 국방전략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다영역작전의 교리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한미동맹, 한미 연합작전 등 한국군에 미치는 군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이버전 수행능력에 대한 한국군의 임무수행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10)] 설인효(2021)는 美 합동군의 작전수행개념 변화와 한국군에 시사하는 군사적 함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이버·우주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위협을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집중하여 새로운 작전개념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중심으로 미국의 對중국 작전수행 개념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11)] 한편 강정일(2022)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군사경쟁의 양상을 고찰한 연구에서 중국의 A2/AD 역량과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교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군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여 미·중 군사전략 및 작전수행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12)]

다음으로 美 다영역작전과 연계된 한국군 군사교리 개선소요 및 전투수행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상훈 등(2020)은 한반도 작전전구(Korea Theater Operation, KTO)에서의 美 다영역작전 적용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군이 수용 가능한 적용개념을 도출하였다.[13)] 주정율(2020)은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교리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다영역작전 수행

---

7) 정민섭 등. "美 육군의 다영역 작전에 관한 연구: 한국 육군 적용방안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5권 제3호(2021).

8) 지효근. "미국의 새로운 전투수행 개념 발전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군사연구』 제147집(2019).

9) 최영근·손한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군사전략: 압도적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의 재조정." 『한국국가전략』 제4권 제3호(2019).

10) 박휘락. "미 국방전략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다(多)도메인 작전(MDO)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4호(2020).

11) 설인효. "미국의 작전수행개념 변화와 한국군에의 함의." 『군사논단』 제106권(2021).

12) 강정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군사경쟁 양상 분석." 『군사』 제122호(2022).

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국과의 협력 분야를 모색하였다.[14] 임남규(2021)는 미래전 대비 미군의 지휘통제체계 구축현황과 한국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미군이 발전시키고 있는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과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휘통제체계 개발 현황을 교리·조직·기술 및 절차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15] 이민우 등(2021)은 사이버작전 상황도 구현과 연계된 사이버 전장정보분석 및 다영역 기동에 관한 연구에서 다영역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환경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사이버 전장정보분석(Cyber-Intelligence Preparation for Battlefield, C-IPB) 절차와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는 다영역작전 기동방안을 고찰하였다.[16] 한편 손경호(2022)는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발전과정에 관한 교리적 고찰에서 다영역작전 수행개념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美 육군이 베트남 전쟁과 4차 중동전쟁의 전훈을 토대로 발전시킨 공해전투 교리부터 최근 발전시키고 있는 합동전영역작전(Joint All-Domain Operations, 이하 JADO)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美 합동작전개념 변화과정을 제시하였다.[17] 다음으로 박주훈 등(2022)은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전쟁윤리의 쟁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쟁 수행개념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군사혁신을 고려했을 때 전쟁윤리에 대한 기준의 보완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18] 마지막으로 전재성(2023)은 미국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에 관한 연구에서 美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발 미국의 국익 침해를 가장 중요한 안보이슈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전략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가 다영역작전 교리임을 강조하였다.[19]

---

13) 지상훈·박준희. “다영역작전(MDO)에 대한 고찰과 한반도 작전전구(KTO)에서의 적용 방향.”『군사논단』 제102권(2020).

14) 주정율.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관한 연구: 작전수행과정과 군사적 능력, 동맹과의 협력을 중심으로.”『국방정책연구』 제127권(2020).

15) 임남규. “미래전 대비 미군의 지휘통제체계 구축현황과 우리 군 구축방안.”『정보화 연구』 제18권 제2호(2021).

16) 이민우 등. “사이버작전 상황도 구현을 위한 사이버 전장정보분석과 다영역 기동에 관한 연구.”『한국군사학논집』 제77권 제2호(2021).

17) 손경호. “미군의 다영역작전 발전과 교리적 고찰.”『한일군사문화연구』 제34권(2022).

18) 박주훈·박기철.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전쟁윤리의 쟁점과 발전방향: 정전론(Just War Theory)을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3호(2022).

19) 전재성 등.『국제 안보환경의 도전과 한반도: 미국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3).

2. 기존 연구의 한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대국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러시아가 이른바 '다층적 대치상태'를 조성하며 현상변경을 시도함에 따라 美 육군은 2018년 이후 다영역작전 개념(Concept)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 개정교범을 발간하여 MDOs 개념을 교리(Doctrine)로 통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다양한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며 군사교리와 전투수행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다영역작전 교리는 美 합동군의 교리발전 연장선 상에서 제시된 미래 작전수행개념이다. 美 육군은 다영역작전 개정교리 발간을 통해 향후 합동군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작전을 주도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현대화전략과 연계하여 2028~2035년을 목표로 교리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망이다.

최근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뚜렷해진 신냉전의 국제질서 하에서 현존 군사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자주국방 역량과 한미 연합작전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韓 육군은 미군과의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관련 선행연구들은 향후 동맹의 성격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시점에서 한미 연합작전태세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최적화시켜 나가야 하는 韓 육군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논의들은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념발전, 전투실험 등 교리개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한국군의 특수한 작전환경에 맞는 교리적용 방안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교리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하지만 2022년 10월,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범이 발간됨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교리적 개념들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美 육군이 다영역작전 개념을 교리로 통합한 이후 경쟁의 연속체 개념 하에서 대규모 전투작전 수행과 연계하여 제시한 개정교리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韓 육군이 발전시키고 있는 지상작전 개념 및 교리를 고찰하였고, 한미 연합작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발전방안 등 교리적·작전적 수준에서 韓 육군의 교리개선 소요를 제시하였다. 한반도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美 다영역작전 교리를 여과없이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향후 韓 육군의 특성을 고려한 교리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한미 지상작전 교리문헌 분석

1. 美 육군의『FM 3-0 Operations』개정교리 분석

가. 美 육군의 작전수행개념 발전과정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편하였고, 이른바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Rules-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구축했다. 전후 美 육군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포함한 주요 전역에서 기동·화력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소모전(War of attrition) 교리를 작전수행개념으로 적용하였다.[20] 하지만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의 전훈분석을 통해 전투초기에 대규모 손실을 강요하고 방자의 이점을 살릴 경우 효과적인 방어작전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1976년 美 육군은 작전교범(FM 100-5)[21]을 개정 발간하였고, 기동을 보조수단으로 삼고 화력의 집중을 통해 적의 전투력을 조기에 소모시키는 '적극방어(Active Defense)' 교리를 제시했다.[22] 美 육군은 적극방어 교리를 적용할 경우 정밀유도무기 운용, 지형의 이점 등 방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23]

1976년에 채택된 적극방어 교리는 선형방어(Linear defense) 개념에 기반했기 때문에 당시 소련군의 작전기동군(Operational Maneuver Group) 운용 교리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24] 美 육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래식 전력에서 상대적으로

---

20) Carter Malkasian.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Attrition: The Korean and Vietnam War."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8, No. 3, July 2004, pp. 911-942. https://muse.jhu.edu/article/ 170612/pdf (검색일: 2023.3.7).

21)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FM-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6). https://cgsc.contentdm.oclc.org/digital/collection/p4013coll9/id/972/(검색일: 2023.3.5).

22) 적극방어 교리는 현대 무기체계의 치명적인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동을 화력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즉, 전술적 차원에서 기동은 화력의 집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화기를 적시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적극방어 교리는 소모전 개념에 따라 적의 전투력 손실을 강요하기 위해 전투력비율(Force ratio)과 손실교환비율(Loss exchange ratio)을 중시했다.

23) John J. Mearsheimer. "Precision-guided munitions and Conventional Deterrence." *Survival*, Vol. 21, No. 2, 1979, pp.68-76, https://www.mearsheimer.com/wp-content/uploads/2019/07/A0001.pdf(검색일: 2023.3.11). Mearsheimer는 정밀유도무기와 같이 정밀도와 살상력이 향상된 무기체계의 등장으로 방자의 화력지원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방자가 구축해놓은 정적 전선(Static front)을 돌파하기 위해 공자가 지불해야 할 댓가를 한 층 높였다고 평가했다.

24) 적극방어 교리의 문제점은 제병협동부대로 편성된 제1제대가 돌파구를 형성하고, 전차 및 기계화부대로 구성된 작전기동군이 종심지역까지 깊숙이 진출한 후 적 후방 교란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우세한 소련군의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1982년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를 도입했다.[25] 공지전투는 강력한 화력지원을 기반으로 육군의 기동전 수행, 공군의 공중우세 달성을 통해 적 증원부대를 차단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전투수행개념이다.[26] 1986년 美 육군은 공지전투 교리를 개정하여 전투력 운용의 핵심축으로서 화력-기동의 연계성, 무기체계의 성능과 전투원의 숙련도를 강조했다.[27] 특히 개정교리는 전술적 수준의 종심전투를 전략적 수준의 종심작전으로 확장하고, 육군과 공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당시 美 의회에서 제기된 합동성 강화의 역사적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했고, 2003년 이라크와의 대분란전(對紛亂戰, Counter-Insurgency)에 착수했다. 美 육군은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라크에서는 개전 1달만에 전쟁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개전 초기의 군사작전 성공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안정화작전에 실패하면서 장기전의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이후 천문학적인 전비를 소모했다. 이러한 전략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美 육군은 정규전 위주의 군사교리를 재검토했고, 사이버·심리전 등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제4세대 전쟁의 특징을 반영하여 '전영역작전(Full Spectrum Operations)' 교리를 도입했다. 이후 美 육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훈을 토대로 2011년 통합지상작전(United Land Operations) 교리를 도입했다. 이는 美 육군이 분쟁의 예방·억제, 전쟁 승리, 분쟁해결의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격·방어, 안정화 작전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투수행개념이다.

美 육군은 글로벌 안보환경 및 전쟁양상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동작전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경쟁국가들의 A2/AD 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공지전투 교리의 한계를 보완하여 2010년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美 육군은 미래 전장환경에서 합동전력의 작전적 접근을 최적

---

25)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FM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2). https://cgsc.contentdm.oclc.org/digital/ collection /p4013coll9/id/976/(검색일: 2023.3.6).

26) Jeffrey W. Long. "The Evolution of U.S. Army Doctrine: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and Beyond." Master's Degree Thesis (Fort Leavenworth, Kansa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1), p. 61. https://apps.dtic.mil/sti/citations/ADA241774(검색일: 2023.3.13). 공지전투 교리는 기동, 주도권, 공격기세, 전장의 비선형적 특성, 인적요소(Human factors)를 중시했다. 특히 공지전투 교리는 전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강력한 전술기동으로 적 부대와 전투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종심전투(Deep battle)' 개념을 강조했다. 美 육군은 공지전투 교리와 연계하여 공군의 전장항공차단(Battlefield air interdiction, 이하 BAI), 미사일·포병부대, 육군항공, 공수부대, 기계화부대의 통합운용개념을 발전시켰다.

27)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FM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May 1986). https://cgsc.contentdm.oclc.org/digital/collection/p4013coll9/id/893u(검색일: 2023.3.7).

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합동작전기본개념(Capstone Concept for Joint Operations)과 그 하위 개념인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을 제시했다. 이후 美 합동참모본부는 공해전투 교리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국제공역 접근·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이하 JAM-GC)'을 도입했다.

현재 美 합동군은 JAM-GC와 연계하여 각 군별로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美 공군은 신속전투배치(Agile Combat Employment), 美 해군은 분산해양작전 개념(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美 육군은 다영역작전(MDOs)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다영역작전은 전장에서 합동군의 전투수행능력을 통합하여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고 적에게 전략적·전술적 딜레마를 강요함과 동시에 적의 강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영역 및 다중의 경쟁공간에서 수행하는 작전개념이다.[28] 최근 美 국방부는 2018년 이후 현실화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군사적 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동전영역작전(JADO) 개념을 제시했다.[29] JADO는 美 합동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동시통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수행개념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관련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 美 육군의 『FM 3-0 Operations』 개정교리 고찰

2017년 12월, 美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로 규정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30]을 제시하였고, 2018년 1월에는 이들 국가와의 전략경쟁을 미국의 핵심위협으로 규정한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이하 NDS)[31]를 발표하였다. 이후 美 군사전략은 전세계의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을 상대하는 것에서 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심축이 전환되었다. 2018

---

28)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Pamphlet 525-3-1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 December 6, 2018, p. GL-7. https://adminpubs.tradoc.army.mil/pamphlets/TP525-3-1.pdf(검색일: 2023.3.11).

29) 최우선.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IFANS』 제2020-62호(2020.10.23.). pp. 8~11. 이 보고서는 합동전영역작전(JADO)의 개념을 "지상·공중·해양·우주·사이버 등 작전영역 간 경계를 제거하고 영역을 교차하는 전력들의 합동작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작전개념"으로 정의했다. 또한 美 국방부는 공군을 중심으로 전영역의 센서와 공격용 무기체계를 포괄적으로 연결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장에서 결정능력의 우위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30)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p. 25.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검색일: 2023.3.13).

31) U.S. Department of Defense(DOD).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nuary 19, 2018. pp. 1-11. https://www.hsdl.org/c/2018-national-defense-strategy/ (검색일: 2023.1.21.)

년 美 육군이 도입한 다영역작전 개념은 국방전략서에서 명시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된 작전수행개념이었다.[32] 2022년 10월, 美 육군은 작전 기본교리인 『FM 3-0 Operations』을 개정·발간하여 '경쟁연속체(Competition continuum)'[33] 개념 하에서 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된 작전개념인 다영역작전을 기본교리로 통합했다. 美 육군은 개정교리를 통해 최근 대두된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적인 군사위협에 기초하여 지상·해양·공중·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서 적대세력과의 '대규모 전투작전'[34]에 초점을 두고 다영역작전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美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美 육군이 지향하는 경쟁(Competition)의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쟁은 다영역작전 교리의 전반에 흐르는 개념적 토대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美 육군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경쟁의 역학을 인식하고 있다.[35] 첫째, 내러티브 경쟁(Narrative Competition)은 美 육군이 보유한 강점과 신뢰성, 결단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美 육군은 치명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통해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관점에서 내러티브 경쟁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직접경쟁(Direct Competition)은 무력충돌 이하의 저강도 분쟁으로부터 국가적 차원의 분쟁까지 모든 범위의 경쟁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美 육군은 다영역의 경쟁공간에서 합동군의 우위를 보장하고 적대세력의 위협을 거부함으로써 직접경쟁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간접경쟁(Indirect Competition)은 군사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美 육군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신뢰가능한 옵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영역작전 수행개념은 군사적 충돌이 없는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잠재적인 적대세력을 억제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억제에 실패할 경우 美 합동군과 육군의 대응개념은 다음과 같다.[36] 첫째, 돌파(Penetrate) 단계에서는 적의 A2/AD 체계, 즉 장거리 통합 정밀타격체

---

32)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December 2018), 같은 문서, p. GL-7. 美 육군의 위협인식을 살펴보면, 중국·러시아는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면서 미국과 동맹·파트너국가들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전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경제적 활동과 비정규전·정보전을 포함한 재래식 군사위협을 통합하여 대결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러시아가 동맹관계의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여 글로벌 안보이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인식했다.

33) 합동교리에서 전략적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협력, 무력충돌 이하의 경쟁, 무력분쟁을 의미한다.

34) 대규모 전투작전(Large-scale combat operations)은 작전적·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역으로 투입병력의 범위와 규모가 광범위한 합동전투작전을 의미한다.

35) U.S. Army Chief of Staff Paper #2. "The Army in Military Competition." March 1, 2021. https://api.army.mil/e2/c/downloads/2021/03/29/bf6c30e6/csa-paper-2-the-army-in-military-competition.pdf(검색일: 2023.3.14).

36)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Defense Primer: Army Multi-Domain Operations (MDO)." *CRS IN FOCUS 11409*, updated December 8, 2020, p. 1.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20-12-08_IF11409_8bcaac56470278d6e0e7cbb4c5102326e5b759db.pdf(검색일: 2023.3.15).

계(Long-range precision-strike systems), 연안대함능력(Littoral anti-ship capabilities), 대공방어(Air defenses), 장거리 포병·로켓시스템(Long-range artillery and rocket systems)에 침투하여 작전적·전략적 기동을 실시한다. 둘째, 와해(Dis-integrate) 단계에서는 A2/AD 체계를 교란·약화·파괴하여 美 육군의 작전적·전술적 기동을 가능케 한다. 셋째, 전과확대(Exploit) 단계에서는 전 영역에서 적을 격퇴하여 작전적·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동한다. 넷째, 재경쟁(Re-compete) 단계에서는 다영역의 이익을 통합하고, 유리한 경쟁이 재개되도록 여건을 강화한다.

2022년 10월 개정된 『FM 3-0 Operations』에서 다영역작전 교리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37] 첫째, 새로운 작전수행개념은 '경쟁(Competition), 위기(Crisis), 무력충돌(Armed conflict)'의 전략적 상황과 대규모 전투작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작전환경을 3차원(인간·물리·정보), 5대 영역(지상·해양·공중·우주·사이버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전투력의 개념과 전투수행기능의 관계를 재정의하였고 작전수행의 4가지 기본원칙(Tenets)과 9가지 준수사항(Imperatives)을 구체화했다. 넷째, 지휘관이 작전적 틀(Operational framework)을 구상하기 위해 활용하는 3가지 모델로 ① 할당지역(Assigned areas), ② 중심·근접·후방(Deep·Close·Rear) 작전, ③ 주노력·보조노력(Main effort·Supporting effort)의 조정을 제시하고 작전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이익공고화(Continuous consolidation of gains)[38]를 강조했다. 다섯째, 개정교리는 해양환경에서 육군의 군사작전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섯째, 적과의 접촉개념으로 '영향(Influence)' 요인을 구체화하여 반영했고, 정보 고려사항이 추가된 전술적 고려요소(METT-TC(I))[39]를 제시하였다. 한편 다영역작전 개정교리에서 주목할 사항은 美 육군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치명성(Lethality)'을 제시한 점이다.[40]

---

37) U.S. Army Combined Arms Center. "FM 3-0: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Doctrine." https://rdl.train.army.mil/catalog-ws/view/100.ATSC/F94902EA-F266-49F7-B592-2D6D41A729C4-1675182085899/FMx3-0xMTTxBriefx20230126.pptx(검색일: 2023.3.18.).

38) U.S. Army. *FM 3-0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October 1, 2022, p. Glossary-5. https://armypubs.army.mil/epubs/DR_pubs/DR_a/ARN36290-FM_3-0-000-WEB-2.pdf(검색일: 2023.3.17.). 이익의 공고화(Consolidation of gains)는 일시적인 작전의 성공을 지속시키고, 군사적 통제 역할을 합법적인 당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안보환경 및 작전수행 여건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39) METT-TC(I)는 전술적 고려요소인 임무(Mission), 적(Enemy), 지형 및 기상(Terrain and Weather), 가용부대(Troops and Support Available),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요소(Civil Considerations)에 정보 고려사항(Informational Considerations)이 추가된 개념이다.

40) 美 육군은 치명성(Lethality)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①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동맹·파트너와의 지상력 네트워크 지속 배양, ② 대규모 전투작전의 확고한 대비, ③ 기회창출을 위한 합동방식의 능력운용, ④ 타군에 대한 위협 격퇴를 위해 기동·집중효과·전투력보존, ⑤ 전방의 합동 기반시설과

美 육군은 2035년까지 완전한 수준의 다영역작전 수행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육군미래사령부(Army Futures Command) 예하의 육군미래개념센터(Army Futures and Concepts Center, 이하 FCC)를 중심으로 부대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FCC는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수행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부대구조 개편계획(AimPoint Force Structure Initiative)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1] 美 육군은 여단급 이하 부대구조는 동일하지만 사단·군단, 전구사령부 등 상위 제대에서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다영역작전 환경에서 중국, 러시아 등 군사적 강대국들과의 대규모 전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사령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전역과 인도-태평양 전구의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성과 작전환경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상위제대의 AimPoint 부대구조는 전구마다 상이할 수 있다. 美 육군은 지난 30년 간 국방변혁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부대구조를 여단전투단(Brigade Combat Team)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그 결과 美 육군은 사단·군단 및 전구급 수준에서 전역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자체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AimPoint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정보작전, 사이버 및 우주영역에서 전역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재구축하는데 방점을 두고 수립되었다.[42]

최근 美 육군은 A2/AD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구급부대인 다영역특수임무부대(Multi-Domain Task Forces, 이하 MDTF)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개의 MDTF는 인도-태평양 지역, 1개 MDTF는 유럽, 1개 MDTF는 북극지역에 주둔시켰으며, 다섯 번째 MDTF는 글로벌 차원의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할 예정이다. 첫 번째 MDTF는 포병여단에 정보·정보작전·사이버·전자전·우주(I2CEWS) 작전을 수행하는 소부대로 편성하였고, 2017년 전투실험을 위해 美 육군 태평양사령부에 배치하였다. MDTF의 핵심임무는 적의 A2/AD 능력과 미군에 대한 적의 네트워크 집중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적의 작전환경에 침투하는 것이다.

다영역특수임무부대는 치명적인 장거리 정밀사격, 정보수집 능력 등을 토대로 복잡한 적 부대 시스템을 격퇴하도록 설계되었다.[43] MDTF는 전자·정보전, 우주·사이버전과 같은 장

중요지형지물 방어, ⑥ 기회창출·전과확대·목표달성을 위한 공격작전 수행, ⑦ 지속적인 정치적 성과 달성을 위한 이익 공고화이다."

41)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Army's AimPoint and Army 2030 Force Structure Initiatives." *CRS IN FOCUS 11542*, updated January 31, 2022, pp. 1~2,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542/2 (검색일: 2023.3.15.)

42) 2022년 1월, 美 육군은 AimPoint의 명칭을 'Army 2030'으로 개칭했다. 또한 다영역작전 교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기존의 BCT 중심의 작전수행개념을 탈피하여 사단·군단급 중심으로 부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43) U.S. Army. *FM 3-0 Operations* (2022), p. 4-18.

거리 정밀효과(Long-range precision effects)를 장거리 정밀화력(Long-range precision fires) 체계와 동기화하는 전역수준의 다영역기동부대이다. 따라서 전자·우주전 능력을 장거리 화력지원체계와 조정·통합함으로써 적 부대와 지휘통제 노드, 전자전 활동을 기만·무력화·방해할 수 있다. 경쟁단계에서 MDTF는 위기단계 및 갈등국면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적과 접촉을 유지한다. 또한 위기상황에서는 지휘관에게 유연한 대응 옵션을 제공하여 적의 작전적 의도를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분쟁단계에서 MDTF는 우군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인 A2/AD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4]

2. 韓 육군의 지상작전 교리 분석

가. 『지상작전기본개념서』의 주요 내용[45]

韓 육군의 전투발전체계에서 최상위 문서인 『지상작전기본개념서』는 합동개념, 육군의 전략개념을 구현하는 미래 지상작전의 기준문서이며, 육군비전 2050 및 육군의 전략개념과 연계하여 작전적 개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래전에서 육군이 '어떻게 싸우고, 어떤 능력을 구비하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즉,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지상작전 기본개념, '어떤 수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전투수행 기능별 요구능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분야별 전투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상작전기본개념서』는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것으로 위협의 대상을 재정립함으로써 미래 韓 육군이 직면할 군사적 문제를 구조화하였다. 즉, 북한이라는 본질적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① 회색지대 전술, ② 핵·WMD, ③ 비대칭 통합 재래식 공격, ④ 북한·주변국 동시위협 등 육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화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핵심위협에 대한 수세적 방어개념을 적용 시 대량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단기간, 최소피해, 최단효과'로 승리를 달성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상기반 화력체계의 정확도, 사거리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점을 고려하여, 합동전장권역 내에서 韓 육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확장된 작전지역 개념을 제시하였다.

『00-00 지상작전기본개념서』는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적합한 지상작전 기본개념으로 '다

---

44) U.S. Army Chief of Staff Paper #1. "Army Multi-Domain Transformation: Ready to Win in Competition and Conflict." March 16, 2021, p. 12. https://api.army.mil/e2/c/downloads/2021/03/23/eeac3d01/20210319-csa-paper-1-signed-print-version.pdf(검색일: 2023.3.18.)

45) 『'00~'00 지상작전기본개념서』는 비밀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육군의 지상작전기본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작성한 간부교육자료를 참조하였다.

영역 동시통합작전'[46]을 제시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초지능·초융합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을 기반으로 다영역에서의 가용능력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동시통합하고, 전투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며, 지상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수행개념이다. 韓 육군이 지상작전 교리에 다영역(Multi-domain) 개념을 적용한 것은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영역작전을 발전시키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韓 육군의 '다영역 동시통합작전' 개념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동자산의 효율적 통합, 군사적·비군사적 수단, 물리적·비물리적 수단 등을 동시통합하여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둘째, 韓 육군의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합동작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韓 육군이 작전을 주도함으로써 작전적·전략적 호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00-00 지상작전기본개념서』는 지상작전 운용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방 동시통합작전'은 다영역에서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장을 지배하고, 동시결전을 통해 최단기간, 최소희생, 최대효과로 지상작전을 신속히 종결하여 전쟁승리에 기여"하는 운용개념이다. 또한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韓 육군의 전략적 역할을 포함하여 공세적 대응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거부적 억제전력을 구비하고, 무력분쟁 시 적 중심을 교란 및 접근을 거부·격퇴하여 전쟁승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영역에서 육군의 전략적·작전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체공형 정찰용 무인기, 초정밀 장사정타격체계'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 발전소요를 제시하였다.

나. 야전교범 1 『지상작전』 교리분석[47]

韓 육군의 지상작전 관련 최상위 기본교범인 야전교범1 『지상작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韓 육군의 지상작전 교리는 1963년 발간된 『작전요무령』을 시작으로 『지상작전』, 『지상군 기본교리』, 『지상작전』 순으로 2차례 명칭이 수정되었고,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018년 발간된 『지상작전』 교범은 육군이 수행하는 모든 작전영역을 포괄하며, 사고와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합동교리와 연계하여 전투력 운용의 지침을 제공

---

46) 『지상작전기본개념서』에 제시된 다영역 동시통합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다영역은 지상(지하)·해양·공중·우주의 물리적 영역과 사이버 공간을 망라하는 것이며, 동시통합은 시간·공간·목적면에서 전투수행기능과 가용작전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다양한 작전활동을 조화롭게 운용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육군은 합동성과 제병협동성을 충분히 성숙시키면서 다영역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동시통합'의 개념을 강조했다.

47) 본 연구에서는 韓 육군의 지상작전기본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다음의 문서들을 참조하였다. ① 육군본부. 『야전교범1 지상작전』(계룡: 육군본부, 2021); ② 육군교육사령부. "기본교범 『지상작전』 소개교육." (2019.1.30.); ③ 육군교육사령부. "교리회보 '21-2호."(2021.7월).

한다. 또한 육군의 전투발전체계와 연계하여 교리발전 및 교육훈련을 선도하고 하위교리 발전의 지침을 제공한다. 『지상작전』 교범은 국방개혁 추진, 제대간 교리 연계성 유지, 작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되었다.[48]

『지상작전』 교범은 韓 육군의 임무와 역할, 작전환경과 양상, 해양 및 공중작전과의 차이점 등을 토대로 지상작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49] 첫째, 韓 육군은 위협의 완전한 제거와 전쟁의 종결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적의 모든 위협은 지상을 기반으로 하며, 위협의 완전한 제거는 결정적 기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韓 해·공군은 제한된 지역에서 일시적 위협제거, 완전하고 지속적인 위협 제거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韓 육군은 전쟁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병 전투의지와 능력, 지역주민 성향 등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최소 희생으로 최단시간 내 적 격멸이 가능하도록 작전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익지원을 위해 민군작전 및 안정화작전을 수행하며, 법과 교전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상작전에서는 적과의 직접적인 근접전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중요지역 확보, 적 격멸 등의 과업을 수행할 경우 화력지원을 받아 적과의 직접적인 근접전투를 수반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근접전투로 전장의 불확실성과 마찰요인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지상작전은 동시적·연속적 전투와 교전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다양한 변수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상작전은 적과 아군 주민 등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며 지형과 기상은 승수요인 또는 마찰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특성을 갖는다.

『지상작전』은 '공세적 통합작전'이라는 합동작전 기본개념을 구현하고 합동작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상작전 수행개념으로 '결정적 통합작전'을 제시하고 있다.[50] 韓 육군은 합동작전부대의 일부로서 지상작전을 수행하며, 결정적 통합작전은 육군의 역할과 편성, 지상영역의

48) 『야전교범1 지상작전』의 주요 개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韓 육군의 전투수행능력 향상에 부합된 작전수행개념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부대구조개편에 따른 운용교리 보완과 새롭게 전력화되는 무기·장비 및 편성부대의 운용교리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둘째, 합동-육군 교리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리개선 소요를 반영하였다. 특히 확장된 대화력전과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최소희생으로 최단시간에 전승을 보장한다는 새로운 지상작전 수행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리기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 셋째,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환경 변화와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작전소요 증대, 임무형지휘와 리더십을 교리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49) 육군본부. 『야전교범1 지상작전』(계룡: 육군본부, 2021), pp. 1-33~1-36.

50) 위 교범. pp. 2-1~2-3. 개정교범은 韓 육군의 지상작전 수행개념인 통합작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결정적의 의미는 소모적이지 않게 작전 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다. 또한 통합작전은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기 위해 가용 전투수행기능·작전요소·작전활동을 시간·공간·목적면에서 조직화·동시화하는 것이다."

작전환경 등을 당면한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작전적 수준의 관점에서 적용한 것이다. 『지상작전』은 '결정적 통합작전'이라는 지상작전 수행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부대별 과업을 부여받고 작전을 수행할 때 지휘관과 참모가 적용해야 할 사고의 기본 틀인 '작전의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작전의 구조는 모든 부대가 부여받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절차, 고려사항 및 주요 활동 등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개념이다. 『지상작전』은 군사작전의 범위와 수준을 분쟁의 강도에 따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리를 보완하였다. 작전범주별 지상작전 수행은 ① 전면전 시 작전, ② 국지도발 시 작전, ③ 잠재적 위협대비 작전, ④ 비군사적 위협 대비 작전, ⑤ 국제 군사협력 활동으로 세분화하였다.

2021년 7월에 개정 발간된 『지상작전』 교범에서는 韓 육군의 지상작전 수행개념인 '결정적 통합작전'을 구현하기 위해 대규모 전투작전에서의 공격·방어 시 작전수행개념으로 '공방동시통합작전'을 제시하였고, 공격작전 시 '비선형 동시통합작전' 개념을 제시하였다.[51] 또한 개정교범은 '결정적 통합작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켜 대규모 전투작전에 국한된 개념에서 전·평시 韓 육군의 다양한 지상작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교리를 재정립하였다. 특히 개정교범은 '작전유형의 동시적 수행' 개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52]

---

51) 육군교육사령부. "교리회보 '21-2호." '21.7월, pp. 14~22. 본 교리회보에서는 야전교범1 『지상작전』의 부록에 제시된 '공방동시통합작전'과 '비선형 동시통합작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공방동시통합작전'은 작전초기부터 전투력을 적 방향으로 공세적으로 운용하고, 적 중심을 마비시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조기에 공세 이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어작전 수행개념이다. '공방'의 의미는 "방어작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방어작전·공격작전 등 작전유형을 결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동시통합'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행하는 모든 군사활동을 목적에 맞게 배열하는 것으로, 개별적 군사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각각의 효과가 작전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상승효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공방동시통합작전'의 수행중점으로 "① 적 중심 마비를 위한 노력 집중, ② 적 방향으로 적극적인 전투력 투사, ③ 식별한 적 약점에 공세적 전투력 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비선형동시통합작전'은 "다양한 비선형적 노력을 동시통합하여 적 중심을 마비시킴으로써 임무를 완수하는 공격작전 수행개념"이다. 여기서 '비선형'은 "다수의 결정적 지점에 동시적으로 접근하여 적에게 마찰과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선형동시통합작전'의 수행중점은 "① 적 중심 마비를 위한 노력 집중, ② 화력타격을 통한 핵심표적 타격, ③ 다양한 비선형적 노력의 동시통합"이다.

52) 육군본부. 『야전교범1 지상작전』(계룡: 육군본부, 2021), p. 서문-3. 본 교범에서 제시한 작전유형의 동시적 수행은 "작전목적과 부대임무에 따라 공격작전, 방어작전, 안정화작전, 정부기관 및 민간 지원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등 5가지 작전유형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상대적 비중을 달리하여 수행"하는 개념이다.

Ⅳ.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 적용방안

1. 美 다영역작전 개정교리의 주요 시사점

개정교리를 제시한 『FM 3-0 Operations』은 서문에서 이 교범이 다영역작전에 관한 美 육군의 기본교리(Capstone doctrine)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53] 또한 개정교범은 2018년 제시된 다영역작전 개념(Concept)이 보다 엄격한 분석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교리(Doctrine)에 통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54] 특히 개정교범에서 다루고 있는 다영역작전 교리는 이전의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모두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투실험의 필요성을 배제하였다.

개정교범은 美 육군이 다영역 작전환경에서 위기·경쟁·대규모 전투작전 시 상대적 이점 창출, 성과확대를 통한 합동군의 이익 공고화에 필요한 합동작전, 美 육군의 제병협동 운용개념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는 '다층적 대치상태(Layered standoff)'[55]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경쟁에서 억제하고 승리하기 위해 전영역을 지속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美 육군이 억제에 실패할 경우에는 적의 A2/AD 체계에 침투하여 적을 격퇴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동의 자유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이익을 공고화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가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에 복귀하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美 다영역작전은 물리적·비물리적으로 확장된 작전환경과 다영역에서의 교전을 통해 전투효과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또한 다영역작전은 일종의 '통합작전(Integrated operations)'[56]으로 볼 수 있으며, 대규모 전투작전에 적합한 작전수행 개념이다. 따라서 다영역작전 교리는 효과적인 통합작전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

---

53) U.S. Army. *FM 3-0 Operations* (2022), p. v.

54) U.S. Army Combined Arms Center. "FM 3-0: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Doctrine." p. 3. 美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의 제병연합센터(USACAC)는 개념(Concept)과 교리(Doctrin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개념(Concept)은 작전 또는 기술의 수행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중대한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일반적으로 5~15년 이후의 미래에 군이 다른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교리(Doctrine)는 군이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원칙, 전술, 기술, 절차, 용어 및 상징으로서, 현재 전장에 투입·훈련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적용가능한 기술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55) U.S. Army. *FM 3-0 Operations* (2022), p. 6-42. 다층적 대치상태는 중국과 러시아의 A2/AD 능력이 야기하는 문제이며, 적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에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장종심에 걸쳐 전투력을 사용한다. 따라서 적의 목표는 美 지상군과 나머지 미군의 통합행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층적 대치국면을 조성하여 연합군의 종심 공격 능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56) 통합작전(Integrated operations)은 복잡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연결된 다양한 작전유형이다.

다.[57] "① 대규모의 정밀타격능력 확보, ② 최적화된 작전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력의 배치·유지, ③ 지상·해양·공중·우주·사이버 영역에서 이점 확보 및 이익의 공고화, ④ 적보다 생존성이 더욱 향상된 C4ISR 능력의 설계, ⑤ 강력한 군수지원체제 확립, ⑥ 보다 통합되고 상호운용성이 향상된 연합전력"을 필요로 한다.

美 육군은 2018년 새로운 작전수행개념을 발표한 이후 적대세력과의 경쟁 및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영역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대로의 전환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美 육군은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美 육군은 억지력을 경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한 가운데 적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확고한 전투수행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에 발표된 바 있는 美 육군참모총장 문서는 미래 전장이 '다영역(Multi-domain), 빠른 속도(Fast-paced), 기술주도(Technology-driven)'의 환경이 될 것이며, '적응형 군인, 전투승리, 강한 육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People First, Winning Matters, Army Strong). 이를 위해 美 육군은 2035년까지 대규모 전투작전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美 육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대칭적 접근방식인 A2/AD 전략을 구사하여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다영역 육군(Multi-Domain Army)'을 육성하고 합동전투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해나갈 계획이다.[58] 美 육군은 2018년 6월 새로운 육군비전(The Army Vision)을 발표하여 사이버·우주와 결합된 다영역전쟁이 美 육군의 비전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美 육군은 미래사령부 예하에 교차기능팀(Cross-functional teams)을 조직하였고, Big Six로 불리는 6가지 현대화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있다.[59]

2018년 제시된 '美 육군전략(Army Strategy)'은 2028년까지 합동·연합·다영역·고강도

---

57) Marco J. Lyons and David E. Johnson. "People Who Know, Know MDO: Understanding Army Multi-Domain Operations as a Way to Make It Better." Land Warfare Paper 151 of The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November 2022, p. 6. https://www.ausa.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LWP-151-People-Who-Know-Know-MDO-Understanding-Army- Multi-Domain-Operations-as-a-Way-to-Make-It-Better-28NOV22.pdf(검색일: 2023.3.17).

58) U.S. Army Chief of Staff Paper #1. (March 16, 2021), p. 1. 이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사이버·정보·전자전(EW) 기능을 통합하여 분쟁 이전 단계에서 미국의 전력투사를 억제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과 자율성 및 로봇 공학이 전쟁 양상을 변화시켜 더욱 빠르고 치명적이며 분산된 전장을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적국은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여 대치상태(Stand-off)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美 육군은 2035년까지 다영역작전에 최적화된 준비태세를 갖춰 교차영역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적의 A2/AD 능력을 극복하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59) The U.S. Army. "Army Secretary Esper announces 'Army Vision' for 2028." June 6, 2018. https://www.army.mil/article/206488/?_st(검색일: 2023.3.19).

분쟁에서 적과 싸워 결정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전투수행 능력을 갖춘다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4가지 노력선(Lines of effort)을 제시했다.[60] 첫 번째 노력선은 50만명 이상의 정규군과 고강도 분쟁수행에 초점을 둔 교육훈련, 군수품 현대화, 탄력적인 전력 투사능력의 구축, 동원역량의 강화 등을 포함하여 준비태세(Build Readiness)를 확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노력선은 미래 전장환경에서 압도적인(Overmatch)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장비·교리·조직·교육·리더십·인프라 등을 포함해 전투발전요소의 현대화(Modernization)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6월에 美 육군은 현대화 추진계획을 총괄하는 육군 미래사령부(Army Futures Command)를 창설하였다. 세 번째 노력선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업무관행, 조직구조, 재정관리, 인력운영 등 육군의 업무프로세스를 개혁(Reform)하는 것이다. 네 번째 노력선은 안보협력, 상호운용성 강화, 전문군사교육 등을 통해 동맹·파트너십을 강화(Strengthen Alliances and Partnership)하는 것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개념은 "전술적·작전적·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61] 美 육군은 통합억제 전략을 기반으로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다국적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전투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美 육군은 대규모 전투작전이 보편화될 미래의 전장환경에서 '시간과 거리'의 2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했다.[62] 첫째, 통합 A2/AD 네트워크의 범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성되는 물리적 거리는 적대적인 군사적 행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분쟁이 개시되면 적은 미군이 전개하기 전에 이익을 공고화하고 작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美 육군은 시간·거리의 문제를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과 광범위한 지상전력 네트워크 이점을 창출하기 위해 '경쟁적이고 보정된 전력태세(Competitive, calibrated force posture)'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표 2〉에서 제시한 것처럼 美 육군이 2035년까지 추진하는 전투수행 방식의 혁신 계획은 韓 육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60) U.S. Department of the Army. "Army Strategy." October 2018. https://www.army.mil/e2/downloads/rv7/the_army_strategy_2018.pdf (검색일: 2023.3.19).

61) U.S. Joint Chiefs of Staff. 2018. *JP 3-0 Joint Operations*(Washington D.C.), GL-10. https://irp.fas.org/doddir/dod/jp3_0.pdf(검색일: 2023.6.20).

62) U.S. Army Chief of Staff Paper #1(March 16, 2021), 같은 문서, p. 5.

〈표 2〉 美 육군이 추진하는 전투수행방식의 혁신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전투지속	•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하여 전투력의 동적 배치 • 첫번째 전투에서 적과의 신속한 접근 및 승리 달성
전장확장	•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선점, 딜레마 형성, 전장확장 • 내부부대는 적의 A2/AD 영역내에서 작전 수행, 외부부대는 지형통제, 이익 공고화, 전략적 목표 확보
영역 전반에 걸친 종심공격	• 무인시스템 운용을 통해 작전의 동시성, 속도 달성 •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 정밀화력 포함
결심우위의 확보·유지	• Combined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강화 • 전투체계와 정보·작전·화력 기능의 자율적 상호작용 • 인공지능, 기계학습 활용으로 최적화된 의사결정
압도적 능력 창출	• 비선형 작전을 실행하여 압도적인 능력 창출 • 결심우위의 창출을 위해 속도·범위·첨단기술 융합
대규모 전투에서 우세	• 육군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적 역할 • 분쟁초기 근접전투에서 승리, 합동군의 승리에 기여

출처 : U.S. Army Chief of Staff Paper #1 (March 16, 2021), pp. 6~9.

2. 韓 육군의 지상작전 교리 개선 소요

2021년 7월, 韓 육군은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지상작전 교리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전 양상과 연계된 전투수행방법을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 『지상작전기본개념서』와 『지상작전』 개정교범을 발간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상작전기본개념서』는 미래 작전환경에서 예상되는 적 위협, 군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韓 육군의 전투수행방법과 요구능력, 전투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상작전』 교범은 크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개정·발간되었다.[63] 첫째,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한국적 군사교리의 발전 기반을 제공

63) 육군교육사령부. “교리회보 ‘21-2호.” ’21.7월, pp. 10~13. 본 교리회보에서 제시한 『지상작전』 교범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범의 위상을 교리·작전계획 등 군사력 운용에 대한 최상위 교리문헌으로 조정하고, 한국적 교리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으며, ‘공방·비선형 동시통합작전’을 공격·방어 시 작전수행개념으로 정립하여 교리적 지속성을 갖도록 했다. 둘째, 작전환경을 포괄적·일반적 환경 및 위협에서 전략적·작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의 특징적 작전환경으로 개선했다. 셋째, 군사작전 범주를 재정립하고 전·평시 육군의 군사적 역할을 설정했다. 넷째, 작전술을 작전적 수준에서 적용하는 ‘작전적 수준의 술’에서 ‘모든 전쟁수행의 수준에서 적용하는 작전의 술’로 역할을 재정립했으며, 작전술의 실천적 도구로서 작전구상의 논리 구조를 정립했다. 다섯째, 한반도 작전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의 작전수행개념인 ‘결정적 통합작전’을 재정립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제시했다.

하는 것이다. 둘째, '공방·비선형 동시통합작전' 개념을 교리화하되 지속가능한 교리가 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韓 육군의 구성원들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맥락을 이해하고,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교리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2018년 美 육군이 다영역작전 개념을 발표한 이후, 韓 육군의 교육사령부는 2019년 교리 선행연구를 통해 전투수행기능 중 '지휘통제·정보·화력·기동'분야, 美 다영역작전 개념에서 핵심이슈로 다뤘던 '하이브리드 위협, 사이버·전자전' 분야에 대한 교리·전투발전 소요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美 육군이 개념적 단계에서 교리적 수준으로 통합시킨 다영역작전의 핵심내용은 韓 육군의 『00~00 지상작전기본개념서』와 『지상작전』 개정교범의 논리적 기저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의 주요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韓 육군의 지상작전 교리개선 소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美 육군은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치명성(Lethality) 개념을 제시했다. 치명성은 적을 격멸하는 능력(Capability)과 역량(Capacity)으로 무기체계를 운용하여 적을 격멸하거나 상대적 이점이 있는 위치로 기동하는 부대운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무기체계의 속도, 사거리, 정확성은 치명성을 증가시키는 핵심요인이며, 특히 대규모 전투작전 시에는 살상효과를 증대시켜 적에게 다중의 딜레마를 강요할 수 있다. 따라서 韓 육군의 『지상작전』 교리 중 '결정적 통합작전의 원칙과 기반' 분야에 치명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美 육군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적대세력이 美 합동군에 도전하기 위해 모든 국력의 요소들을 활용할 것이며, 분쟁발생 시 접촉을 거부하고, 경쟁 간에는 우군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장거리 정밀화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장을 확대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전략적 평가를 토대로 美 육군은 적대세력이 조성하는 '다층적 대치상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통합억제' 전략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韓 육군의 『지상작전』 개정교리에서도 직접적·잠재적 위협과 비국가행위자가 일으키는 기타위협, 작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美 개정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이 조성하는 '다층적 대치상태'에 대한 교리적 개념, 韓 육군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도전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美 다영역작전 개정교리에서는 경쟁-위기-무력분쟁 간 성공적인 작전수행과 전과확대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할 개념으로 '이익공고화'를 제시했다. 美 육군은 이익의 공고화가 경쟁의 중요한 요소이며, 군사작전의 전 범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다국적군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대규모 전투작전 수행을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이익공고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韓 육군도 지상작전 교리 전반에 걸쳐 이익공고화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美 육군은 경쟁단계에서의 군사작전 시 대규모 전투작전 준비와 관련하여 동맹 및 파트너국가의 역량강화, 상호운용성 발전 등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기단계 시 연합군에 대한 美 육군의 작전지원으로 동시적인 신속억제방안(Flexible Deterrent Option) 및 신속대응방안(Flexible Response Option)을 제시하고 있다.[64] 무력분쟁 단계의 군사작전에서는 대규모 전투작전의 특징과 적의 A2/AD 요소 격퇴, 합동강제진입작전, 격퇴 메커니즘, 다양한 작전형태(공격·방어작전, 전투보장작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韓 육군의 現『지상작전』교리는 한반도 작전환경의 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지상작전이 모든 군사작전의 범위에 걸쳐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일부로 실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韓 육군의 군사적 역할, 지상작전 수행개념, 대규모 전투작전 시 승리달성 등의 항목에 상호운용성 보장, 위기대응, 대규모 전투작전을 포함하여 작전형태별 韓 육군의 운용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정적 통합작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다영역작전 시험부대를 창설하고 전투실험을 통해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한국형 MDTF 편성·운용개념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美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는 해양환경에서 육군의 작전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해양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고려사항은 전시 합동·연합작전에 참여하여 적의 A2/AD 격퇴, 강제진입·상륙작전 등 합동공격작전을 보장해야 하는 韓 육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군사활동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서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육군의 해양작전 교리발전이 요구된다. 따라서 韓 육군의 군사적 역할 및 작전 분야에 해양환경에서의 작전수행개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2023년은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

64) U.S. Army. *FM 3-0 Operations* (2022), pp. 5-5~5-6. 신속억제방안(FDO)은 주로 위기상황의 고조 및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력분쟁없이 문제상황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사전에 계획된 억제지향의 행동(Deterrence-oriented actions)으로 적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명확한 경고 후 시행된다. 신속대응방안(Flexible Response Option, 이하 FRO)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침략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질서와 글로벌 안보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진영대결이 더욱 구조화하는 신냉전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보딜레마가 상존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양안갈등의 고조, 일본의 재무장 추진 등 복합요인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상징되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 이후 북·중·러 3국의 군사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재래식 무기 거래를 통해 식량·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핵잠수함, 탄도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65] 신냉전적 국제질서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한국군은 이미 현실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러시아 등 주변 열강의 잠재적 군사위협, 급변하는 미래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복합위기의 안보상황에서 한국군은 현존 군사위협,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 등 국방환경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韓 육군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반도 작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rmy TIGER 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한미 양국은 포괄적이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동맹 능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66] 또한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국방연구개발(R&D), 산업분야 협력, 무기체계 획득, 군수·운영유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근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군의 역할이 강화되는 '능력형 동맹'[67]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의 일원으로 유사 시 美 합동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韓 육군도 한미연합작전태세를 확립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교리를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수용함으로써 지상작전 교리를 한 차원 발전시키고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65) Victor Cha and Ellen Kim. "A Renewed Axis: Grow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 Special Report of the Beyond Parallel, September 6, 2023. https://beyondparallel.csis.org/a-renewed-axis-growing-military-cooperation-between-north-korea-and-russia/(검색일: 2023. 9. 8).

66) 국방부 보도자료.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2.11.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609(검색일: 2023.4.10.)

67)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국방연구』제51권 2호(2008), p. 6. 능력형 동맹은 "특정 위협에 대한 참여국의 군사적 대응능력과 의지를 중시하며 국제체제의 형태,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동맹 유형"이다.

최근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전환기적 안보상황 속에서 美 육군이 중국과 러시아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는 국방혁신 4.0과 Army TIGER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韓 육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22년 8월, 美 육군은 다영역작전의 현대화 계획(Regionally Aligned Readiness and Modernization Model, 이하 ReARMM)을 발표했고, 10월에는 『FM 3-0 Operations』 개정 교범을 발간하여 다영역작전 개념을 기본교리로 통합했다. 美 육군은 준비태세(Readiness)의 개념을 "모든 범위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적이 가하는 위협에 관계없이 모든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부대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美 육군의 준비태세 수준은 효과적인 부대배치, 적시적인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원활한 지휘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美 육군은 다영역작전 교리를 실전적 차원에서 운용하기 위해 2022년 9월 23일, 하와이에 세 번째 다영역특수임무부대(MDTF)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주한미군에 우주군(USSFK)을 창설하는 등 다영역작전 교리의 실전운용을 강화하고 있다.[68]

美 육군은 합동군·다국적군의 일부로 전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합훈련·연습이 동맹 및 파트너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유리한 작전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美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는 연합훈련·연습의 교훈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다국적군의 상호운용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美 육군은 다국적군의 상호운용성이 효과적인 작전수행의 관건이며, 전구작전 시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억제효과를 창출하는 필수요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美 육군의 개정교리는 상호운용성이 다국적군 전반에 걸쳐 모든 제대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韓 육군은 다영역작전 개정교리를 발표하고 현대화전략을 중심으로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는 美 육군의 혁신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상호운용성 강화와 연계하여 지상작전 교리를 보완함으로써 한미 연합작전 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

68) Air & Space Forces Magazine. "Space Force to Establish Components for INDOPACOM, CENTCOM, Korea by End of 2022." November 2, 2022. https://www.airandspaceforces.com/space-force-components-indopacom-centcom-korea-end-of-2022/(검색일: 2023.4.1). 2022년 12월 14일,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주한미군에 구성군사령부(Component command)로 창설된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s Korea)은 우주작전 기획, 지휘통제, 역내 미사일 조기경보와 위성통신 지원 등을 수행하며, 외기권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참고문헌

강정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군사경쟁 양상 분석,”『군사』 제122호, 2022.

국방부 보도자료.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2.11.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609(검색일: 2023.4.10.).

박주훈·박기철.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전쟁윤리의 쟁점과 발전방향 : 정전론(Just War Theory)을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제27권 제3호, 2022.

박휘락. “미 국방전략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다(多)도메인 작전(MDO)을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제24권 제4호, 2020.

설인효. “미국의 작전수행개념 변화와 한국군에의 함의,”『군사논단』 제106권, 2021.

손경호. “미군의 다영역작전 발전과 교리적 고찰,”『한일군사문화연구』 제34권, 2022.

육군교육사령부. “교리회보 ‘21-2호,” 2021.7월.

육군교육사령부. “기본교범『지상작전』 소개교육,” 2019.1.30.

육군본부.『야전교범1 지상작전』, 계룡 : 육군본부, 2021.

이민우 등. “사이버작전 상황도 구현을 위한 사이버 전장정보분석과 다영역 기동에 관한 연구,”『한국군사학논집』 제77권 제2호, 2021.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국방연구』 제51권 2호, 2008.

임남규. “미래전 대비 미군의 지휘통제체계 구축현황과 우리 군 구축방안,”『정보화 연구』제18권 제2호, 2021.

장재규. “한국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방안 연구: 공지전투와 비교,”『한국군사학논집』제77권 제3호, 2021.

전재성 등.『국제 안보환경의 도전과 한반도: 미국의 국제안보·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3.

정민섭 등. “美 육군의 다영역 작전에 관한 연구 : 한국 육군 적용방안 중심으로,”『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5권 제3호, 2021.

주정율.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관한 연구: 작전수행과정과 군사적 능력, 동맹과의 협력을 중심으로,”『국방정책연구』 제127권, 2020.

지상훈·박준희. “다영역작전(MDO)에 대한 고찰과 한반도 작전전구(KTO)에서의 적용 방향,”군사논단』 제102권, 2020.

지효근. “미국의 새로운 전투수행 개념 발전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군사연구』제147집, 2019.

최영근·손한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군사전략: 압도적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의 재조정,”『한국국가전략』제4권 제3호, 2019.

최우선.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IFANS』제2020-62호, 2020.10.23.

허광환. “미국의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한 비판과 수용,”『군사연구』제147집, 2019.

황태석·이만석.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과제,”『한국군사학논집』제76권 제3호, 2020.

Air & Space Forces Magazine. “Space Force to Establish Components for INDOPACOM, CENTCOM, Korea by End of 2022,” November 2, 2022.

Cha, Victor and Kim, Ellen. “A Renewed Axis: Grow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 Special Report of the Beyond Parallel, September 6, 2023.

Long, Jeffrey W. “The Evolution of U.S. Army Doctrine: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and Beyond,” Master’s Degree Thesis(Fort Leavenworth, Kansa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1).

Lyons, Marco J. and Johnson, David E. “People Who Know, Know MDO: Understanding Army Multi-Domain Operations as a Way to Make It Better,” Land Warfare Paper 151 of The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November 2022.

Malkasian, Carter.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Attrition: The Korean and Vietnam War,”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8, No. 3, July 2004.

Mearsheimer, John J. “Precision-guided munitions and Conventional Deterrence,” *Survival*, Vol. 21, No. 2, 1979.

The U.S. Army. “Army Secretary Esper announces ‘Army Vision’ for 2028,” June 6, 2018.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U.S. Army Chief of Staff Paper #1. “Army Multi-Domain Transformation: Ready to Win in Competition and Conflict,” March 16, 2021.

U.S. Army Chief of Staff Paper #2. “The Army in Military Competition,” March

1, 2021.

U.S. Army Combined Arms Center. “FM 3-0: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Doctrine.”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FM-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6).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FM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2).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FM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May 1986).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FM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October 1, 2022.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Pamphlet 525-3-1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 December 6, 2018.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Defense Primer: Army Multi-Domain Operations (MDO),” *CRS IN FOCUS 11409*, updated December 8, 2020.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Army’s AimPoint and Army 2030 Force Structure Initiatives,” *CRS IN FOCUS 11542*, updated January 31, 2022.

U.S. Department of the Army. “Army Strategy,” October 2018.

U.S. Department of Defense(DOD).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nuary 19, 2018.

U.S. Department of Defense(DOD).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ctober 27, 2022.

U.S. Joint Chiefs of Staff. *JP 3-0 Joint Operations*(Washington D.C.), 2018.

Wilkins, Thomas. “A Hub-and-Spokes ‘Plus’ Model of us Alliances in the Indo-Pacific: Towards a New ‘Networked’ Design,” *Asian Affairs*, Vol. 53, Issue. 3, 2022.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for Korean military ground operation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U.S. Army's revised doctrine of MDOs

Lee, Kangkyong

Keywords

ROK-U.S. alliance, Complex Competition, Integrated Deterrence, Multi-Domain Operations, Ground Operations

In order to respond to complex competition in which China and Russia are pursuing regional hegemony and threaten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U.S. Army has integrated the concept of Multi-Domain Operations introduced since 2018 into capstone doctrine. In addition, the Multi-Domain Operations doctrine is being developed in a practical level in connection with the modernization strategy. FM 3-0 Operations, revised in October 2022, presents the concept and guidelines for joint operations and combined arms operations necessary for the U.S. Army to create a relative advantage in Multi-Domain Operations and consolidate gains of the joint forces through the exploitation. The U.S. Army's revised doctrine reflects the doctrine of winning Large-scale Combat Operations that are expected to unfold under the concept of a 'layered standoff' and competition continuum created by China and Russia. The U.S. Army's Multi-Domain Operations revision doctrine proposed to respond to challenging security threats is judged to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ROK Army, which is pursuing Defense Innovation 4.0 and Army TIGER system conversion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multidimensional defense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U.S. Army's Multi-Domain Operations revision doctrine and the ROK Army's Ground Operation doctrine were analyzed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octrine of the ROK Army were presented. In the future, accepting the U.S. Army's revised doctrine of multi-domain operations to suit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ing ground operations doctrine will be very important tasks in the Korean military's response to future warfare.

[논문투고일 : 2023. 9. 8.]
[심사의뢰일 : 2023. 11. 16.]
[게재확정일 : 2023. 12. 6.]

국방연구 2023년 12월
제66권 제4호, pp. 171-194

한국군 장병의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김현우**

Ⅰ. 서론
Ⅱ.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행동 의도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요 약

우리 사회는 유독 군인에 대하여 인권의 기준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그 개선을 게을리하여 다른 사회영역에서의 진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인의 인권의식에 관한 엄밀한 실증연구는 아직 드물고,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어떤 행동 의도를 갖는가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군인이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구제 행동 의도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2021년 조사한 자료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 발견은 장병의 특성뿐 아니라 준거집단의 특성이 인권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고충처리제도, 권리구제기관/제도, 사법제도 등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그 결정요인 역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권리구제 행동 의도가 감퇴하는 점, 대응전략 연구의 시사점과는 달리 인권침해의 개인적인 경험이 곧바로 권리구제 행동 의도로 이어지지 않는 점 등을 함께 발견하였다.

핵심어 : 인권침해, 권리구제 행동 의도, 군 장병, 준거집단, 군과 사회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22)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Ⅰ. 서론

인권은 천부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의 일체로, 국가나 기업과 같이 조직된 권력(organized power)과 소통하거나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수단이다(Sjoberg, Gill and Williams 2001). 인권의 존중과 보호는 정치사회 구성원리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이 설령 명목상 민주주의를 표방하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갖추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군인은 비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지만, 이들 역시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정인섭, 2007). 그러나 우리 사회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2005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2014년),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2016년),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2021년),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2021년) 등 군인에 대하여 유독 인권의 기준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그 개선을 게을리하여 다른 사회영역의 기대와 진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김형남 2022).

왜 군인의 인권이 소중한가? 이매뉴얼 칸트(Immanuel Kant)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서 대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정언명령이자 윤리학의 토대임을 주장하였다. 그 하위범주인 군대 윤리 또한 이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설령 도구적 가치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부정당했을 때 군인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자살 생각 등 부정적 감정 상태에 놓이기 쉬울 뿐 아니라(김형래, 2016), 임무 수행 중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또한 높아진다는 점, 더 나아가 인권침해를 자행한 상관과 동료를 더는 전우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점(김형남, 2022) 등에서 군인의 인권이 갖는 중요성은 명백하다.

군 내부의 인권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문헌은 비교적 드물지 않다. 안현의 외(2007)의 발표는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실증연구 중 하나로 보인다. 이들은 당시 전체 장병의 51.3%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또한 인권침해에 따라 입대 전 사회부적응과 군 복무 부적응 사이의 연관성이 강화되는 조절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018년 부사관 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의식(2019)은 차별대우, 부당한 영내 대기, 휴가 및 외박 통제, 독신자 숙소검사,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개인금융 현황 자료제출, 개인 차량 구입 및 운행 통제 등 부사관들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며, 대응 양식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재민(2022)은 육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성적침해에 대한 인식이 인권교육

만족도와 인지된 전문성에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경필·이수진(2020)은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관점에서 군 사법제도(군사법원, 관할관, 심판관 등)의 지속적 재생산을 조직화된 군-국방부 연합과 조직되지 못한 개혁 연합 사이의 정치투쟁 결과물로 설명하여 독특한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물론 인권침해의 인식에 관한 기술적(descriptive)인 실증연구는 인권침해의 실제 사례를 발견해내거나 군 장병 가운데 인권침해의 취약집단이 누구인가를 식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인권침해의 취약지대에 놓이거나 혹은 이미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권리구제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나마 손진희(2016)는 사회심리학에서 태도(attitude)의 하위개념에 기반하여 인권에 관한 태도가 인권 판단력,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중 인권 행동의사에 관한 실증연구를 간단히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군인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고학력일 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추었을 때, 군에서의 계급이 낮을 때, 그리고 입대 전후로 인권교육을 받았을 때 인권 행동의사가 커진다. 이 연구는 첫 실증연구로서 흥미로운 출발점이지만, 사회경제적·조직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 구제 행동에 관한 이론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모든 군 장병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장병이 권리구제 행동을 결심하기까지 본인의 믿음과 지식뿐 아니라, 타인의 인식과 사회적 자원의 가용성 등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touffer, 1949). 나아가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절차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가 역시 군 장병 자신의 특성과 그가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보다 충실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된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군 장병이 인권침해를 경험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 행동에 나설지 의도를 실증 분석한다. 사회심리학(대응전략 연구)과 군과 사회(준거집단 연구) 분야의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군 장병 개개인을 넘어선 준거집단 부대의 영향력에 관한 가설을 도출하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와 대응 절차가 달라짐을 확인한다. 마무리에서는 실증연구의 발견이 가지는 이론적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한다.

Ⅱ.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행동 의도

1. 대응전략 연구

사회심리학자들은 직무상 소진(burnout)의 일부인 정서적 고갈(Wallace and Lemaire, 2013)이나 성희롱 피해(Gruber and Bjorn, 1986; 정진성·노성훈, 2018) 등 부정적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이 고안하는 다양한 대응전략(coping strategies)에 관해 연구를 축적하였다. Knapp과 동료들의 연구(1997)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정적 상황에 놓였을 때 대응의 초점과 양식에 따라,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부인하거나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는 도피 등 소극적 대응에서 직면(confrontation) 또는 사회적 지원 요청 등 적극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응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의 심리적 자원뿐 아니라 소속된 조직의 구조와 성격, 사회문화적 권력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대응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하에서는 대응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 행동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인권침해의 경험. 여러 대응전략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커질수록 대응전략 역시 적극적으로 변화한다(Gruber and Bjorn, 1986; 홍세은, 2022). 가령 정진성·노성훈(2018)은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표본을 조사하면서 성희롱의 명백성과 반복성이 뚜렷해질수록 부인/회피와 같은 소극적 대응보다 사내 기구에의 신고 등 적극적 대응의 선택 가능성이 커짐을 확인하였다. 군의 맥락에서도 실제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장병이라면 그렇지 않았던 장병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리구제 행동 의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절차 지식수준. 다른 한편, 홍세은(2022)은 인권침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표본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1)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2) 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학교기구의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 (3) 인권 관련 학생 자치 규범 또는 윤리규정, (4) 인권침해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자치회 또는 동아리 등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무대응보다는 직면 및 신고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여러 가지의 권리구제 수단과 절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관한 지식이 높아질수록 권리구제 행동 의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인권교육 이수. 군인을 위한 인권교육 역시 인권침해의 정의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지식을 전달하고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손진희, 2016). 우리나라는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제38조에서 군인의 인권교육

을 규정하고 있으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전문강사조차 부족한 현실(이재민, 2022)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장병과 그렇지 않은 장병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식 효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인권교육의 이수 경험 역시 높은 수준의 권리구제 행동 의도로 이어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권위에의 복종 태도. 몇몇 대응전략 연구 문헌은 낮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Gruber and Bjorn, 1986; 손진희, 2016). 한편 홍세은(2022)은 권위주의적 태도를 수용할수록 지인과 의논하여 인권침해 문제를 극복하기보다 혼자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군인 역시 인권침해 구제 행동을 위하여 군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병영 안에서는 인명을 살상하는 총기를 수시로 쓴다는 점 등의 특수성을 이유로 종종 민주주의적 가치와 질서가 그 작동을 멈추고 만다(김용주, 2012). 지휘권은 장병에 대한 인권의 제약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휘관은 부하의 잘못을 폭넓게 책임지므로 이들의 지휘권은 종종 장병 인권을 제약하고 침해를 정당화하는 권한이 된다. 만일 장병 이와 같은 논리를 스스로 내면화하면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권위에의 복종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병 인권의 개선이 당연한 민주주의적 가치이자 제복 입은 시민(citizens in uniform)의 권리가 아닌, 지휘권을 무력화하여 군 기강확립에 부정적일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인권침해에 대하여 권리구제 행동 의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준거집단 연구

앞서 설명하였듯 대응전략 연구에서는 대응의 적극성 선택에 피해의 비례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정서적 고갈이나 직무 스트레스, 성희롱 피해 등의 상황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이므로 군의 맥락에서는 다소 다를 수 있다. 군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여러 사람이 노동과 사생활의 경계 없이 정주한 채로 일하는 장소인 동시에 그 군체가 관료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Goffman(1961)이 말한 전체기관(total institution)의 한 전형이다(Davies, 1989).

Stouffer(1949; 특히 4장 3절과 6장 2절) 역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장병이 처한 상황 및 조건과 군에 대한 만족도의 연관성이 상식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1) 교육수준이 높은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장병들보다 징집에 대해 오히려 수용적이라는 점, (2) 북부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흑인 장병들보다 남부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흑인

장병들의 사기가 오히려 낮다는 점, (3) 진급율이 낮은 헌병대 장병들이 진급율이 높은 육군 항공대 장병들보다 오히려 진급체계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Merton(1968; 특히 10장)에 따르면 이러한 상식에 반하는 발견은 준거집단(reference group) 개념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그 요지는 군 장병의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은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 자신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즉 준거집단과의 비교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 역시 피해의 객관적 크기에 단순히 비례한다기보다, 장병들의 서로 다른 준거집단과의 비교 속에서 주관적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준거집단에서도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병들은 아예 이 문제를 인권침해라는 특수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령 그렇더라도 냉소주의에 빠져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해 나서지 않을 것이다(홍성주·황의갑·김주희, 2019). 하지만 관찰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에 비해 유독 자신의 부대만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병들은 이를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구제 행동 의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장병들의 구제 행동 의도는 (자기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와 별개로)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따라 형성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연구가설

기존 문헌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군 장병은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사를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가? 먼저 대응전략 연구는 군 장병이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요인이 존재하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군의 맥락에서 (1)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에 대한 지식수준, (2) 인권교육을 이수한 경험, (3) 인권개선이 오히려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등 권위에의 복종 태도, (4) 직접 겪은 인권침해 경험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준거집단과 상대적 박탈감 연구는 군 장병의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특히 준거집단 부대와의 비교 과정에 주목하도록 시사하고 있다. 이 예측에 따른다면 사회적 행위자로서 군 장병은 단순히 본인이 겪은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구제 행동에 나서지만은 않을 것이다.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러한 믿음이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의 경험이 인권침해라는 인식, 그에 대한 구제수단의 발견과 학습, 구제가 가능하다는 기대의 형성 등 제반 과정은 결국 사회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병 개개인의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는 본인이 소속된 부대와 여러모로 비슷한 속성을 지닌 타 부대와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므로 단순히 장병 개개인의 속성뿐 아니라, 준거집단 부대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1) 준거집단 부대에서 구제절차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질수록, (2) 준거집단 부대에서 인권교육 이수 경험이 많아질수록, (3) 준거집단 부대에서 인권개선이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적을수록, (4) 준거집단 부대에서 인권침해의 경험이 적을수록, 군 장병의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장병 본인이 가진 지식수준, 인권교육 이수 경험, 인권개선이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본인의 인권침해 경험을 통제했을 때도 여전히 이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다른 한편, 군 장병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여러 구제수단을 선택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군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구제 절차는 대체로 (1) 고충처리제도, (2) 권리구제기관/제도, 그리고 (3) 사법제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고충처리제도가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의견 건의), 제40조(고충 처리), 제41조(전문상담관), 제42조(군인권보호관) 등에 근거한 "군 내부" 구제제도라면, 권리구제기관/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간인권센터(군인권센터)에 이르는 "군 외부" 구제제도라고 볼 수 있다(이자연, 2018). 마지막으로 사법제도는 군법무관과 군 헌병을 통한 구제절차로 "군 내외부" 사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어진 이론적 자원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 수단(고충처리제도, 권리구제기관/제도, 사법제도)을 선택하는지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선 탐색적으로 세 가지 구제수단별로 상이한 행동 의도 결정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2019년 7월과 8월 사이에 서울/경기, 대전, 충북/충남, 부산/경남, 호남, 해안경계/GOP(전방), 강원도 등 육군 77여 개 부대,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된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책임자들은 사단급 부대와 대대급 부대를 방문 조사하였고, 각 사단급 부대에서 가능한 병과 별로 3개 이상의 대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1〉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요약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장병 표본에서 (2019년 당시 군별로 육군 약 46만4천 명, 해군 약 4만1천 명, 공군 약 6만5천 명, 해병대 약 2만9천 명이므로) 육군은 다소 많고 공군은 다소 적게 조사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장병은 모두 1,006명으로 이병 260명, 일병 313명, 상병 320명, 병장 111명이었다. 복무기간은 6개월 미만 360명, 6개월에서 9개월 137명, 10개월에서 14개월 208명, 15개월 이상 301명이었고, 근무지역별로 보면 전방지역 112명, 도서벽지 392명, 중소도시 296명, 대도시 20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1〉 연구자료의 요약통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율	표준편차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율	표준편차
계급			*소속 군*		
이병	0.26	0.44	육군	0.72	0.45
일병	0.31	0.46	해군	0.06	0.24
상병	0.31	0.46	공군	0.18	0.39
병장	0.11	0.32	해병대	0.04	0.19
입대 연령			*소속 부대*		
19 세 이하	0.30	0.46	대대급 이하 부대(직할대 포함)	0.43	0.50
20 세	0.40	0.49	연대/여단/진대급 부대	0.15	0.36
21 세 이상	0.16	0.36	사단/함대/비행단급 이상 사령부	0.19	0.39
학력			교육기관	0.17	0.38
고등학교 졸업	0.14	0.35	국직/합참직할/기타	0.04	0.19
대학교 재학(중퇴 포함)	0.78	0.41	*근무부대 지역*		
대학교 졸업(전문대졸 포함)	0.06	0.24	GOP	0.11	0.31
대학원 재학 이상	0.01	0.11	도서 및 해안경계부대 지역	0.14	0.35
종교			군면단위 지역	0.23	0.42
불교	0.08	0.27	중소도시	0.31	0.46
개신교(기독교)	0.18	0.39	대소시(광역시 이상)	0.21	0.41
천주교	0.06	0.24			
종교없음/기타	0.68	0.47			

참고: 결측치는 사전에 제거함.

2. 분석모형

준거집단 부대의 식별.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준거집단, 즉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타 부대를 식별해야 한다. 물론 준거집단은 장병들이 인권침해 및 구제 행동에 관해 보고 듣고 판단하기에 적절한 비교 대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가령 육군 국직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은 해병대 여단급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준거집단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작을 것이다. 아쉽게도 준거집단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도구는 아직 없으므로, 일차적으로 자료에 근거하여 가장 적절한 준거집단을 찾고자 여러 준거

집단 기준에 따라 모형적합도(goodness of fit)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선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소속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소속 부대(대대급 이하 부대, 연대/여단/전대급 부대, 사단/함대/비행단급 이상 사령부, 교육기관, 국직/합참직할/기타)×근무 부대지역(GOP, 도서 및 해안경계부대 지역, 군면 단위 지역, 중소도시,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따라 준거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다른 조합에 비해 모형적합도가 가장 우수하였으므로 이를 준거집단의 구분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준거집단의 수는 100개(= $4\times5\times5$)이지만 실제로는 중첩되지 않는 대상(가령 GOP에서 근무하는 공군은 없음)을 제외하여, 총 42개의 준거집단을 구성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장병들이 준거집단 부대와의 비교를 통해 구제 행동 의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장병 개인이 가진 특성(레벨-1)뿐만 아니라 준거집단의 특성(레벨-2)을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 안에서 함께 살펴본다.

$$Y_{ij} = \beta_{0j} + \sum_k \beta_k (X_{ijk} - \overline{X_{.jk}}) + \sum_l \beta_l X_{ijl} + e_{ij}$$

$$\beta_{0j} = \gamma_{00} + \sum_k \gamma_{0k} \overline{X_{.jk}} + \mu_{0j}$$

이때 Y_{ij}는 j번째 부대에 속한 i번째 장병의 종속변수, β_{0j}는 레벨-2로 모수화되는 j번째 부대의 상수, β_k는 k번째 레벨-1 관심변수의 회귀계수, $(X_{ijk} - \overline{X_{.jk}})$는 집단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된 k번째 레벨-1 관심변수, β_l는 l번째 레벨-1 통제변수의 회귀계수, X_{ijl}는 l번째 레벨-1 통제변수, e_{ij}는 j번째 부대에 속한 i번째 장병의 정규분포하는 레벨-1 오차항이다. 또한 γ_{00}는 레벨-2 상수, γ_{0k}는 k번째 레벨-2 관심변수의 회귀계수, $\overline{X_{.jk}}$는 k번째 레벨-2 관심변수(즉 k번째 레벨-1 관심변수의 부대별 평균값), μ_{0j}는 j번째 부대의 정규분포하는 레벨-2 오차항이다. 또한 레벨-1 회귀계수는 집단평균 중심화된 관심변수의 영향력을 설명하므로 그가 속한 준거집단 부대의 특성 평균과는 무관한 개인적 특성만을 반영한다(Enders and Tofighi, 2007).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권리구제 수단별 행동 의도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이므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활용할 수 있다(Fullerton 2009).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리커트 척도와 같이 서열척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실증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온 비선형회귀모형 가운데 하나로, 다음과 같은 확률모형을 설정하고 우도(likelihood)를 극대화하는 회귀계수와 절단점(cut points) $\gamma_{00\theta}$을 수치

해석으로 찾아낸다.

$$\log\left(\frac{P(Y_i \le \theta)}{1-P(Y_i \le \theta)}\right) = \gamma_{00\theta} - \left(\sum_k \gamma_{0k}\overline{X_{.jk}} + \sum_k \beta_k (X_{ijk} - \overline{X_{.jk}}) + \sum_l \beta_l X_{ijl} + \mu_{0j} + e_{ij}\right)$$

이러한 접근에서 회귀계수는 다층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multilevel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과 같이 베이지안 축소추정량(Bayesian shrinkage estimator)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예비분석 단계에서 $\mu_{0j} = 0$ 여부를 귀무가설로 하는 우도비 검정(likelihood-ratio test)을 수행한 결과, 이를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따라 계산된 추정량을 보고하였다.

강건성 검정. 한편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모든 응답 범주에 걸쳐 일관된 회귀계수 추정값을 계산하기 위해 이른바 평행 오즈(parallel odds)를 가정하고 있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generalize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은 평행 오즈의 가정을 완화하기 위해 각 응답 범주별로 별개의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이 회귀계수들의 동일성을 합동 유의성 검정(joint significance test)하는 기법을 포함한다. 이 모형은 분석의 복잡성을 다소 증대시키지만, 독립변수들이 모든 응답 범주에 걸쳐 일관된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Williams, 2016). 이에 따라 강건성 검정(robustness check)을 위해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함께 보고하였다.

3. 변수

권리구제 행동 의도. 만일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세 유형의 구제 절차(고충처리제도, 권리구제기관/제도, 그리고 사법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각각 5점 리커트 척도(1=절대 활용하지 않겠다; ...; 3=잘 모르겠다; ... 5=적극 활용하겠다)로 응답한 문항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구제절차에 관한 지식수준. 고충처리제도와 권리구제기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가 존재함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고충처리제도는 소원 수리(마음의 편지),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성고충 전문상담관제도, 군인원보호관(인권상담관제도),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포함하고, (2) 권리구제기관/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인권센터(군인권센터), 국방옴부즈만을 포함한다. 이들 절차에 대한 인지 여부를 예(1)와 아니오(0)로 묻고, 예(1)라고 응답한 각 절차의 수를 모두 더하여 합성지수를 구성하였다.

인권교육 이수 경험 있음. 군 복무 중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한 번이라도 이수했는가를 알기 위해, 받은 적이 있으면 1, 아니면 0이라고 응답을 유도하였고 이를 가변수로 사용하였다.

"인권개선은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 인권개선과 군 기강확립 사이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인식하는가를 설문하였다. 군 기강확립이 매우 좋아질 것이다(1)에서부터 매우 나빠질 것이다(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음.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음(1)과 없음(0)으로 이루어진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들 네 개의 관심변수는 장병 개인의 효과(within effects)와 속한 준거집단의 효과(between effects)로 나뉘어 모형 안에 투입되었다. 전자의 관심변수들은 각각 소속된 준거집단 부대의 평균에서 중심화된 값인 $(X_{ijk} - \overline{X_{.jk}})$로 변환되었으므로, 그 회귀계수들은 오로지 장병 개인의 효과만을 반영한다. 한편 후자의 관심변수들은 준거집단 별 평균값 $\overline{X_{.jk}}$로 계산되었으므로, 이 회귀계수들은 준거집단 부대의 평균효과를 반영한다. 이때 집단평균 중심화 덕택에 개인 수준 변수와 준거집단 수준 변수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Enders and Tofighi, 2007).

Ⅳ. 연구 결과

1. 유형별 권리구제 행동 이용 의도

〈표 2〉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추정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모형1에서 모형3까지 각각 다른 종속변수(고충처리제도 이용 의도, 권리구제기관/제도 이용 의도, 사법제도 이용 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독립변수는 동일하게 모형 안에 투입되었다.

장병 본인의 특성은 자신의 권리구제 행동에 관하여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구제절차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고충처리제도, 권리구제기관/제도,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이용 의도가 일관된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교육 이수 여부는 역시 모든 유형의 권리구제 행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연관성을 드러냈다. 예측대로 인권개선의 결과 군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믿음 역시 모든 종류의 권리구제 행동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예측과는 달리, 장병 본인이 인권침해를 겪었는가 여부는 비록 회귀계수가

음(-)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 추정치

	모형 1 (고충처리제도)		모형 2 (권리구제기관/제도)		모형 3 (사법제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병사 특성(within effects)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지식 수준	0.114***	(0.028)	0.167***	(0.028)	0.118***	(0.028)
인권교육 이수 경험 있음	0.443**	(0.152)	0.300*	(0.144)	0.378**	(0.143)
"인권개선은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	-0.127*	(0.056)	-0.113*	(0.054)	-0.097†	(0.054)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음	-0.249	(0.182)	-0.040	(0.185)	-0.148	(0.183)
준거집단 특성(between effects)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지식 수준	-0.134	(0.147)	-0.153	(0.146)	-0.214	(0.165)
인권교육 이수 경험 있음	1.626†	(0.865)	1.958*	(0.899)	2.937**	(0.943)
"인권개선은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	-0.825**	(0.292)	-0.755**	(0.292)	-0.500	(0.308)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음	-1.887*	(0.811)	-0.031	(0.931)	0.379	(0.834)
통제변수						
계급: 이병			(기준집단)			
계급: 일병	-0.495**	(0.174)	-0.445**	(0.165)	-0.432**	(0.165)
계급: 상병	-0.419*	(0.170)	-0.262	(0.173)	-0.361*	(0.167)
계급: 병장	-0.629**	(0.243)	-0.498*	(0.245)	-0.787***	(0.230)
학력: 고졸 이하			(기준집단)			
학력: 대재 또는 중퇴	0.164	(0.207)	0.155	(0.168)	-0.193	(0.176)
학력: 대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	-0.250	(0.302)	0.054	(0.259)	-0.590*	(0.286)
상수항						
절단점 #1	-5.546***	(1.089)	-5.091***	(1.122)	-4.166***	(1.126)
절단점 #2	-4.360***	(1.064)	-3.945***	(1.106)	-3.158**	(1.108)
절단점 #3	-3.246**	(1.056)	-2.379*	(1.101)	-1.735	(1.103)
절단점 #4	-1.065	(1.056)	-0.306	(1.100)	0.362	(1.102)
정보통계						
사례 수	921		931		931	
클러스터 수	42		42		42	
로그우도	-1159.01		-1154.41		-1148.96	
Pseudo-R^2	0.032		0.030		0.028	

참고: 양측검정. † p<0.1, * p<0.05, ** p<0.01, *** p<0.001.

준거집단 부대의 특성 역시 구제 행동 의도의 설명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 부대에 구제절차 지식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을 때 모든 회귀계수는 일관하여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준거집단 부대에서 인권교육을 이수한 다른 장병들이 많을수록 본인 역시 고충처리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이용 의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개선이 군 기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는 장병 개인 효과와 마찬가지로 음(-)의 회귀계수가 일관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준거집단 부대에서 인권침해가 만연해 있을 때, 장병 본인 역시 고충처리제도 이용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유형의 권리구제 행동 의도에서도 모두 음(-)의 회귀계수를 얻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가설의 예측대로 이는 준거집단 부대에서 인권침해의 평균적인 수준이 높다면, 장병 역시 본인의 인권침해를 구제받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병에 비해 다른 상위 계급은 대체로 권리구제 행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병과 병장의 회귀계수는 일관하여 음(-)의 값을 확인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대 시 연령의 경우 21세 이상은 20세인 경우에 비해 고충처리제도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인 이용 의도를 보이고 있다. 대졸 또는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대재 또는 중퇴보다 모든 권리구제 행동 유형에 일관하여 부정적인 의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권리구제기관/제도에 한하여 긍정적인 이용 의도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입대 전 거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강건성 검정

아래 〈표 3〉부터 〈표 5〉에서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표 3〉의 종속변수는 모두 고충처리제도 활용 의도이며, 모형 4 (1 대 2345)는 “절대 활용하지 않겠다(1)” 대신 “별로 활용하지 않겠다(2)”, “잘 모르겠다(3)”,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4)”, “적극 활용하겠다(5)”의 응답 범주를 선택하는 로그 오즈를 모형화하였을 때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보여준다. 모형 5 (12 대 345)는 “절대 활용하지 않겠다(1)” 또는 “별로 활용하지 않겠다(2)” 대신 “잘 모르겠다(3)”,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4)”, “적극 활용하겠다(5)”의 응답 범주를 선택하는 경우의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보여주며, 모형 6 (123 대 45)과 모형 7 (1234 대 5) 역시 응답 범주의 수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비례오즈 가정의 강건성을 확인하고 있다. 각 독립변수에 대하여 합동 유의성 검정을 수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든 응답 범주에 걸쳐 회귀계수가 일관되지 않다면 모형 4에서 모형

7까지 다른 회귀계수와 표준오차가 표시되었다.

〈표 3〉의 분석결과, 장병 특성 중에는 (1) 구제절차에 대한 지식, (2) 인권침해 경험, 준거집단 특성 중에는 (3) 인권교육 이수 경험, (4) 인권개선이 군 기강에 유해하다는 믿음이 평행 오즈 가정에 위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개인적 지식은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4)"와 "적극 활용하겠다(5)" 같은 긍정적 태도에 대해서만 비대칭적 효과를 가진 반면, 인권침해의 개인적 경험은 "절대 활용하지 않겠다(1)"와 "별로 활용하지 않겠다(2)" 같은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만 비대칭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준거집단 특성으로서 인권교육 이수 경험은 명확한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권개선이 군 기강확립에 부정적이라는 집단적 믿음은 권리구제 절차로서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약화시키지만, "절대 활용하지 않겠다(1)" 같은 극단적인 부정적 태도도 함께 약화시키므로 오히려 애매모호한 태도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의 종속변수는 권리구제기관 및 제도의 이용 의사이며 마찬가지로 평행 오즈 가정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일하게 평행 오즈 가정이 위배된 독립변수는 장병 특성으로서 인권침해의 경험이다. 인권침해의 개인적 경험은 오히려 피해자 장병으로 하여금 양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 즉 모형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피해 경험은 "적극 활용하겠다(5)"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모형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절대 활용하지 않겠다(1)"라고 응답할 가능성도 함께 높인다. 이는 장병의 또 다른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의 경험이 크게 좌절하거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대응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표 5〉에 제시된 분석은 사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활용 의도를 종속변수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장병 특성으로서 (1) 인권교육 이수 여부, (2) 인권침해 경험, 그리고 준거집단 특성으로서 (3) 인권교육 이수 여부 등 모두 세 개의 독립변수가 평행 오즈 가정을 위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교육 이수의 개인적 경험은 오로지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4)"와 "적극 활용하겠다(5)"라는 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나타나고, 부정적 태도인 "절대 활용하지 않겠다(1)"와 "별로 활용하지 않겠다(2)"를 예방하는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인권침해의 개인적 경험은 사법제도를 "절대 활용하지 않겠다(1)" 내지 "별로 활용하지 않겠다(2)"라는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켰으나,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긍정적 태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준거집단 특성으로서 인권교육 이수 여부는 범주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

〈표 3〉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 결과(고충처리제도)

	모형 4 (1 대 2345)		모형 5 (12 대 345)		모형 6 (123 대 45)		모형 7 (1234 대 5)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병사 특성(within effects)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지식 수준	0.188	(0.137)	0.053	(0.047)	0.187***	(0.036)	0.066†	(0.035)
인권교육 이수 경험 있음	0.415**	(0.153)	0.415**	(0.153)	0.415**	(0.153)	0.415**	(0.153)
"인권개선은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	-0.119*	(0.056)	-0.119*	(0.056)	-0.119*	(0.056)	-0.119*	(0.056)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음	-1.524**	(0.487)	-0.972***	(0.280)	-0.071	(0.190)	0.059	(0.205)
준거집단 특성(between effects)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지식 수준	-0.222	(0.151)	-0.222	(0.151)	-0.222	(0.151)	-0.222	(0.151)
인권교육 이수 경험 있음	12.397***	(3.708)	-0.814	(1.192)	1.839†	(0.969)	1.157	(1.015)
"인권개선은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	3.308*	(1.336)	0.458	(0.682)	-1.005**	(0.376)	-1.385***	(0.406)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음	-2.048*	(0.857)	-2.048*	(0.857)	-2.048*	(0.857)	-2.048*	(0.857)
통제변수								
계급: 이병				(기준집단)				
계급: 일병	-0.467**	(0.173)	-0.467**	(0.173)	-0.467**	(0.173)	-0.467**	(0.173)
계급: 상병	-0.432*	(0.175)	-0.432*	(0.175)	-0.432*	(0.175)	-0.432*	(0.175)
계급: 병장	-0.509*	(0.239)	-0.509*	(0.239)	-0.509*	(0.239)	-0.509*	(0.239)
학력: 고졸 이하				(기준집단)				
학력: 대재 또는 중퇴	0.248	(0.478)	-0.001	(0.314)	0.578**	(0.220)	-0.200	(0.217)
학력: 대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	1.736	(1.346)	-0.908*	(0.420)	0.127	(0.340)	-0.558	(0.349)
상수항								
상수	-12.264*	(5.474)	3.708†	(1.988)	3.690**	(1.252)	3.597**	(1.383)
정보통계								
사례 수				921				
클러스터 수				42				
로그우도				-1111.33				
Pseudo-R^2				0.07				

참고: 양측검정.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 결과(권리구제기관/제도)

	모형 8 (1 대 2345)		모형 9 (12 대 345)		모형 10 (123 대 45)		모형 11 (1234 대 5)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병사 특성(within effects)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지식 수준	0.170***	(0.029)	0.170***	(0.029)	0.170***	(0.029)	0.170***	(0.029)
인권교육 이수 경험 있음	0.306*	(0.145)	0.306*	(0.145)	0.306*	(0.145)	0.306*	(0.145)
"인권개선은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	-0.114*	(0.054)	-0.114*	(0.054)	-0.114*	(0.054)	-0.114*	(0.054)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음	-1.462***	(0.424)	-0.728*	(0.286)	-0.277	(0.186)	0.376†	(0.194)
준거집단 특성(between effects)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지식 수준	-0.155	(0.147)	-0.155	(0.147)	-0.155	(0.147)	-0.155	(0.147)
인권교육 이수 경험 있음	1.944*	(0.900)	1.944*	(0.900)	1.944*	(0.900)	1.944*	(0.900)
"인권개선은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	-0.758**	(0.293)	-0.758**	(0.293)	-0.758**	(0.293)	-0.758**	(0.293)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음	-0.061	(0.936)	-0.061	(0.936)	-0.061	(0.936)	-0.061	(0.936)
통제변수								
계급: 이병	(기준집단)							
계급: 일병	-0.457**	(0.167)	-0.457**	(0.167)	-0.457**	(0.167)	-0.457**	(0.167)
계급: 상병	-0.257	(0.174)	-0.257	(0.174)	-0.257	(0.174)	-0.257	(0.174)
계급: 병장	-0.488*	(0.241)	-0.488*	(0.241)	-0.488*	(0.241)	-0.488*	(0.241)
학력: 고졸 이하	(기준집단)							
학력: 대재 또는 중퇴	0.134	(0.169)	0.134	(0.169)	0.134	(0.169)	0.134	(0.169)
학력: 대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	0.048	(0.257)	0.048	(0.257)	0.048	(0.257)	0.048	(0.257)
상수항								
상수	5.381***	(1.114)	4.057***	(1.097)	2.444*	(1.099)	0.363	(1.098)
정보통계								
사례 수	931							
클러스터 수	42							
로그우도	-1144.87							
Pseudo-R^2	0.04							

참고: 양측검정.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 결과(사법제도)

	모형 12 (1 대 2345)		모형 13 (12 대 345)		모형 14 (123 대 45)		모형 15 (1234 대 5)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병사 특성(within effects)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지식 수준	0.115***	(0.028)	0.115***	(0.028)	0.115***	(0.028)	0.115***	(0.028)
인권교육 이수 경험 있음	0.404	(0.479)	-0.415	(0.315)	0.425*	(0.178)	0.423*	(0.189)
"인권개선은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	-0.101†	(0.054)	-0.101†	(0.054)	-0.101†	(0.054)	-0.101†	(0.054)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음	-2.790***	(0.619)	-0.948***	(0.277)	-0.215	(0.186)	0.230	(0.191)
준거집단 특성(between effects)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지식 수준	-0.242	(0.167)	-0.242	(0.167)	-0.242	(0.167)	-0.242	(0.167)
인권교육 이수 경험 있음	7.540*	(3.253)	-1.154	(1.295)	3.203**	(1.026)	2.736*	(1.075)
"인권개선은 군 기강확립에 나쁜 영향"	-0.575†	(0.305)	-0.575†	(0.305)	-0.575†	(0.305)	-0.575†	(0.305)
인권을 침해받은 경험 있음	0.406	(0.845)	0.406	(0.845)	0.406	(0.845)	0.406	(0.845)
통제변수								
계급: 이병				(기준집단)				
계급: 일병	-0.445*	(0.175)	-0.445*	(0.175)	-0.445*	(0.175)	-0.445*	(0.175)
계급: 상병	0.639	(0.536)	-0.601*	(0.269)	-0.531**	(0.198)	-0.211	(0.187)
계급: 병장	-0.683**	(0.230)	-0.683**	(0.230)	-0.683**	(0.230)	-0.683**	(0.230)
학력: 고졸 이하				(기준집단)				
학력: 대재 또는 중퇴	-0.207	(0.179)	-0.207	(0.179)	-0.207	(0.179)	-0.207	(0.179)
학력: 대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	2.235	(1.574)	-1.452***	(0.379)	-0.540†	(0.318)	-0.550†	(0.330)
상수항								
상수	0.932	(2.559)	6.877***	(1.308)	1.932†	(1.136)	0.070	(1.165)
정보통계								
사례 수				931				
클러스터 수				42				
로그우도				-1109.27				
Pseudo-R^2				0.06				

참고: 양측검정. † p<0.1, * p<0.05, ** p<0.01, *** p<0.001.

결론적으로 강건성 검정은 몇몇 관심변수들이 비례 오즈 가정을 위배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차이는 단지 분석결과에 뉘앙스를 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V. 논의 및 결론

Goffman(1961)의 표현에 따르면 군대는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사회적 통제가 극대화된 총체적 기관이다. 이곳에서 인권은 병영 안에서 쉽사리 유보되고 인권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역시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기 쉽다. 이는 한국사회의 생활세계 구석구석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민주주의적 가치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늘날 현실과 큰 대비를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인권의식 결정요인이나 인권침해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실증 연구가 아직 드물고, 군인이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어떤 행동 의도를 갖는가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군 장병의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에 관한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특히 장병의 특성뿐 아니라 장병 개인이 속한 준거집단 부대의 특성이 구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발견이다. 장병 개인 수준에서 구제절차에 대한 지식과 인권교육 이수 경험, 인권개선과 군 기강확립 사이에 관한 긍정적인 믿음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준거집단 차원에서 인권교육 이수한 이들과 인권개선과 군 기강확립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믿는 이들이 많이 복무해야 장병 개개인 역시 보다 높은 권리구제 행동 의도를 가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침해에 따른 군인의 권리구제 수단의 이용 의사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특히 장병의 특성뿐 아니라 장병이 속한 준거집단의 특성이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발견이다. 장병 개인 수준에서 구제절차에 대한 지식과 인권교육 이수 경험, 인권개선과 군 기강확립 사이에 관한 긍정적인 믿음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준거집단 차원에서 인권교육 이수한 이들과 인권개선과 군 기강확립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믿는 이들이 많이 복무해야 장병 개개인 역시 보다 높은 권리구제 행동 의도를 가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사람들은 한 번쯤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응전략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피해 규모와 적극적 대응전략의 사이의 비례성이다. 그러나 기존 문헌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장병 본인이 인권침해의 경험 여부가 권리구제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측

면에서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만일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가 그들의 신체와 정신뿐 아니라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군조직에 대해 좌절하게 한다면 피해자들은 인권침해의 구제를 아예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피해자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애초에 문제 제기를 시도하고 헛된 소란을 일으킬 바에야 그저 참고 견디겠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둘째, 인권침해가 준거집단 수준에서 만연하다면 장병 개인으로서도 이는 군인이라면 대체로 누구나 겪는 일로 여겨 인권침해의 평범성(banality)을 수용하기 쉬워질 수 있다. 즉 준거집단 부대에서조차 인권침해가 흔한 일이라면, 자신 역시 권리구제를 쉽게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구제 행동 의도 역시 낮아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준거집단 부대에서 인권침해가 드문 일이라면 인권침해는 높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구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총체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장병의 인권침해에 관한 인식과 구제 행동은 본인의 태도와 속성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준거집단에서의 평균적인 태도와 속성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 정책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개입은 최소한 준거집단 부대 차원에서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준거집단 상황과의 불일치는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 또는 감소시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또 다른 특이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이병에 비해 상위 계급에서 오히려 권리구제 행동 의도가 낮다는 점이다. Black(1976)에 따르면 높은 지위와 계급은 더 많은 법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이와는 반대되는 셈이다. 추측건대 군의 맥락에서는 대체로 계급이 높아질수록 어차피 전역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구제 행동의 비용에 비해 구제 행동의 남은 편익은 감소하기 때문일 것이다. Hirschman(1970)의 용어를 빌리면 충성(loyalty)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급이 높아질수록 목소리(voice)보다 이탈(exit)의 유인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 가운데 하나는 인권침해의 개별적인 사건 또는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장병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았다는 것이다. 인권침해를 연구할 때, 한 사람에게 반복적인 인권침해의 에피소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또한 장병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정하여 남녀를 모두 포함한 군 간부의 경우로 일반화될 수 없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준거집단의 식별과 관련하여 측정에도 한계는 있었다. 비록 자료에 기반하여 모형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준거집단 부대 기준을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이것이 군 장병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인지된 준거집단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점도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의도를 넘어 실제 권리구제 행동을 조사하되, 특히 대응전략 연구(Gruber, 1989; Knapp et al, 1997)처럼 넓은 스펙트럼에 걸친 행동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장병들은 인권침해에 직면하였을 때 이 연구가 검토한 것과 같이 공식적인 권리구제가 아니라, 부인(denial), 자기 비난(self-blaming), 교섭(negotiation), 환상적 통제(illusionary controls), 재명명(relabeling) 등 개인적이거나 심지어 태업(sabotage)과 같이 폭력적·부정적인 대응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과 행동 자체가 향후 중요한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철. “군인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2020), pp. 121-157.

김경필·이수진. “한국 군 사법제도 재생산의 정치학: 노무현,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집 제4호(2020), pp. 89-106.

김용주. 『제복을 입은 국민의 군대: 독일연방군 운영철학』 (황금알, 2012).

김의식. “군대내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28권(2019), pp. 201-229.

김형남. 『군, 인권 열외: 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 (휴머니스트, 2022).

김형래. “메타(Meta)분석에 의한 병사 자살위험요인 연구.” 『국방정책연구』 32권(2016), pp. 189-220.

나달숙. “여군 인권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군의 인권전반과 차별의 인식 및 실태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집 제3호(2020), pp. 165-192

손진희. “군인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9집 제1호(2016), pp. 51-73.

심성은.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제98호(2021).

안현의·손난희·이문희·서은경. “군복무 부적응 실태 및 인권침해 경험과의 관련성.” 『상담학연구』 제8집 제2호(2007), pp. 425-435.

오윤성. “장병 인권침해 감소를 위한 군 인권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집(2008), pp. 247-291.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2008), pp. 79-109.

이자연. “군 초급간부의 인권실태와 구제방안.” 『고려법학』 제90호(2018), pp. 385-420.

이재민. “육군 병사의 성(性)적침해 인식이 인권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2022), pp. 203-218.

전누리. “군 인권교육의 방향성 연구 - 역할극 활용을 중심으로 -.” 『한국 예술문화연구』 제2권 제2호(2022), pp. 137-155.

정인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군장병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2007), pp. 35-62.

정진성·노성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 『통계연구』 제23권 제4호

(2018), pp. 68-93.
홍성주·황의갑·김주희.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제59권(2019), pp. 161-188.
홍세은. “대학생의 인권침해 및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경찰학연구』 제22권 제3호(2022), pp. 297-324.

Black, Donald J. *The Behavior of Law* (New York:Academic Press, 1976).
Fullerton, Andrew. S. A. “Conceptual framework for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Vol. 38, No. 2(2009), pp. 306-347.
Enders, Craig K. & Davood Tofighi. “Centering predictor variables in cross-sectional multilevel models: A new look at an old issue.” *Psychological Methods* Vol. 12, No. 2(2007), pp. 121-138.
Goffman, Erving.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Anchor Books, 1961).
Hirschman, Albert O.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James E. Gruber. & Lars Bjorn. “Women's responses to sexual harassment: an analysis of sociocultural, organizational and personal resource model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67, No. 4(1986), pp. 814-826.
Knapp, Deborah Erdos., Robert H. Faley., Steven E. Ekeberg. & Cathy L. Z. Dubois. “Determinants of Target Responses to Sexual Harassment: A Conceptual Frame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2, No. 3(1997), pp. 687-729.
Merton, Robert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279-334.
Sjoberg, Gideon., Elizabeth A. Gill. & Norma Williams. “A Sociology of Human Rights.” *Social Problems* Vol. 48, No. 1(2001), pp. 11-47.
Stouffer, S. A., Suchman, E. A., DeVinney, L. C., Star, S. A., & Williams, Jr. R. M. *The American soldier: Vol. I. Adjustment during army life*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9).
Wallace, Jean E. & Jane Lemaire. “Physician Coping Styles and Emotional

Exhaustion." *Industrial Relations* Vol. 68, No. 2(Spring 2013), pp. 187-209.
Williams, Richard.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generalized ordered logit models."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Vol. 40, No.1(2016), pp. 7-20.

The Determinants of Willingness to Take Remedy Action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Hyun Woo Kim

Keywords

Human rights violation, Remedy actions, Military servicepersons, Reference group, Armed forces and society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have arbitrarily downplayed the scope and criteria of human rights for military servicepersons and have shown less enthusiasm in making progress in this area compared to other societal sectors. Similarly, little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military servicepersons' awareness of human rights or how they respond when these rights are violat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willingness to take action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mong military servicepersons. The cor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uch remedy actions are influenced not only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also by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reference groups in which individual servicepersons are embedded. Contrary to expectations based on the behavior-of-law literature, the rank within the armed forces is foun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willingness to take action. Additionally, contrary to predictions from the coping strategies literature, individual experie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did not lead to a greater willingness to take remedy actions. The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garding remedy action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re also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military sociology.

[논문투고일 : 2023. 10. 30.]
[심사의뢰일 : 2023. 11. 20.]
[게재확정일 : 2023. 12. 6.]

저자약력(게재순)

변정욱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산업조직론, 게임이론, 미시경제학 이론을 국방, 안보, 방위산업, 정보통신 분야에 응용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신속시범획득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9권 제1호(2022), “동태적 군축: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국방연구』 제61권 제4호(2018)등의 논문이 있다.

E-mail : jwbyun68@hanmail.net

이준배

현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고려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미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학위 취득 이후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 구직활동을 경제학적 게임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표 저작으로 “Ranking and Search Effort in Matching.”『Economic Theory』 Vol. 75.(2021), “Role of common preferences in the outcome of many-to-many matching.”『Economics Letters』 Vol. 217.(2022) 등이 있다.

E-mail : joonbaelee@korea.kr

고상두

1981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1996년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슬라브학회장, 한국정치정보학회장, 세계정치학회 연구분과위원장(RC42), 연세-SERI EU센터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동북아 지역영향과 한국의 대러전략 및 과제”『슬라브학보』 38집 2호(0000), 등의 논문과『한러관계 30년 성찰과 비전』 등의 공저

가 있다.

E-mail : stko@yonsei.ac.kr

박창건

1994년 경남대학교 법학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1995-1997년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국제협력연구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0-2005년 영국의 University of Sheffield 동아시아학부 일본학과에서 *The significance of Japan's collaborative leadership role in promoting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으로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후 경남대학교 강의교수,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2017년부터 국민대학교 일본학과에 재직 중이다. 현재 경북일보 객원칼럼위원,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지경학의 연결성으로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Post-2028년을 대비하는 한일 양국의 입장과 중국 변수." 『국제정치논총』 제62집 3호(2022), "중일 대륙붕 경계획정의 정치적 함의: 춘샤오/시라카바석유가스전 공동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5집 2호(2022/공저) 등의 논문과 『위기 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 금융위기, 질서 변환, 중견국 경제외교』 (2020) 등의 공저가 있다.

E-mail: cgpark77@kookmin.ac.kr

채첩

2014년 길림사범대학교(吉林师范大学) 중어중문학과(汉语言文学)를 졸업하였고 2023년 고려대학교에서 문학 박사(중일 지역·비교문화 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중국 닝보대학교(宁波大学) 동해연구원(东海研究院)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공저)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중국 변수의 비교연구: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 vs.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 『국가전략』 제29권 제2호(2023), "일본 해양기본법 도입과 아베 내각의 제3차 해양기본계획에 관한 일고찰." 『국제학논총』 제32집(2020) 등의 논문이 있다.

E-mail : caijie23456@naver.com

윤광일

1992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학사과정, 199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졸업 후 공군사관학교 법정과 전임강사를 거쳐 2010년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2011년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고, 그들은 어떤 대북정책 선호를 가지는가." 『한국과 국제정치』 38권 4호 (유지영 공저 2022),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Korea Observer Vol. 51, No. 2 (2020) 등의 논문이 있다.

E-mail : kiyoon@sookmyung.ac.kr

부형욱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美 버지니아 텍(Virginia Tech)에서 공공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종대와 국방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지냈고, 청와대 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국방현안팀장, 국방전략연구실장 및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역임하였다. 이외에 민주평통 상임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술로는 『국제 안보환경의 도전과 한반도』 (2023, 공저), 『코로나 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2022, 공저),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 (2021, 공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2021, 공저),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2016, 공저) 등이 있다. 최근 저술로는 「아시아적 확장억제 모델의 향배」 (2023),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핵질서의 변화」 (2023) 등이 있다.

E-mail : soyareen@gmail.com

이강경

1998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문학사)하였고, 2007년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에서 이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3년 유엔 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 합동군수지원센터(JLOC)에서 군 참모장교로 근무하였으며 육군군수사령부, 시험평가단, 15보병사단 등 정책부서와 야전부대에서 근무하였다. 2018년 합동참모대학 합동고급과정을 수료하였고 2021년 충남대학교에서 군사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현재 육군3사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군사학도로서 주요 관심분야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국제정치, 동북아 안보, 국제평화활동, 국방 연구개발 등이며 주요 연구업적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동인에 관한 전망이론적 분석”(2018), “중국 핵전략 변화의 군사적 함의 고찰”(2019), “한일 GSOMIA의 군사적 함의 고찰”(2020),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202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고찰: 케네스 왈츠의 3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2022),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 고찰”(2023), “한·미 상호운용성 강화방안 고찰”(2023), “NATO 전략개념의 변화요인 고찰: 길핀의 국제체제 변화이론을 중심으로”(2023) 등이 있다.

E-mail : kangkyonglee@hanmail.net

김현우

2017년에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Edna Bennett Pierce Prevention Research Center에서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조교수로 근무하였다. 2021년 귀국하여 현재까지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이론, 집단행동과 사회운동, 전산사회과학, 응용통계학 등이다. *Social 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ocial Currents*, 『한국사회학』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였다.

E-mail : hxk271@cbnu.ac.kr

연구소 소식

◆ 제13차 국방대-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동국제학술세미나

- 일자 : 2023.10.4.
- 장소 :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 안보문제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한국해양전략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및 MOU 체결식

- 일자 : 2023.10.13. ~ 10.14.
- 장소 : 제주평화연구원 1층 세미나실

◆ 2023년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 일자 : 2023.10.20.
- 장소 : 서울 로카우스 호텔
- 공동주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문제연구소,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 주제 : 주요국의 미래전 준비와 한국의 미래전 전략

◆ 2023년 제7차 RINSA 세미나 (방문학자 및 저명인사 초청세미나)

- 일자 : 2023.10.26.
- 장소 :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세미나실)
- 주제 : 이라스엘-하마스 분쟁을 통해 본 남북 9.19 합의 재평가
- 발표자 :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
  김태현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토론자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이철재 (중앙일보 군사연구소 소장)
- 사회자 :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

◆ 2023년 제8차 RINSA 세미나 (방문학자 및 저명인사 초청세미나)

- 일자 : 2023.10.30.
- 장소 :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 세미나1실
- 주제 : 군 원로들이 제언하는 한국 안보전략

- 발표자 : 한창호 (전,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전략과 본질과 신국방전략 기획“
  정호섭 (전, 해군 참모총장), "국방개혁 4.0과 한국해양안보“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 "북핵 미사일 위협대응 전략"
- 토론자 : 이숙연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이수훈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 사회자 :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

◆ 2023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최종발표회

- 일자 : 2023.11.3.
- 장소 : 서울 로카우스 호텔
- 주제 : 범국민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 발표자

  류동원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와 안보정책적 함의
  유상범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인식변화와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김태현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국민들의 대북인식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이춘주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교수),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인식변화와 군신뢰도 제공방안”
  김동삼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교수),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에 대한 국민인식변화와 정책적 함의”
- 토론 : 국방부 정책 실무자(10명)
- 총괄 : 안준형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사회 : 박국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안보전략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업무협약식

- 일자 : 2023.11.8.
- 장소 :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 세미나1실

◆ 2023년 제9차 RINSA 세미나 (방문학자 및 저명인사 초청세미나)

- 일자 : 2023.11.8.
- 장소 :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 세미나1실

- 주제 : 〈통일의식조사〉로 보는 통일인식
- 발표자 :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토론자 : 안경모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북한문제연구센터장)
  안준형 교수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사회자 :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

『국방연구』 편집 요강

공모 논문의 심사

가. 공모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 논문 접수(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접수)
※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 제출

(2) 편집위원회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회부 결정
※ 제목 및 내용이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함.

(3) 논문심사 의뢰(심사는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인이 선정한 심사자 3인)

(4)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심사 판정

(5) 최종 판정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

(6) 논문게재 시 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을 각 논문 후미에 게재

나. 공모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자 수, 심사방법, 심사기한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교내외 심사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투고논문의 심사자를 추천하되, 가능한 교외 전문가가 심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특히,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교내의 저자일 경우에는 교외 심사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3인에게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자문위원회 회의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한 후 시행하며, 심사과정 혹은 회의과정에서 편집간사는 필요한 경우 논문상 저자를 추측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

(4) 논문의 심사는 각 호별 최종마감일 이후 시행하며, 마감일 이후 4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투고 및 집필요령

I. 투고 안내

1. 보내실 글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순수 창작물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하고, 학술성과 시사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한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에 기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 귀속된다.
4. 기고논문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요약(400자 내외) 및 핵심어(5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정보(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6.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본문과 각주에는 저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한다.
7.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8. 논문제출 시 논문유사도 검사후, 검사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이메일 rinsakj@kndu.ac.kr로 제출해야 한다.

II.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용지 17~18매)로 한다. 분량 계산은 <흔글>의 문서정보-문서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3행 이상일 때는 본문과는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 활자보다 1포인트 작게 한다.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引用源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引用源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나. 각주 작성요령

1) 저서

가) 황병무. 『전쟁과 평화의 이해』 (서울: 오름, 2001). p. 302.

나) Bose, Partha. *Alexander the Great's Art of Strategy* (New York : Gotham Books, 2003), p. 98.

2) 논문

가) 남궁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4호(2003), pp. 7-30.

나) Nye, Joseph S.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Winter 1999), p. 21.

3) 편저서

가) 이홍구. "마르크스와 정치이론." 이홍구(편). 『마르크시즘 100년』(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p. 120.

나) Strange, Susan.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277.

4) 번역서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5) 학위논문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 25-26.

6)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7)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가) 황병무(2001), p. 300.
나) Bose(2003), p. 90.
다) 남궁곤(2003), pp. 25-28.
라) Nye(1999), p. 27.

8) 인터넷 자료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http://www.dic.mil/jcs/core/nms.html (검색일: 2005. 5. 4).

9)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일보』 (2003. 4. 19).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Weekly Review.* May 3, 2002, p.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제외한다.

Ⅲ.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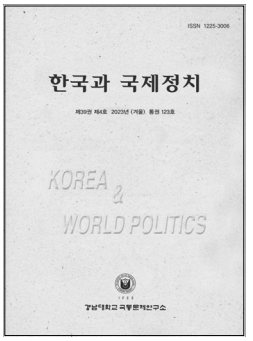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서 쓰고, 그 다음 번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2.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3.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통계연감」(1985), pp.1-2.

4. 본문 속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 제목 우측 상단에 별도의 각주표시로 기재할 수 있다.
6.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 심사 후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1)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2) 저자 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3)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4) 200단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5)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4호, 2023년(겨울) 통권 123호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입니다.

- 초광역적 공간전략의 정치경제: 메가시티 구상의 의의와 과제를 중심으로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미중 데탕트와 주한미군
  류인석(대한민국 육군, 외교학 박사)
- 역사적 기억의 외교적 활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러 '축전외교'
  이상우(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김연철(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 국회 불신의 거시적 결과와 미시적 기초: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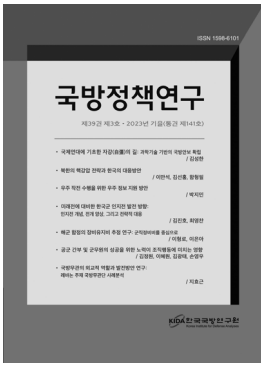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발 간 일: 3/ 6/ 9/ 12월 말일 (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최대 150매 이하)
- 원고접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
  전화: 02) 3700-0708
  온라인투고: 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국방정책연구

제39권 제3호·2023년 가을(통권 제141호)



-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自彊)의 길: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안보 확립 / 김성한
- 북한의 핵강압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만석, 김선홍, 함형필
- 우주 작전 수행을 위한 우주 정보 지원 방안 / 박지민
-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 인지전 발전 방향: 인지전 개념, 전개 양상, 그리고 전략적 대응 / 김진호, 최영찬
- 해군 함정의 장비유지비 추정 연구: 군직정비비를 중심으로 / 이형로, 이은아
- 공군 간부 및 군무원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 김정원, 이혜원, 김광태, 손영우
- 국방무관의 외교적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 레바논 주재 국방무관단 사례분석 / 지효근

▌『국방정책연구』 원고모집 안내 ▐

『국방정책연구』는 국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다룬 논문과 연구 자료를 수록하는 전문학술지로서 2008년 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 ☑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인 글은 기고할 수 없으며, 순수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 ☑ 기고된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 투고방법: 『국방정책연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jdpskida.co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심사용 파일 올리기
- ☑ 원고접수 마감: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 ☑ 전화: (02) 961-1291 / e-mail: jdps@kida.re.kr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통일연구원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관련 연구자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기획논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전략적 함의와 향후 전망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와 향후 과제/ 전재성
캠프데이비드 선언: 미국의 외적 균형과 중국의 내적 균형 전략 경쟁의 결과/ 주재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과 한국 외교의 과제/ 박인휘
북러 군사협력 논의와 평양의 지향점: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도전/ 황일도

■ **일반논문:** 주체사상의 형성과 정치적 기능/ 오경섭
북한의 권력 엘리트 조용원의 부상과 역할 변화 연구/ 이준희
김정은 집권 이후 자연보호구 정책의 특징/ 오삼언·박소영
공급망 질서 재편과 통일한국 첨단제조 미래구상/ 김호철

『통일정책연구』 원고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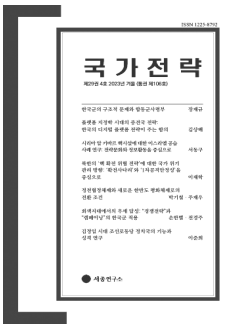
▶ 기고할 논문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원고매수는 국문 원고지 120매 내외입니다.

▶ **문의 및 제출처**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nu.or.kr) 및 http://kinu.jams.or.kr 공지사항 내 제출양식 및 기획주제 등 공지
- 논문원고는 http://kinu.jams.or.kr 회원가입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 kinups@kinu.or.kr, 전화 02)2023-8072, 팩스 02)2023-8298로 연락바랍니다.

▶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 가 전 략

제29권 4호, 2023년 겨울호 [통권 제106호]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창간되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략과 정책 및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정세 분석과 주요 국가 연구 등의 주제를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와 합동군사령부/ 장재규
- 플랫폼 지정학 시대의 중견국 전략: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이 주는 함의/ 김상배
- 시리아 알 키바르 핵시설에 한 이스라엘 공습 사례 연구: 전략문화와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서동구
- 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에 대한 국가 위기관리 방향: '확전사다리'와 '1차공격안정성'을 중심으로/ 이재학
- 정전협정체제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조건/ 박기철·주재우
- 회색지대에서의 우세 달성: "경쟁전략"과 "캠페이닝"의 한국군 적용/ 손한별·전경주
- 김정일 시대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기능과 성격 연구/ 이준희

『국가전략』 원고모집

⦿ 보내실 글은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 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구소의 편집방향과 편집기준에 따라서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 상황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보내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분량으로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원고와 더불어 '400자 내외' 한글 요약문, '200 단어'의 영문 요약문과 국·영문 핵심어 3~5개를 작성하여 투고자의 연락 주소, 전화/휴대폰,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원고는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dbpiaone.com/sjr/index.do)에 **회원가입** 후 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국가전략』 편집위원회

E-mail: nationalstrategy@sejong.org 전화: 031-750-7615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ume 66, Number 4, December 2023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2
9 771229 359804
ISSN 1229-3598